

2021

기획연구 2021-03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 (Ⅱ)

연구진 이수인 · 조경옥 · 이주연 · 전희진 · 전아람

Jeonbuk Institute



기획연구 2021-03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I)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이수인	소장	연구총괄, 제1장, 5장(1절, 2절)
공동연구	조경옥	선임연구위원	제3장 5절, 5장 3절
	이주연	연구위원	제2장, 3장, 4장
	전희진	부연구위원	제2장, 3장, 4장
	전아람	전문연구원	제2장, 3장

자문위원	이혜숙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엄영숙	전북대학교 교수
	김혜경	전북대학교 교수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조선희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장/ 성평등 플랫폼 소장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
	서미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임현선	미래 여성커리어 협동조합 이사

연구관리 코드 : 21GI0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나. 연구내용	4
제2절 연구 방법 및 절차	6
가.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6
나. 조사계획	6
다. 포럼 및 전문가 자문	7
라. 연구 추진 절차	7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8
 제2장 전북 여성·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9
제1절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13
가. 여성대표성과 의사결정	13
나.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및 지원	17
제2절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25
가.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 지역사회 조성	25
나. 사회적 약자 위한 건강·보건 시스템 구축	35
제3절 일·생활균형 기반 조성	43
가. 노인·아동 대상 지역 기반 돌봄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	43
나. 성평등한 일자리	52
다. 일·생활 균형 기반	59

제3장 전라북도 도정 현황 분석	65
제1절 전북도의 조직 및 인력 현황	67
가. 전북도 전반의 조직 현황	67
나. 2021년 복지여성보건국 및 여성청소년과 조직·인력 현황	69
다. 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 추진부서 인력 현황	71
제2절 전북도의 예산 전반의 현황	78
가. 2021년 전북도 전반의 예산	78
나. 2021년 복지여성보건국 예산 현황	78
제3절 전북도의 도정 방향 및 역점 시책	80
가. 2021년 도정 운영 방향	80
나. 2021년 도정 역점 시책	82
제4절 전북 도정 현황의 특성	84
제5절 전북 도정 성평등 관점의 과제	85
 제4장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실현방안	 89
제1절 전북 도민의 인식 변화와 특성	91
제2절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96
제3절 인권 존중의 안심공동체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119
제4절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149
 제5장 결론	 173
제1절 전북 도민이 희망하는 미래상	175
제2절 전북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실천방안	176
제3절 전북 여성·가족 미래비전 중점과제	181
 참고문헌	 183

표목차 | Contents

〈표 1-1〉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 도출된 3대 정책목표, 10대 추진전략 … 5

〈표 2-1〉 미래 트렌드로 본 전북의 여건과 변화	11
〈표 2-2〉 지역 성평등지수 의사결정의 지역별 현황	13
〈표 2-3〉 여성공무원 및 여성관리직(5급 이상) 현황	13
〈표 2-4〉 여성위원 참여율	14
〈표 2-5〉 관리직 근로자	14
〈표 2-6〉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현황	15
〈표 2-7〉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16
〈표 2-8〉 여성이 조직 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17
〈표 2-9〉 전라북도 가족형태별 가구 추이	18
〈표 2-10〉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성별 현황(2017)	19
〈표 2-11〉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 추이 변화(2007~2017)	19
〈표 2-12〉 가사분담 실태	19
〈표 2-13〉 성별 가사노동 시간	20
〈표 2-14〉 항목별 의사결정 주체	20
〈표 2-15〉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21
〈표 2-16〉 가족 내에서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23
〈표 2-17〉 지역성평등지수 정책영역별 성평등 점수 및 순위	23
〈표 2-18〉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중요한 정책	24
〈표 2-19〉 전국 시·도별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2019)	26
〈표 2-20〉 전국과 전북의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및 피해아동 발견율	26
〈표 2-21〉 연도별 전국과 전북의 맞벌이 가구 수와 비율	27
〈표 2-22〉 연도별 이혼건수 및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 현황(200-2020)	28
〈표 2-23〉 전국 시·도별 조손가구 수 및 비율(2019)	29
〈표 2-24〉 전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2015-2019)	31
〈표 2-25〉 사회적 약자의 권익 및 안전 영역 전문가 FGI 주요 내용 재정리	31
〈표 2-26〉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33
〈표 2-27〉 전라북도 아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	34
〈표 2-28〉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37
〈표 2-29〉 의료서비스 미치료를	37

〈표 2-30〉 주관적 만족도 및 삶에 대한 만족도	38
〈표 2-31〉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및 불안원인 (2018년)	39
〈표 2-32〉 범죄위험에 대한 두려움 (2018년)	39
〈표 2-33〉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2018년)	39
〈표 2-34〉 성역할 태도	40
〈표 2-35〉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41
〈표 2-36〉 응답자 연령별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42
〈표 2-37〉 전북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8)	44
〈표 2-38〉 전북 연령별 및 성별 1인가구 현황	44
〈표 2-39〉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연령별 치매환자수 (2018)	46
〈표 2-40〉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상태	47
〈표 2-41〉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	51
〈표 2-42〉 전국 및 전라북도 취업자의 성별 산업 분포	52
〈표 2-43〉 산업분류별 전라북도 남성 대비 여성 종사자 비율	53
〈표 2-44〉 지역 성평등지수 경제활동 지역별 현황	54
〈표 2-45〉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2018)	54
〈표 2-46〉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 (2018)	55
〈표 2-47〉 구직활동 시 어려움	56
〈표 2-48〉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57
〈표 2-49〉 전국 및 전북 2019년 일·생활 균형 지수	59
〈표 2-50〉 전국 및 전북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59
〈표 2-51〉 전국 및 전북 휴가 사용률과 휴가 일수 현황	60
〈표 2-52〉 전국 및 전북 육아휴직 이용자 현황	61
〈표 2-5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현황	62
〈표 2-54〉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지원	63
〈표 3-1〉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의 인력 현황(2021년 1월 기준)	70
〈표 3-2〉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인력 현황(2021년 1월 기준)	70
〈표 3-3〉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인력 현황(2021년 1월 기준)	72
〈표 3-4〉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인력 현황(2021년 1월 기준)	74
〈표 3-5〉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인력 현황(2021년 1월 기준)	75
〈표 3-6〉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인력 현황(2021년 1월 기준)	76
〈표 3-7〉 광역도차원의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추진부서 현황(2021년 11월 기준)	77
〈표 3-8〉 역점 시책별 세부 계획	83

〈표 4-1〉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여성정책과 여성 역량 강화 1	98
〈표 4-2〉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여성정책과 여성 역량 강화 2	100
〈표 4-3〉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여성정책과 여성 역량 강화 3	102
〈표 4-4〉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성인지적인 문화예술 관광거점 육성 1	104
〈표 4-5〉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성인지적인 문화예술 관광거점 육성 2	106
〈표 4-6〉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성인지적인 문화예술 관광거점 육성 3	107
〈표 4-7〉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성평등 가족문화와 다양한 가족지원 1	109
〈표 4-8〉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성평등 가족문화와 다양한 가족지원 2	111
〈표 4-9〉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1	114
〈표 4-10〉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2	116
〈표 4-11〉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3	118
〈표 4-12〉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1	121
〈표 4-13〉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2	124
〈표 4-14〉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3	129
〈표 4-15〉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4	131
〈표 4-16〉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1	133
〈표 4-17〉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2	135
〈표 4-18〉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3	138
〈표 4-19〉 아동·청소년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사례	140
〈표 4-20〉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4	141
〈표 4-21〉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1	143
〈표 4-22〉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2	144
〈표 4-23〉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3	146
〈표 4-24〉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4	148
〈표 4-25〉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지역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 1	151
〈표 4-26〉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지역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 2	153
〈표 4-27〉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지역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 3	155
〈표 4-28〉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신성장동력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1	157
〈표 4-29〉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신성장동력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2	159
〈표 4-30〉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신성장동력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3	161
〈표 4-31〉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신성장동력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4	163
〈표 4-32〉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1	165
〈표 4-33〉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2	167
〈표 4-34〉 마을기업 관련 용어들의 정의	168

〈표 4-35〉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3	169
〈표 4-36〉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4	171
〈표 5-1〉 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전략별 추진과제 및 향후과제	178
〈표 5-2〉 목표 2. 인권 존중의 안심 공동체-전략별 추진과제 및 향후과제	179
〈표 5-3〉 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전략별 추진과제 및 향후과제	180
〈표 5-4〉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I)의 중점 과제	181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2-1〉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3대 정책목표	12
〈그림 2-2〉 비전 체계도	12
〈그림 2-3〉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22
〈그림 2-4〉 전국 시·도별 한부모가구 수와 비율(2019)	28
〈그림 2-5〉 전국 시·도별 기초생활수급 수혜 청소년 수와 비율	30
〈그림 2-6〉 시·도별 가출고민·가출경험 및 소년범죄자 비중(2018)	30
〈그림 2-7〉 성별에 따른 유병률	35
〈그림 2-8〉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율	36
〈그림 2-9〉 성별에 따른 우울감 경험률	36
〈그림 2-10〉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2020)	43
〈그림 2-11〉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8년)	44
〈그림 2-12〉 전북 여성 1인가구의 도시-농촌 간 구성비 비교(전주시vs임실군)	45
〈그림 2-13〉 전북 여성노인과 노인여성의 기초생활수급 비율 연도별 비교	45
〈그림 2-14〉 전북지역 아동의 공적 돌봄 이용률	47
〈그림 2-15〉 전북 시군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필요도	48
〈그림 2-16〉 전북 학년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필요도	48
〈그림 2-17〉 전북 학년별 돌봄서비스 필요시간	49
〈그림 2-18〉 전북 학년별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	49
〈그림 2-19〉 시도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현황	61
〈그림 3-1〉 전라북도청 직속기간 및 사업소 현황	67
〈그림 3-2〉 전라북도청 조직 현황	68
〈그림 3-3〉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조직 현황	69
〈그림 3-4〉 강원도 조직 현황	72
〈그림 3-5〉 전라남도 조직 현황	73
〈그림 3-6〉 충청남도 조직 현황	75
〈그림 3-7〉 충청북도 조직 현황	76
〈그림 3-8〉 2021년 전라북도 분야별 예산 현황	78
〈그림 3-9〉 2021년 일반회계의 복지여성보건국 국·도비 및 과별 예산 현황	79
〈그림 3-10〉 2021년 전라북도 도정 운영 방향	81
〈그림 4-1〉 제주특별자치도 조직도, 성평등정책관	98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연구 방법 및 절차
 3. 연구의 기대효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 디지털 혁명과 코로나 위기는 가치관과 관계의 변화, 노동과 돌봄 방식의 변화를 야기하며 삶의 양식 자체에 대한 변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라북도 여성의 역량과 역할의 확장 및 사회적 인식 확대로 연결되고 이는 사회전반의 성인지성 제고와 성평등에 대한 요구의 증대로 귀결된다. 따라서 여성 및 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도정의 전반적 영역을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비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본 계획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추진한 종합적, 장기적인 성격의 과제로서 미래비전 전략 수립이 목적이므로 정책방향 진단과 목표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등이 도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계획수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1차와 2차년도 과제로 구분하여 미래비전 전략과제를 연구하였다.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은 도민대상(601명) 설문조사와 여성·가족분야 전문가 대상의 집단면접을 통하여 전라북도민이 바라는 여성·가족분야의 미래상, 삶의 전환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이 만들어가는 인권, 존엄, 소통의 풍요로운 전북”이라는 미래비전과 이를 위한 3대 정책목표와 10대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 한편, 본 과제는 전라북도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여성가족 분야의 미래비전 수립과 함께 전북도정의 성주류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
- 따라서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제안한 3대 정책목표, 10대 추진전략에 의거해 각 부서의 2021년도 정책목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서별 세부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본 계획은 전라북도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계획 상의 여성 및 가족 등과 관련된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전라북도 여성 및 가족 발전계획의 비전과 구상을 제시하고, 양성평등기본계획상의 한계 틀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전라북도정의 성주류화와 여성·가족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과제에서 도출한 3대 정책목표, 10대 추진전략에 의거해 전라북도 각 행정 부서별 2021년도 정책 목표·내용·사업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서별 세부 과제와 필요한 핵심 사업을 제안하고자 했다.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 서론은 연구 필요성과 목적,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과 조사계획 및 기대효과, 그리고 연구추진 절차를 제시하였다.
- 제2장에서는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의 근간이 되는 전북 도민의 가치관, 관계의 변화, 노동과 돌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검토하였다.
 - 1차년도에 도출된 여성·가족 미래비전은 “여성이 만들어가는 인권, 존엄, 소통의 풍요로운 전북”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정책목표는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인권존중의 안심공동체, 일·생활 균형기반 조성이었다.
 - 3대 정책 목표별 추진전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1) 도출된 3대 정책목표, 10대 추진전략

목표	추진전략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여성정책과 여성역량 강화
	성인지적 문화예술, 관광 거점 육성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과 다양한 가족지원
	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인권 존중의 안심 공동체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아동·청소년 성장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보건 시스템 구축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디지털 돌봄 및 지역 기반 돌봄 체계 구축
	신성장 동력 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 제3장에서는 인식 변화와 삶의 양식 변화를 짚는 시작점부터 성인지적이고 성평등한 관점에서 도정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였고 그에 기반하여 전북도정의 성평등 관점에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제4장에서는 전라북도 2021년 업무계획서 등의 업무 전반의 행정 자료를 검토하여 행정 각 부서의 정책목표와 과제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세부 과제와 사업에 대한 개선안과 향후 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성주류화를 위한 거버넌스, 즉 학계 전문가, 여성단체활동가, 여성계 주요 대표들, 여성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관련된 전라북도 부서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실시하였고,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3대 정책목표와 10대 추진전략별 세부 개선 방안 및 향후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학계 전문가, 주요 여성단체활동가, 여성계 주요 대표들, 여성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관련된 전라북도 부서 담당공무원, 여성도민 등이 참여하여 성 주류화와 여성·가족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된 각 분야의 여성·가족 관련 정책목표별 세부

과제와 이를 실행할 추진체계 등을 모색하고 제언하였다.

-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전북도 정의 성주류화를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가.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 관련 문헌, 정책자료, 타 시도의 여성·가족 관련 미래비전 연구 보고서, 행정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 및 분석하였다.
- 다음으로 전라북도 2021년도 도정 및 젠더관점에서의 각 행정부서별 업무 분석을 하기 위해 전라북도 행정정책자료(2021년 업무계획서 등), 성별영향평가 사업 및 성인지 예산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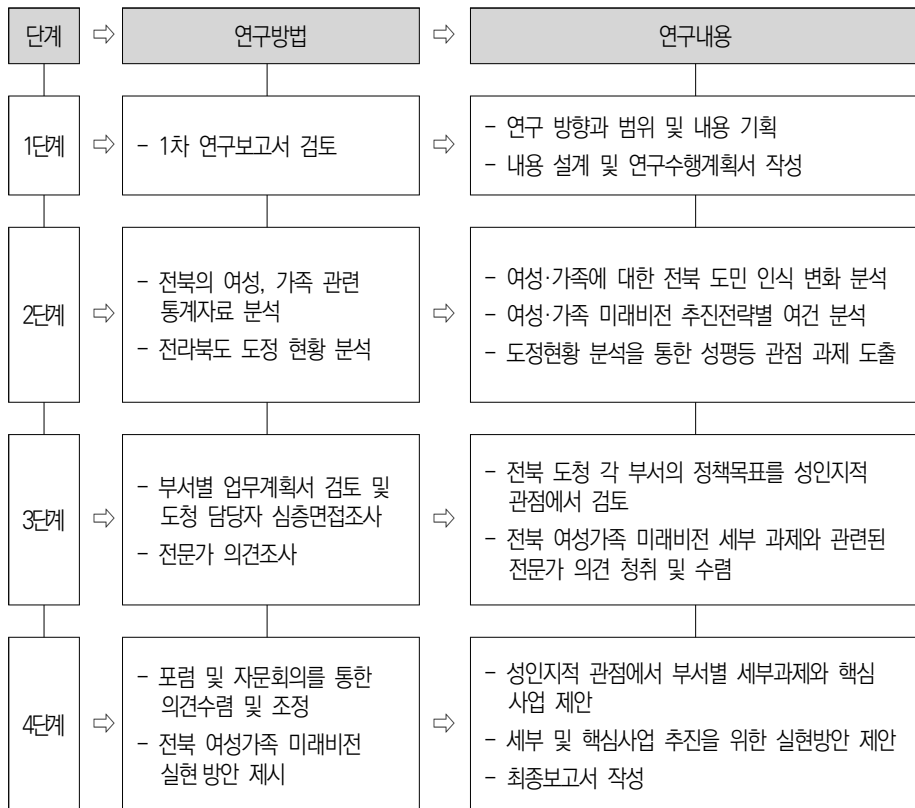
나. 조사계획

- 젠더 관점에서의 전라북도 행정부서별 업무 검토 및 분석 내용과 각 행정부서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라북도 각 행정 부서별 주요 업무 담당자(과장 및 팀장) 대상의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리고 젠더관점의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3대 목표별 10대 추진 전략별 도출된 세부 과제 및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 등을 전북 및 전국지역에 있는 각 분야의 현장 및 학계에 계신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전북지역 여성단체, 여성 의원, 전북도의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전북 및 전국의 여성·가족 관련 정책 전문가 등 20명 대상 전문가 회의 및 의견조사를 실시함

다. 포럼 및 전문가 자문

- 전북지역의 성 주류화와 여성·가족 미래전략 실현을 위해 포럼을 개최하였다.
 - 학계 전문가, 주요 여성단체 활동가, 여성계 주요 대표들, 여성의원, 전라북도 환경복지위원회 도의원, 관련된 전라북도 부서 담당공무원, 여성도민 등 참여
- 전북 여성가족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과 세부 과제(안) 및 실행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자문회의도 진행하였다.
 - 연구 자문위원 15명 대상 연구자문회의

라. 연구 추진 절차



제 3 절 연구의 기대효과

- 저출산과 생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여성인력 고급화와 사회참여 증진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
- 일·돌봄의 균형 및 일·돌봄 방식의 변화, 성평등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성평등하고, 안전·행복한 전북을 구현하는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

2

장

전북 여성·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Jeonbuk Institute

-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2.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3. 일·생활균형 기반 조성

제 2 장 전북 여성·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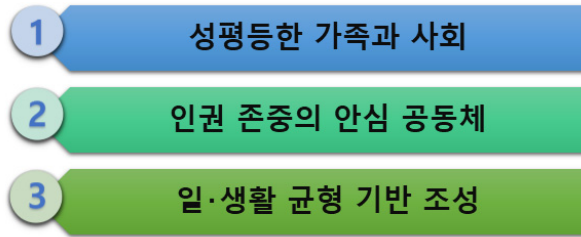
- 본 장에서는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에서, 미래 전망과 이에 따른 전북의 중점의 여러 상황을 고려·분석하여 전북 미래비전 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표 2-1〉 미래 트렌드로 본 전북의 여건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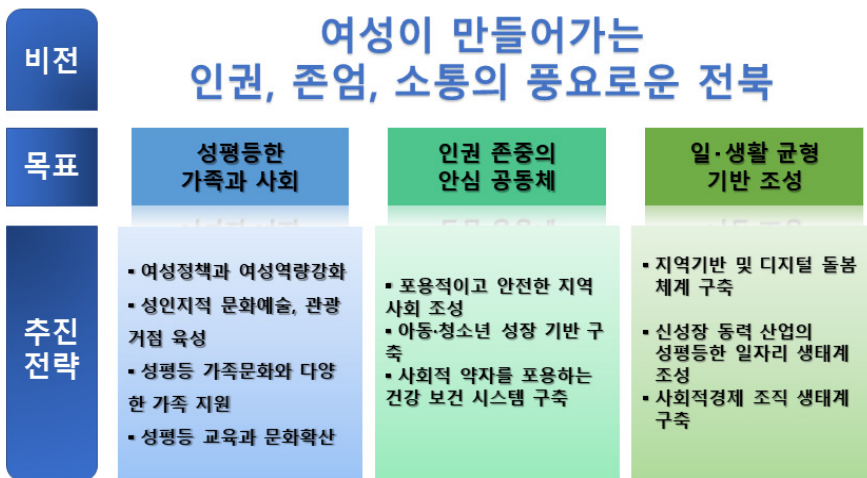
구분	미래 트렌드	전북의 여건
세계화	Globalize+ Localize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 노동의 지속적 유입
인구증가·고령화	인구증가 및 고령화 국경을 넘는 인구이동	인구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기술변화와 사회변화	사물인터넷 발전에 따른 도시공간과 일상생활 변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빌리지 등으로 삶의 질 향상 여성역할의 이동: 돌봄에서 생산으로
산업변화와 일자리변화	다양한 직무순환시스템 고용형태의 다양화 개방적, 협력적, 창의적, 자기주도적 일자리 일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환형해 비즈니스권 청년 및 여성일자리 창출 창의적, 협력적, 개방적인 여성일자리 창출 일과 생활관계의 조정
빈부격차	부의 집중심화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고령인구의 빈곤문제
기후변화	기후변화 물 부족, 식량부족 신재생에너지개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으로 전환 태양·풍력에너지 일상화
재난 및 질병과 위생보건	재난대응 및 공공보건시스템 강화	여성친화적 재난질병 대응체계 마련 고령사회 빈곤취약계층 여성 및 사회적 약자 안전 강화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 전북연구원, 2020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에서 도출된 3대 정책 목표인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인권존중의 안심공동체’,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의 근간이 되는 전북 도민의 가치관 변화와 그에 따른 관계성 변화 및 노동과 돌봄 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1), 전북연구원, 2020
 <그림 2-1>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3대 정책목표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1), 전북연구원, 2020
 <그림 2-2> 비전 체계도

○ 이를 위해 3대 목표의 근간이 되는 전라북도 도민의 가치관 변화 등을 크게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련 기초 통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 전북여성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 보고서 내용들도 함께 참고하여 인식 변화를 검토·정리하였다.

제 1 절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가. 여성대표성과 의사결정

1) 현황 및 인식

- 여성정책과 여성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전북지역 성평등 지수는 중하위에 위치하고 있고, 사회 전반 특히 의사결정 관련 성평등지수가 저조한 편이다.

〈표 2-2〉 지역 성평등지수 의사결정의 지역별 현황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광주	울산	서울	대전	부산	제주	경기	대구	인천	충북	충남	강원	전남	경남	전북	경북
점수	46.3	44.6	44.0	44.0	41.7	39.6	39.5	38.8	38.5	36.1	36.1	35.2	31.9	30.7	30.0	29.5

자료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보다 1.2점 오른 72.9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12. 23일)

- 여성정책을 추동해 나갈 강력한 실행 조직의 부재는 여성관리직의 비중이 낮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라북도의 5급 이상 여성관리직 비율은 확대되는 추세이고, 행정안전부는 제4차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를 도부 평균 2020년 13.8%에서 2021년 15.6%로 제시하였으나, 전북의 경우 2020년 13.1%, 2021년 14.8%에 수준으로 전국 기준보다 약간 낮음이 보여 진다.

〈표 2-3〉 여성공무원 및 여성관리직(5급 이상)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1,809	530	29.3%	1,778	538	30.3%	1,791	569	31.8%	1,774	592	33.4%
5급 이상	426	35	8.2%	414	42	10.1%	415	64	15.4%	429	82	19.1%

자료 : 전라북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안), 2020년

- 전라북도의 891개 위원회의 전체 위원 8,811명 중 여성위원은 3,093명

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은 35.1%로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목표인 4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전국 평균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은 광역단위 44.9%, 기초단위 41.4%(20년 기준)인데, 전북은 도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41.4%, 시군은 33.8%로 광역단위 여성위원의 비율은 3.5%p 낮고, 시군의 경우는 7.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여성위원 참여율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위원회수	전체 위원수 (위촉직)	여성 위원수	여성위원 비율	비고
계	891개	8,811명	3,093명	35.1%	
도	105개	1,452명	604명	41.6%	19년 말 기준
시군	786개	7,359명	2,489명	33.8%	18년 말 기준

자료 : 전라북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안), 2020년

- 경제 분야에서 여성관리직 비율은, 2015년 0%에서, 2019년 18.8%로 급격히 상승하여, 전국 평균 15.4%보다 3.4%p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 관리직 근로자

단위 : 천명, %

구분	2015				2019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358	37	321	10.3	408	63	345	15.4
전북	10	0	10	0.0	16	3	13	18.8

주 : 직업별 취업자 중 관리직을 기준으로 집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시스템」(<https://gsis.kwdi.re.kr/>) 2019.

전북연구원. 2020. 2020 전북 성인지 통계: 통계로 보는 전북여성의 삶

- 정치분야의 여성의 과소대표성은 기초의회보다 광역의회에서 더 심각하여, 제7회 지방선거(2018)의 경우 전국은 여성의원의 비중이 19.4%였으나, 전북은 12.8%로 6.6%p 낮다. 기초의회 역시, 2018년 전국 여성위원 비중은 30.8%로 전북(24.4%)보다 6.4%p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미래 전북의 여성가족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인재 역량강화와 세력화를 위해서도 정치분야 대표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에 여성정책 위상을 강화하고 추진해 나갈 구심점의 존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한 여성들의 역량과 위상강화를 위해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 요청된다.

〈표 2-6〉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의원 수	여성의원 수	여성의원 비율
광역의회(도의회)			
2010(5회)	38	4	10.5
2014(6회)	38	5	13.2
2018(7회)	39	5	12.8
기초의회(시군의회)			
2010(5회)	197	30	15.2
2014(6회)	197	37	18.8
2018(7회)	197	48	24.4

주 : 2010년, 2014년, 2018년 지방선거 결과로, 해당년도 말월 말일 기준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전북연구원. 2020. 2020 전북 성인지 통계: 통계로 보는 전북여성의 삶

2) 전망 및 과제

- 의사결정 영역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등 조치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이는 수적인 대표성만이 아닌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특히, 명예남성이 아닌 지역의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 만연한 남성 중심성을 변혁시킬 수 있는 여성 대표가 필요하다.
- 또한,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후보 할당 의무화,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 등의 여성의원의 수적인 확대와 여성 정치 후보자 발굴 및 육성의 질적인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표 2-7〉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단위: 명)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국회 비례대표 수 증가를 통한 여성의원 확대	176	108	230
지역구 선출직 의원의 30% 여성 후보할당을 법적으로 의무화	126	89	170.5
여성의원후보자 다수 추천 정당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확대	79	53	105.5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	82	170	167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육성	134	160	214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Ⅰ), 전북연구원, 2020

- 경제활동 참여 제고 및 조직 내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이 요청된다. 여성이 조직 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가정양립지원 강화와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교육이 제안되었다. 여성 리더들이 성차별적인 정책과 제도를 인지하고, 성평등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요청된다.
- 여성이 조직 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20-30대 여성의 경우,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 제도 도입, 40-50대 여성을 대상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관리자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지원, 60대는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여성 리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3) 중점 정책 방향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및 의사결정 영역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적극적 평등 조치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정책/성평등을 총괄하고 추동해나갈 여성정책 체계의 구심점이 요청된다. 끝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조직 내 리더로의 성장을 위해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2-8〉 여성이 조직 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교육	152	86	195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지원	114	74	15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118	111	173.5
여성이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 되지 않도록 알가정양립지원 강화	149	135	216.5
부서배치, 승진, 근무성적평가 등에서 차별 해소	41	98	90
기업 내 여성위원회 등 양성평등 촉진기구 설치·운영	19	50	44
여성임원 비율 확대	7	43	28.5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Ⅰ), 전북연구원, 2020

나.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및 지원

1) 현황 및 인식

- 전라북도는 2012년 이후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더 커 인구유출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한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은 마이너스 순이동을 보이며, 강원, 전남 등 다른 시도 지역에 비해 전북은 인구유출이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 고령인구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는 2020년 15.7%, 2030년 25.0%, 2040년 33.9%로 예측되는데 비해 전라북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20.6%, 2030년 30.0%, 2040년에는 39.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 그에 비해, 2000년~2019년 간 전라북도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으나 감소율이 전국(2000년 대비 52.7% 감소)보다 빨라 2000년 대비 64.3%가 감소하였다.
- 결혼관의 유연화 및 가족 가치관 변화에 따라,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동거 및 이혼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가 증대되면서, 가족형태가 다양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인가구의 비중이 확대되고,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의 비중 역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9〉 전라북도 가족형태별 가구 추이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가구	601,965 (100.0)	619,958 (100.0)	659,946 (100.0)	717,311 (100.0)	724,678 (100.0)	728,871 (100.0)	732,980 (100.0)	738,307 (100.0)
부부	100,911 (16.8)	119,014 (19.2)	132,177 (20.0)	130,239 (18.2)	128,876 (17.8)	133,329 (18.3)	136,715 (18.7)	141,230 (19.1)
부부+ 미혼자녀	247,122 (41.1)	220,363 (35.5)	203,703 (30.9)	185,516 (25.9)	185,165 (25.6)	183,536 (25.)	180,840 (24.7)	177,572 (24.1)
한부모+ 미혼자녀	45,746 (7.6)	49,884 (8.0)	55,797 (8.5)	77,426 (10.4)	75,606 (10.4)	75,442 (10.4)	75,827 (10.3)	75,265 (10.2)
조부모+ 미혼 손자녀	3,266 (0.5)	3,862 (0.6)	6,572 (1.0)	6,046 (0.8)	5,605 (0.8)	5,632 (0.8)	5,460 (0.7)	5,229 (0.7)
부부+ 양(편)친	8,994 (1.5)	9,311 (1.5)	8,216 (1.2)	6,694 (0.9)	6,760 (0.9)	5,963 (0.8)	5,804 (0.8)	5,740 (0.8)
부부+미혼자 녀+양(편)친	36,013 (6.0)	28,078 (4.5)	24,396 (3.7)	20,583 (2.8)	20,482 (2.5)	18,558 (2.5)	17,168 (2.3)	15,442 (2.1)
1인가구	104,780 (17.4)	136,754 (22.1)	175,026 (26.5)	213,750 (30.7)	222,201 (31.2)	227,600 (31.2)	232,587 (31.7)	238,746 (32.3)
비친족 가구	6,257 (1.0)	6,644 (1.1)	6,029 (0.9)	7,840 (1.2)	8,953 (1.4)	9,854 (1.4)	10,397 (1.4)	12,033 (1.6)
기타 가족	48,876 (8.1)	46,048 (7.4)	48,030 (7.3)	69,217 (9.8)	71,030 (9.5)	68,957 (9.5)	68,182 (9.3)	67,050 (9.1)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주 1)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2)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포함

3) 기타가족에는 부부+미혼형제자매, 부부+기타친인척, 부부+미혼자녀+미혼형제자매 등이 포함됨

○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는 2017년 기준 10.9천 명으로 2007년 대비 약 6.4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전국 평균 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경향성은 지속 확산되는 추세이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는 다문화가족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표 2-10〉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성별 현황(2017)

구분		전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자녀
전국	전체	1,861,084	495,792	330,188	117,127	276,750	428,925	212,302
		100.0	26.6	17.7	6.3	14.9	23.0	11.4
전북	전체	49,840	10,419	10,900	5,095	2,135	10,298	10,993
		100.0	20.9	21.9	10.2	4.3	20.7	22.1
	남성	24,301	8,650	735	2,745	1,165	5,253	5,753
		100.0	35.6	3.0	11.3	4.8	21.6	23.7
	여성	25,539	1,769	10,165	2,350	970	5,045	5,240
		100.0	6.9	39.8	9.2	3.8	19.8	20.5

주 : '결혼이주민'은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치임.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

〈표 2-11〉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 추이 변화(2007~2017)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294,663	318,948	330,188
전북	4,479	5,042	6,940	7,197	8,523	9,068	9,626	9,951	10,237	10,568	10,90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07~2017)」.

-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변화하고 있으나, 가족 문화는 큰 변화가 없어 가사분담을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비율이 76.9%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2〉 가사분담 실태

구분		계	부인 위주			공평하게 분담	남편 위주		
			부인이 전적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분담			남편이 주로 부인이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	전국	100.0	76.2	21.9	54.3	20.2	3.7	2.9	0.8
	전북	100.0	75.9	22.5	53.4	20.1	4.0	3.0	1.0
아내	전국	100.0	77.7	26.9	50.8	19.5	2.8	2.4	0.4
	전북	100.0	76.9	26.2	50.7	20.4	2.8	2.2	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 성별 가사노동 시간도 59분인 남성에 비해, 여성이 3시간 6분으로 3배 넘는 시간을 가사노동에 투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3〉 성별 가사노동 시간

구분	2004			2009			2014			2019		
	남성	여성	차이	남성	여성	차이	남성	여성	차이	남성	여성	차이
전국	0:33	3:14	2:41	0:38	3:09	2:31	0:42	3:05	2:23	0:51	2:58	2:07
전북	0:40	3:25	2:45	0:43	3:18	2:35	0:42	3:08	2:26	0:59	3:06	2:07

주 : 가사노동 시간은 행동분류 중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임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 가정 내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은 가사일, 가족원돌봄이나 자녀 교육 등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투자나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남편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4〉 항목별 의사결정 주체

(단위: %)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 아내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자녀교육	1.4	4.6	47.9	34.7	11.5
주택 구입(주거지역, 구입 시기 등)	1.9	23.0	60.1	11.9	3.0
투자 및 재산관리	2.6	24.0	43.9	23.4	6.1
생활비 지출	0.5	3.5	21.8	57.3	16.9
배우자의 취업, 직장 이동	2.8	22.4	56.4	11.5	6.9
가사 등 집안일	0.0	1.4	23.0	58.4	17.3
가족원 돌봄	0.3	1.4	33.1	48.8	16.5

자료 : 전북지역 가족 성평등 실태와 성인자성 개선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2020

2) 전망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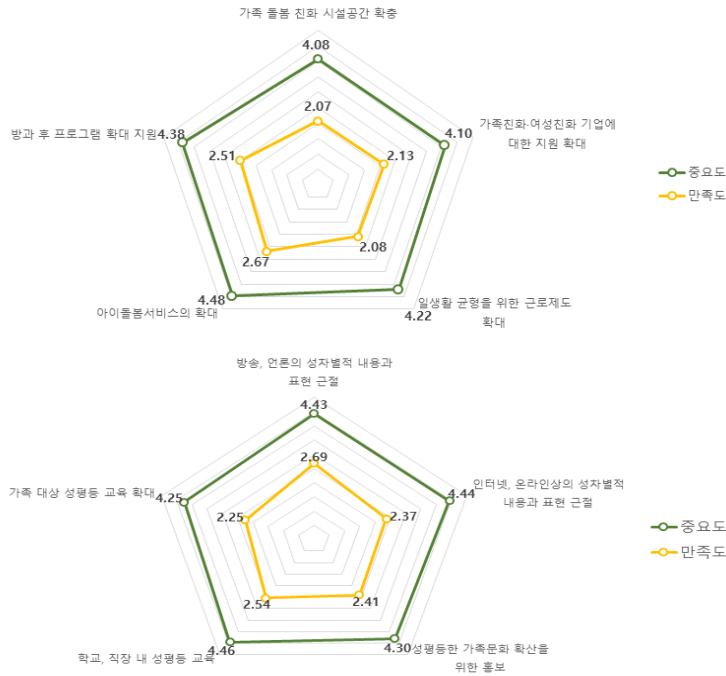
- 여성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성평등한 사회 조성이 요청된다. 청년여성 및 결혼이주 여성과 관련해 가족과 사회의 낮은 성평등 인식 개선, 전북의 정주환경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 2020년의 전북연구원 가족 성평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중요성에는 높은 공감을 보였지만, 실제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중요도에 비해 2포인트 정도 낮아 (5점 만점 기준),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단위: %)

구분	중요도		만족도	
	N	M	N	M
방송, 언론의 성차별적 내용과 표현 근절	393	4.43	390	2.69
인터넷, 온라인상의 성차별적 내용과 표현 근절	393	4.44	389	2.37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393	4.30	390	2.41
학교, 직장 내 성평등 교육	393	4.46	389	2.54
가족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392	4.25	389	2.25
가족 돌봄 친화 시설공간 확충 (예. 남성이용기능 수유시설)	393	4.08	388	2.07
가족친화·여성친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393	4.10	390	2.13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제도 확대	393	4.22	390	2.08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389	4.48	387	2.67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지원	391	4.38	388	2.51

자료 : 전북지역 가족 성평등 실태와 성인자성 개선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2020



〈그림 2-3〉 가족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 다양한 가족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이 요청된다. 가족 구성의 변화 및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자녀 및 노인 돌봄의 가족 기능이 약화되거나 혹은 특정인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족 부담의 최소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요청된다.
-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가족 내 성평등 확대를 위해 가사, 아이 돌봄, 노인 돌봄이 여성만의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되었고, 또한 남성이 양육과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두 번째로 나타났다.

〈표 2-16〉 가족 내에서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단위: 명)

	1 순위	2 순위	우선순위 점수	지역별		
				시	군	χ^2
가사, 아이돌봄, 노인돌봄이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	156	81	196.5	96 (24.00)	60 (30.00)	17.87*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개선	114	79	153.5	79 (19.75)	35 (17.50)	
양육과 가사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116	96	164	81 (20.25)	35 (17.50)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의 변화	62	65	94.5	47 (11.75)	15 (7.50)	
실질적으로 여성이 가계를 부양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	58	70	93	36 (11.75)	22 (11.00)	
실질적으로 여성이 직업경력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	31	64	63	14 (3.50)	17 (8.50)	
중요한 가족문제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 증대	16	47	39.5	14 (3.50)	2 (1.00)	
시가와 며느리 간의 수직적 관계의 변화	13	22	24	7 (1.75)	6 (3.00)	
부부 상호간의 존중감 증대	33	72	69	25 (6.25)	8 (4.00)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Ⅰ), 전북연구원, 2020

- 전북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의 필요성은 2019년 지역성평등지수의 결과에서도 16위로 낮게 위치하여, 성평등 교육과 문화 확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17〉 지역성평등지수 정책영역별 성평등 점수 및 순위

구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년	64.7	12	91.2	1	71.5	14
2018년	65.5	13	89.0	1	69.7	16
2019년	68.0	10	87.3	4	71.4	16

주 : 각 연도는 통계생산연도 기준임

자료 : 2019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의 도민대상 조사결과에서도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일·생활균형에 이어,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위를 차지하여, 이러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18〉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중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자리에서의 남녀평등	118	19.63
차별 없는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151	25.12
정치·경제·사회분야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 확대	67	11.15
일·생활 균형	165	27.45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예방)	19	3.16
취약여성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결혼이주, 1인가구, 한부모가족, 장애 등)	46	7.65
가족 내 양성평등과 민주적 문화 확산	27	4.49
무응답	8	1.33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 전북연구원, 2020

3) 중점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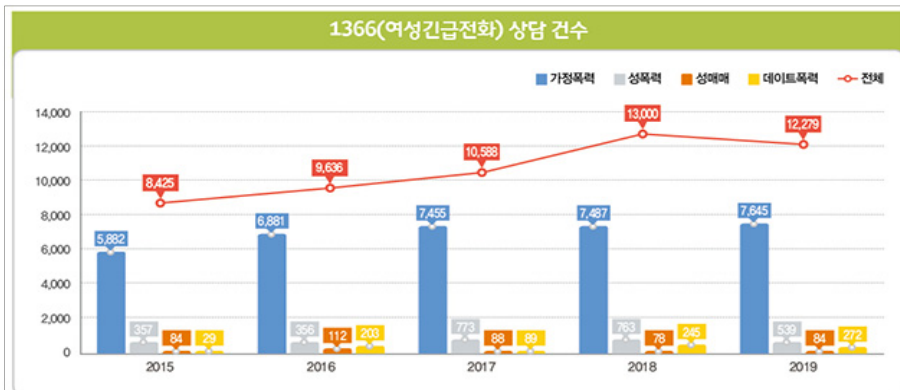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확대 및 성평등 교육과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전북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인식과 문화의 변화 요구가 높고,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과 문화 확산의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인권과 성인지감수성을 지닐 수 있는 소양교육 제공이 요청된다.

제 2 절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가.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 지역사회 조성

1) 현황 및 인식

- 여성과 아동·청소년 대상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북 여성긴급전화 상담건수에 따르면 주요 여성폭력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건수가 총 8,604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20.4%p 증가한 결과이다.
- 가정폭력의 경우 매년 소폭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데이트 폭력은 매년 증감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15년 대비 '19년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 증가율은 837.9%로 가장 높음을 볼 수 있다.



자료 : 전북 여성긴급전화(1366) 통계자료

- 아동학대 사례 증가 및 높은 피해아동 발견율도 보여진다. 부모이혼과 별거 및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전북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 '19년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1,720건, 피해아동 발견율은 6.30%로 전국 3위에 위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북지역 아동학대 사례 건수와 피해아동 발견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9〉 전국 시·도별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2019)

구분	추계아동인구	아동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인구 천 명 당)
전국	7,888,218	30,045	3.81
서울	1,250,682	2,178	1.74
부산	452,043	1,752	3.88
대구	368,065	1,479	4.02
인천	458,490	2,282	4.98
광주	252,846	876	3.46
대전	240,543	895	3.72
울산	194,620	800	4.11
세종	76,625	295	3.81
경기	2,206,048	7,885	3.57
강원	215,975	1,523	7.05(2위)
충북	247,971	1,171	4.72
충남	345,378	1,448	4.19
전북	273,020	1,720	6.30(3위)
전남	265,304	2,014	7.59(1위)
경북	379,225	1,782	4.70
경남	543,629	1,300	2.39
제주	117,754	645	5.48

자료 :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표 2-20〉 전국과 전북의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및 피해아동 발견율

구분	전국		전북	
	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학대사례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2015	11,715	1.32	889	2.78
2016	18,700	2.15	1,446	4.66
2017	22,367	2.64	1,574	5.23
2018	26,604	2.98	1,580	5.44
2019	30,045	3.81	1,720	6.30

자료 :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 맞벌이가구 및 가족해체 증가로 위기 및 빈곤 아동·청소년 증가 역시 확인할 수 있다. '19년 전북지역 맞벌이가구는 238천 가구이며 그 비율은 53.8%로 전북 전체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이다.
- 이는 전국 평균 맞벌이가구 비율(46.0%) 보다 7.8%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맞벌이가구 수와 비율은 증가 추세이며, 맞벌이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 비율보다 매년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2-21〉 연도별 전국과 전북의 맞벌이 가구 수와 비율

구분	전국		전북	
	맞벌이가구(천가구)	비율	맞벌이가구(천가구)	비율
2011	5,241	44.6	232	51.6
2015	5,358	44.1	225	50.1
2017	5,456	44.6	226	50.2
2019	5,662	46.0	238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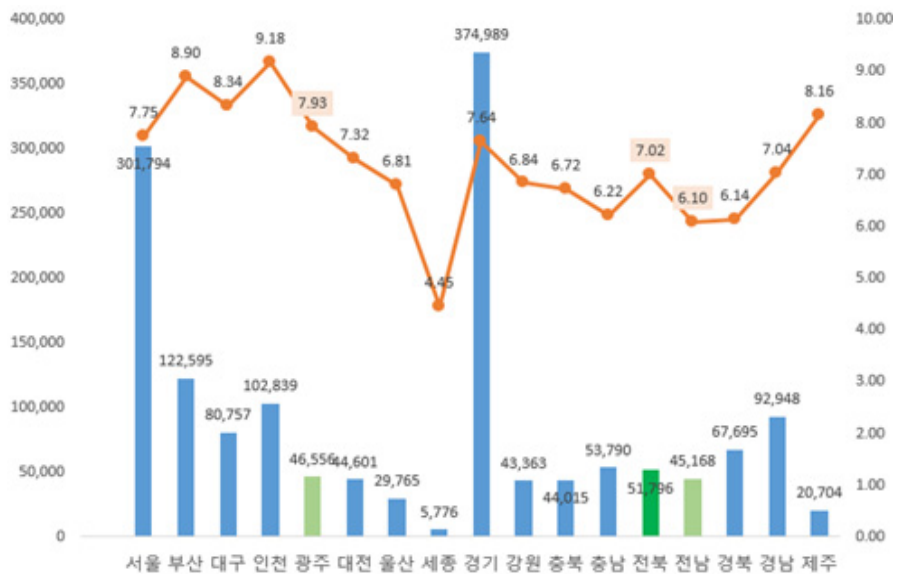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전국적으로 '20년 한 해 동안 약 106,500건의 이혼이 발생했고, 이 중 45,002건이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20년 한 해 동안 3,763건의 이혼이 발생했고, 이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은 1,643건으로 전북 전체 이혼의 약 44%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이혼 건수와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 건수가 매년 소폭씩 감소하고는 있으나, 1년에 약 1천 5백건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이 발생하고 있어 한 해에 적어도 약 3천 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가족해체에 대한 아픈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부모 이혼과 별거 및 가족해체로 전북에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부모가구는 '19년 51,796가구로 전체 가구의 7.0% 차지하고, 조손가구는 '19년 5,229가구로 전체 가구의 0.71% 차지한다. 전북 조손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 비율(0.56%)보다 0.15%p가 높아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22〉 연도별 이혼건수 및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 현황(200-2020)

구분	전국			전북		
	계	미성년자녀		계	미성년자녀	
		이혼건수	비율		이혼건수	비율
2000	119,455	84,276	70.55	4,200	3,116	74.19
2010	116,858	62,921	53.84	3,910	2,194	56.11
2015	109,153	52,797	48.37	3,755	1,958	52.14
2017	106,032	50,093	47.24	3,698	1,907	51.57
2019	110,831	48,951	44.17	4,007	1,825	45.55
2020	106,500	45,002	42.26	3,763	1,643	43.66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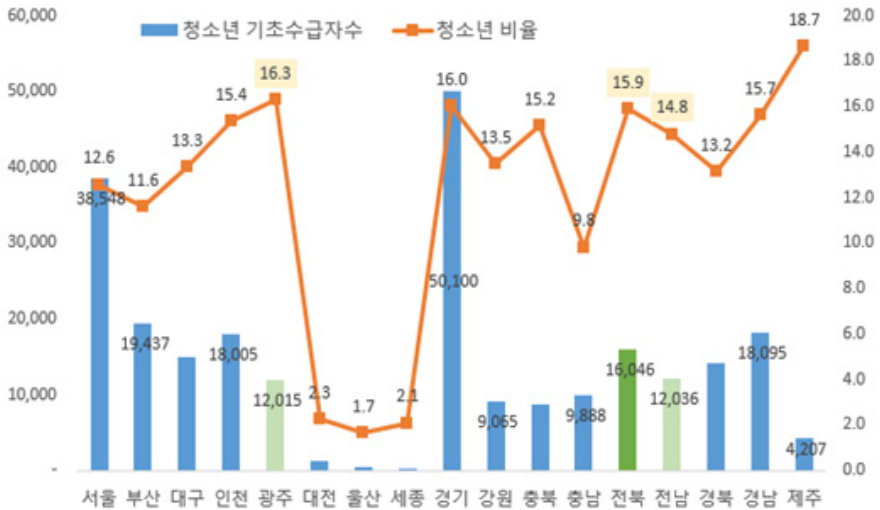
〈그림 2-4〉 전국 시·도별 한부모가구 수와 비율(2019)

〈표 2-23〉 전국 시·도별 조손가구 수 및 비율(2019)

구분	전체 가구	조손 가구			조손가구 비율
		계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조모+미혼손자녀	
전국	20,343,188	114,211	45,605	68,606	0.56
서울	3,896,389	20,824	8,611	12,213	0.53
부산	1,377,030	7,661	2,928	4,733	0.56
대구	968,620	5,206	1,973	3,233	0.54
인천	1,120,576	5,495	2,087	3,408	0.49
광주	587,159	3,503	1,175	2,328	0.60
대전	609,043	3,161	1,276	1,885	0.52
울산	437,094	1,730	704	1,026	0.40
세종	129,664	528	208	320	0.41
경기	4,907,660	25,980	10,665	15,315	0.53
강원	633,942	4,488	1,852	2,636	0.71
충북	654,713	3,875	1,634	2,241	0.59
충남	864,102	5,261	2,288	2,973	0.61
전북	738,307	5,229	1,977	3,252	0.71
전남	741,026	5,962	2,249	3,713	0.80
경북	1,102,934	6,831	2,789	4,042	0.62
경남	1,321,213	7,036	2,628	4,408	0.53
제주	253,716	1,441	561	880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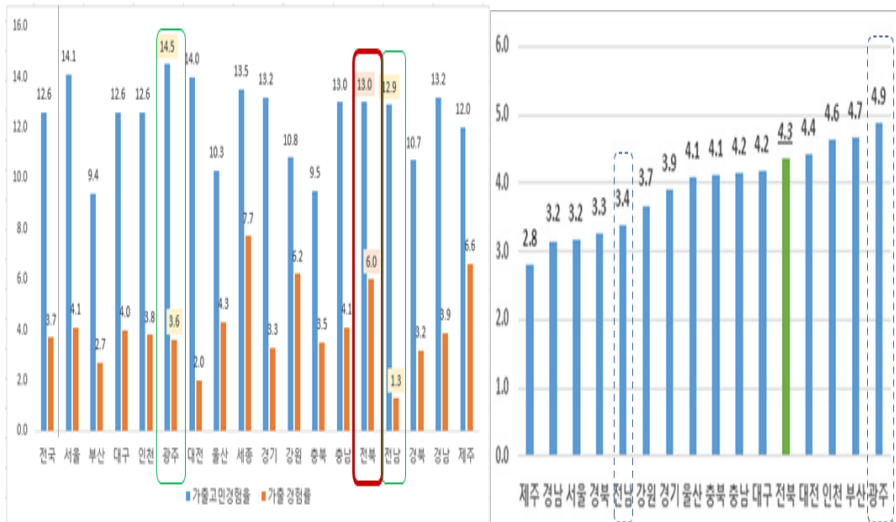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9)

- 그리고 빈곤 청소년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19년 전북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 수혜 청소년은 16,046명으로 전북 전체 수급자 중 약 16.0%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기초생활보장수급 수혜 청소년 비율인 14.4% 보다 약 1.6%p가 높으며, 제주, 광주, 경기 다음으로 높음을 보이고 있다.
- 전북 청소년의 가출고민 경험률과 가출 경험률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시도별 총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중도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나 위기 청소년의 발생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료: 통계청, 기초생활보장수급 통계

〈그림 2-5〉 전국 시·도별 기초생활수급 수해 청소년 수와 비율



자료 :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여성가족부), 경찰통계연보

〈그림 2-6〉 시·도별 가출고민·가출경험 및 소년범죄자 비중(2018)

- 전북지역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국 3위,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 2위이며, 무엇보다 전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매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전북 청소년의 자살 생각률과 자살

계획률은 전국 1위이며, 도박 중독의 위험 수준도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상 전북의 사회환경 및 가정환경의 취약성으로 위기 및 빈곤 아동·청소년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이 보여진다.

〈표 2-24〉 전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2015-2019)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스트레스 인지율	38.0	38.7	40.6	40.9	42.6
우울감 경험율	26.2	27.5	27.2	27.1	30.9

자료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질병관리청, 2015-2019)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 연구에서의 ‘전문가 FGI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안전 영역에서는 가부장적이고 성불평등적인 사회 문화와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가부장적 사회문화는 특히 장애인 여성에게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며, 빈곤·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여성청소년이 쉽게 성폭력과 성매매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야기시키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2-25〉 사회적 약자의 권익 및 안전 영역 전문가 FGI 주요 내용 재정리

현황 및 문제점	진단과 제언
- 가부장적 사회문화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심각 인권문제를 야기함 - 어릴 적 빈곤과 열악한 노동환경 경험을 통해 성매매 유입경로로 이어지고 성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 고리가 존재함 -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늘고 있음 - 자식이나 이웃에게 폐가될까봐 스스로 고립되는	-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서비스는 빈곤, 노동, 성문제 등 총체적 접근이 필요함.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관점에서 자활, 자립 논의와 통합지원체계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센터 종사자의 다문화·인

현황 및 문제점	진단과 제언
농촌노인, 언어소통이 어려운 이주여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발굴이 필요함	권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며 한국인 남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 대상별 특화서비스나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통합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가폭, 성폭, 성매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장애여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제도교육 내 인권, 평화, 젠더 등의 주제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 - 결혼이주여성 대상 서비스 중복 사례를 막고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 - 기술기반 성폭력, 성범죄의 디지털화로 통합적 법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치가 시급함(아동청소년성매매지원센터) -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교육과 인식 개선보다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2) 전망 및 과제

- 여성폭력 중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증가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증가와 디지털 성범죄 진화에 대한 면밀한 실태·통계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 또한 아동·청소년과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여성폭력에 예방·대응할 수 있는 기반 확충 및 다양한 폭력 유형별·연령별 피해자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2-26〉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1순위	2 순위	우선순위 점수
폭력발생시 신속대응시스템 개선	203	76	24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143	143	214.5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처벌 및 단속강화	75	57	103.5
가해자 및 재범자 처벌 단속 강화	109	161	189.5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29	78	68
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9	52	55
직장 내 성희롱 방지	10	30	25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Ⅰ), 전북연구원, 2020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로 맞벌이가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아동·청소년 자녀 대상 면밀한 관심과 돌봄에 대한 가정과 부모의 역할·기능이 떨어지고, 부모 이혼·별거 등 가족 해체로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아 아동·청소년기에 방황하며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다.
- 이에 아동·청소년의 위기 및 발달 상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과 위기 및 문제 발생 시 가정(부모)-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되어 긴급 대응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또한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Ⅰ)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필요 지원 정책으로 1위 신체·정신적 건강 발달을 위한 지원확대, 2위 아동안전에 대한 체계구축 강화, 3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지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도출되었다.

〈표 2-27〉 전라북도 아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구 분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지원 확대	207	66	240
아동의 참여권 및 놀 권리(놀이정책) 보장 확대(소프트웨어차원)	74	78	113
학교·교통·범죄·식품 등 아동안전에 대한 체계구축 강화	112	78	151
취약아동(빈곤·장애·이주·탈북 아동) 사회적 보호·지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80	88	124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조성 확대	31	56	59
부모교육강화와 가정양육 기반 조성 마련	34	63	65.5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정책 확대	30	102	81
아동의 문화여가 체험 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하드웨어차원)	30	66	63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Ⅰ), 전북연구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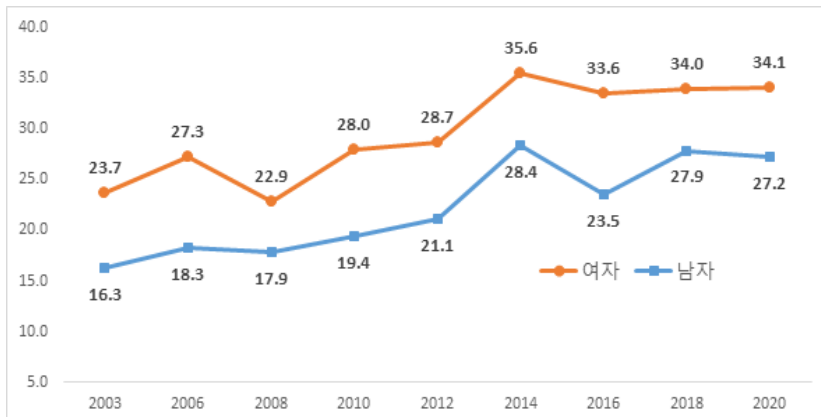
3) 중점 정책 방향

-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및 안전 체계 구축·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성인지적인 안전·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신적 성장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치료 지원 강화 및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과 공간 조성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
- 여성, 빈곤 및 위기아동, 청소년,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

나. 사회적 약자 위한 건강·보건 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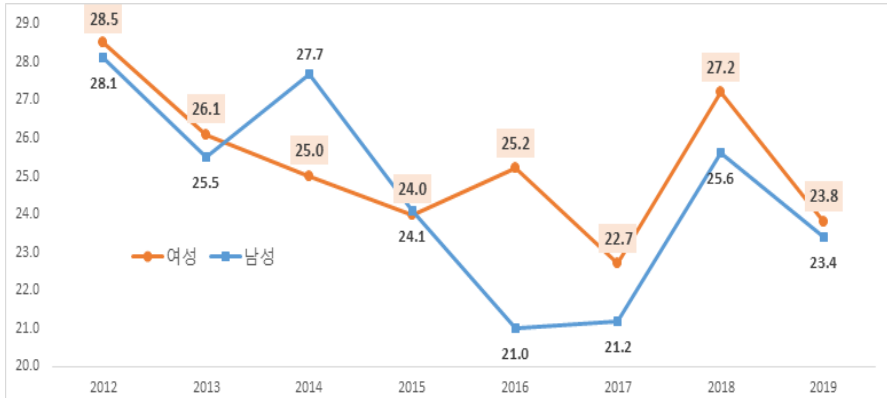
- 여성의 신체·정신건강 취약성 및 낮은 건강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질병 유병률은 2020년 기준 34.1%로 2003년 대비 약 10.4%p가 증가하여 여성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에 대한 유병률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 또한, 전북 여성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 유병률은 남성에 비해 적게는 5%p에서 많게는 10.1%p 이상 높게 나타나 여성의 질환이 남성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200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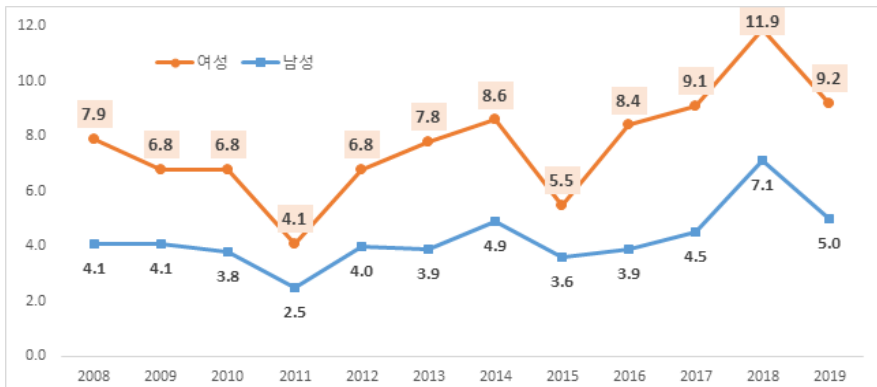
〈그림 2-7〉 성별에 따른 유병률

-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고, 매년 여성의 우울감 경험률은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2008-2019

〈그림 2-8〉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율



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2008-2019

〈그림 2-9〉 성별에 따른 우울감 경험률

- 전북 여성들이 지각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18년 기준 '건강치 못함'과 '매우 나쁨'이 각각 19.4%와 1.4%로 남성들이 지각한 '건강치 못함' 11.3%와 '매우 나쁨' 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8〉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단위 : 천명, %)

구분		매우 건강함	건강한 편	보통	건강치 못함	매우 나쁨
전체		7.9	37.1	37.8	15.4	1.8
성별	여성	6.0	35.7	37.5	19.4	1.4
	남성	9.8	38.6	38.1	11.3	2.2
연령	13~19세	20.7	52.8	22.9	3.6	-
	20~29세	16.8	51.2	28.0	3.5	0.5
	30~39세	7.6	44.8	38.1	8.2	1.2
	40~49세	6.1	41.4	43.7	8.0	0.7
	50~59세	5.7	36.2	43.1	12.5	2.4
	60세 이상	2.5	20.6	39.9	33.7	3.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 반면, 의료서비스 미치료를 살펴보면, 전북 여성은 18년 12.2%, 남성은 7.2%로 여성이 남성보다 5%p 이상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있음에도 받지 못한 적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표 2-29〉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단위 : 천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11.7	10.2	11.6	11.1	11.2	11.0	12.8	10.1
성별	여성	12.8	12.3	13.5	12.9	12.7	13.0	14.1	12.2
	남성	10.7	8.2	9.9	8.9	9.7	8.5	10.1	7.2
연령	19~29세	10.5	10.2	9.8	8.8	12.9	10.7	12.2	9.0
	30~39세	12.6	10.4	13.2	13.3	8.9	11.8	15.7	12.8
	40~49세	11.4	9.9	10.4	12.0	11.8	10.6	13.1	8.8
	50~59세	12.1	9.8	13.9	11.1	10.8	10.8	11.3	11.3
	60~69세	11.5	9.8	10.9	8.6	10.3	10.3	8.8	7.4
	70세 이상	12.4	11.7	11.8	11.0	12.1	10.5	11.7	9.1

주 :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최근 1년 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각년도

- 남성보다 낮은 전북 여성의 주관적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북 여성의 주관적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 주관적 만족도를 보면 여성의 경우 매우 만족 10.7%, 약간 만족 23.8%로 만족함은 34.5%인 반면, 남성의 경우 매우 만족 13.5%, 약간 만족 23.9%로 만족함은 37.4%로 약 3.0%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 삶의 만족도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재정상태, 친지와 친구관계·가정과 사회생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0〉 주관적 만족도 및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천명, %)

주관적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12.1	23.9	50.7	11.0	2.3
성별	여성	10.7	23.8	51.8	11.1	2.6
	남성	13.5	23.9	49.6	10.9	2.1
삶에 대한 만족도						
구분		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재정상태	친지·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전체		6.47	5.65	6.64	6.89	6.62
성별	여성	6.22	5.58	6.58	6.84	6.52
	남성	6.73	5.72	6.70	6.94	6.72

주 : 삶의 대한 만족도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행복 수준을 0-10점까지 매긴 응답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9

- 젠더 관점에서 위기·재난 및 안전에 있어서 여성의 높은 취약성을 볼 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빈번해지면서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는 빈도가 빈번해지고 있고 이러한 재난·재해로 인하여 나타나는 인명 피해자가 남성보다는 여성을 중심으로 나타나 재난·재해의 취약성이 여성에게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안전 측면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정보다 야간보행에 대한 불안도가 높고, 위험에 대한 두려움 등이 높아 사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및 불안원인 (2018년)

구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감		야간보행시 두려운 이유				
	두려운 곳 없음	두려운 곳 있음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 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CCTV가 없어서	기타
전체	67.0	33.0	23.3	4.6	56.4	13.5	2.3
여성	57.4	42.6	19.5	4.6	60.2	13.6	2.3
남성	76.5	23.5	30.2	4.7	49.6	13.2	2.4

주 : 야간보행시 두려운 이유는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집계
 집 근처에는 밤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는지, 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시스템」(<https://gsis.kwdi.re.kr/>)

〈표 2-32〉 범죄위험에 대한 두려움 (2018년)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전체	1.8	15.5	36.3	34.8	11.6
여성	1.3	14.3	32.9	37.3	14.2
남성	2.3	16.7	39.8	32.3	8.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표 2-33〉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2018년)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안전하지 않음	매우 안전하지 않음
전체	1.9	20.6	52.4	22.3	2.7
여성	1.4	19.0	52.1	23.9	3.6
남성	2.4	22.2	52.8	20.8	1.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 이상 젠더 관점에서의 재난·재해 및 안전에 있어서의 여성의 높은 취약성에 대한 사회적 현상은 근본적으로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함께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과 관련 있다.
-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변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과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남성보다는 여성이 보다 높게 인식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 그리고 재난·재해 발생 시 생존을 좌우하는 능력은 신체적 영양 상태와 빈곤 상황 등인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영양 상태가 빈약하며, 경제적 어려움 및 빈곤에 처한 경우가 많고, 아동과 노인을 챙기고 책임지고자 하는 역할과 기능을 여성이 취하고 있어서 위기·재난/재해 및 안전에 있어서 여성이 취약하고 그 취약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34〉 성역할 태도

구분		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남성	100.0	29.7	31.8	38.5
	여성	100.0	28.9	29.4	41.8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다	남성	100.0	45.2	27.9	27.0
	여성	100.0	35.6	26.4	38.0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남성	100.0	49.8	29.5	20.7
	여성	100.0	51.5	27.1	21.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한다	남성	100.0	29.7	40.0	30.2
	여성	100.0	41.3	36.9	21.7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남성	100.0	40.4	28.0	31.6
	여성	100.0	33.1	26.0	40.9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2) 전망 및 과제

- 전북 여성의 신체/정신건강은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취약하였고, 필요한 의료서비스 조차 받지 못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북 여성의 주관적인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 수준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 이에 여성 생애주기에 따른 신체 및 정신건강 제고를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늘어난 수명 동안 건강한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통합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 더불어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사회적 약자 대상 생애주기에 따른 섭생 및 체력관리에 이르는 서비스 지원과 빈부 격차 심화에 따른 기본소득제도 도입 논의 및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 다음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과 상담, 그리고 성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건강 연구과 정보 제공 등에 대한 필요 지원 정책 욕구가 도출되었다.

〈표 2-35〉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성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건강 연구 및 정보제공	97	65	129.5
공공의료지원 확대	174	108	228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 및 상담	94	99	143.5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 지원	127	100	177
전 생애주기 여성건강 관리	68	114	125
여성친화적인 의료체계의 구축	32	85	74.5
건강자조모임(건강관련정보교환 상부상조를 위한 자발적 모임) 활성화 지원	7	28	21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 전북연구원, 2020

〈표 2-36〉 응답자 연령별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연령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성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건강 연구 및 정보제공(온·오프라인)	17	21	12
	13.71%	13.55%	16.67%
공공의료지원 확대	21	46	33
	16.94%	29.68%	45.83%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 및 상담	19	24	10
	15.32%	15.48%	13.89%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 지원	36	36	9
	29.03%	23.23%	12.50%
전 생애주기 여성건강 관리	20	20	5
	16.13%	12.90%	6.94%
여성친화적인 의료체계의 구축	9	7	3
	7.26%	4.52%	4.17%
건강자조모임(건강관련 정보 교환 상부상조를 위한 자발적 모임) 활성화 지원	2	1	0
	1.61%	0.65%	0.00%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Ⅰ), 전북연구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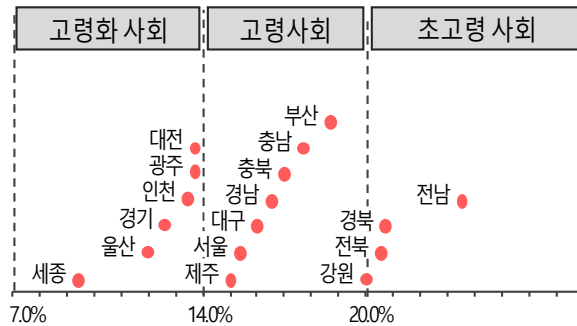
3) 중점 정책 방향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 의료 지원 서비스 확대와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제고를 위한 체계적·종합적·장기적 지원 강화가 요청된다. 또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연구, 건강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
- 위기 대응 체계 구축과 그 과정에서 성인지성 강화 역시 요청된다. 이를 위해 성별 데이터 구축과 재난 대응의 여성 친화적 매뉴얼 구성 등은 필수적이다.

제 3 절 일·생활균형 기반 조성

가. 노인·아동 대상 지역 기반 돌봄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

- 고령화 심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빈곤 독거여성노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20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25년에는 20.3%까지 증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 한편 전북의 65세 고령인구는 '19년에 이미 20.4%가 넘었으며, 20년 20.6%, 30년 30.0%, 40년 39.4%로 전국의 고령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 2017~2047

〈그림 2-10〉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2020)

- 전북지역의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를 보면, '00년 4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5.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05년부터는 2인가구가 26.6%, '10년에도 2인가구가 2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다가 '15년부터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29.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15년 이후 전북지역의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표 2-37〉 전북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8)

(단위 :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구 원수	1인 104,780 17.4	136,754 22.1	175,026 26.5	213,750 29.8	222,201 30.7	227,600 31.2	232,587 31.7
	2인 141,284 23.5	164,954 26.6	186,191 28.2	209,008 29.1	209,595 28.9	214,939 29.5	220,032 30.0
	3인 112,786 18.7	114,667 18.5	120,168 18.2	135,856 18.9	137,015 18.9	136,325 18.7	136,476 18.6
	4인 152,441 25.3	135,529 21.9	121,345 18.4	110,132 15.4	108,374 15.0	105,267 14.4	101,909 13.9
	5인 90,674 15.1	68,054 11.0	57,216 8.7	48,565 6.8	47,493 6.6	44,740 6.1	41,976 5.7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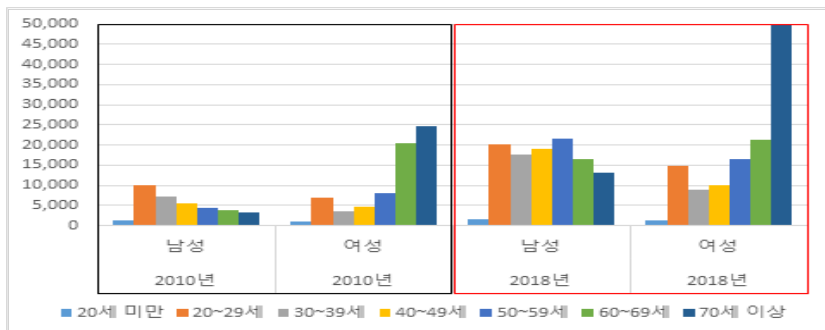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 1인 가구를 연령과 성별로 구분하면, 60대 이상 노인층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노인 여성 1인가구 비율이 남성 1인가구보다 2배 가량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독거여성노인이 지속 증가 추세로 파악된다.

〈표 2-38〉 전북 연령별 및 성별 1인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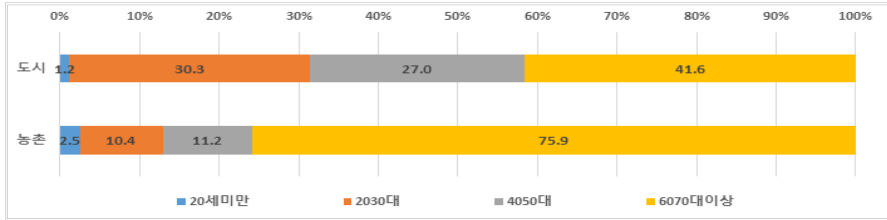
구분		20세미만	20~30대	40~50대	60~70대(이상)	계
전라 북도	계	3,082	61,442	67,346	100,716	232,587
		1.3	26.4	29.0	43.3	100.0
	남자	1,676	37,754	40,626	29,465	109,521
		1.5	34.5	37.1	26.9	100.0
	여자	1,406	23,688	26,720	71,251	123,066
		1.1	19.2	21.7	57.9	100.0

출처: 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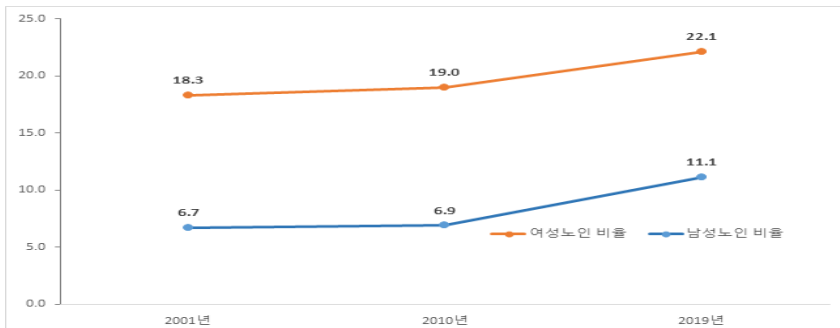
〈그림 2-11〉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8년)

- 또한, 여성 1인가구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보면, 도시보다는 농촌에 독거여성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림 2-12〉 전북 여성 1인가구의 도시-농촌 간 구성비 비교(전주시vs임실군)

- 전북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 연령 중 65세 이상의 여성노인 수급 비율이 '19년 22.1%에 이르고 있다. 이는 '01년 대비 3.8%p가 증가한 것이다. 즉 빈곤 여성노인의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이며, 남성노인 수급 비율보다 약 2배가량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3〉 전북 여성노인과 노인여성의 기초생활수급 비율 연도별 비교

- 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노인 발생 증가와 노인부양 및 돌봄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 심화로 노인인구 급증과 더불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75만 명에 이르고, 추정치매 유병률이 10.16%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10명 중 1명 꼴로 치매를 앓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북지역 65세 이상 추정치매 환자수는 약 4만명이며 추정치매 유병률은 전국 평균보다 1.17%p가 높은 11.33%로 나타났다. 농촌보다는 도시

(전주, 익산, 군산 등)에 치매노인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추정치매 유병률은 임실군(13.1%), 무주군(12.8%) 등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8년 전국 65세 이상 치매환자 약 75만명 중 여성 노인은 48만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노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확인해보면 70~74세 구간에서 급증하여 최고령 구간인 8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 또한 '18년 65세 이상 치매환자 약 39,899명 중 여성노인은 25,943명인 63.8%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노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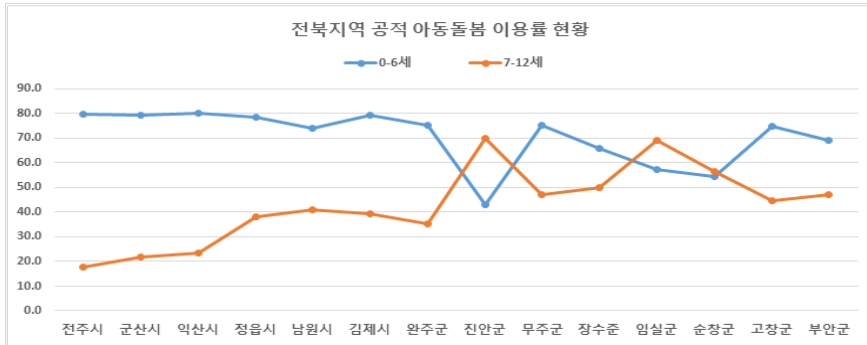
〈표 2-39〉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연령별 치매환자수 (2018)

(단위 : 가구, 명, %)

구분	65세 이상 치매환자수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전국	750,488	293,073 (38.0)	478,130 (62.0)	20,714	32,602	69,854	188,143	208,192	251,699
전북	39,899	14,747 (36.2)	25,943 (63.8)	791	1,378	3,131	9,523	11,528	14,339

자료: 대한민국치매현황 2019(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및 틈새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 초등돌봄 이용률을 보면, 군 지역의 이용률은 높고 초등학교 인구가 많은 시 지역(전주 12.2%, 군산 12.6%) 이용률은 낮아 시 지역 중심의 초등 돌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 전북지역 공적 아동 돌봄의 전체 공급 현황을 추정한 결과, 전체 아동 중 공적 돌봄 이용률은 51.2%였고, 이중 취학 전 영유아 공적 돌봄 이용률은 81.5%였으나, 초등 공적 돌봄 이용률은 26.2%로 초등 공적 돌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전북지역 아동의 공적 돌봄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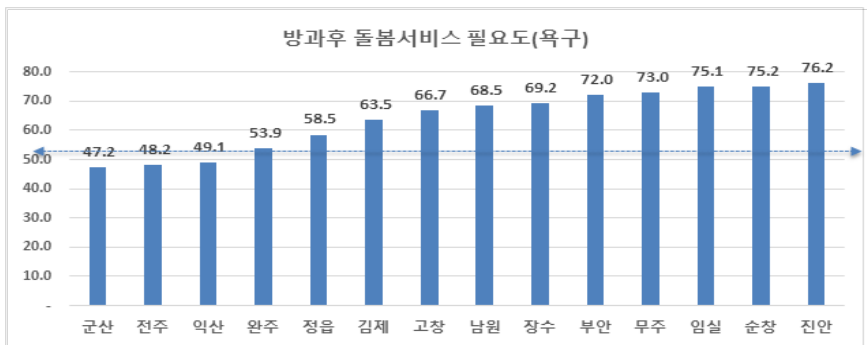
- 전북 초등 방과 후 돌봄 실태를 살펴보면, 평일 방과 후에 (성인)보호자 없이 ‘혼자’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43.6%였고, 이런 상황이 일주일에 2번 정도가 23.4%, ‘거의 매일’인 경우도 11.5%에 달한다.
- 「아동종합실태조사(2018)」 재분석 결과, 전북 6~17세 아동이 학교 방과 후와 방학에 ‘혼자 + 형제/자매’끼리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42~43%로 나타나 연령이 어릴수록 초등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가정에서,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40〉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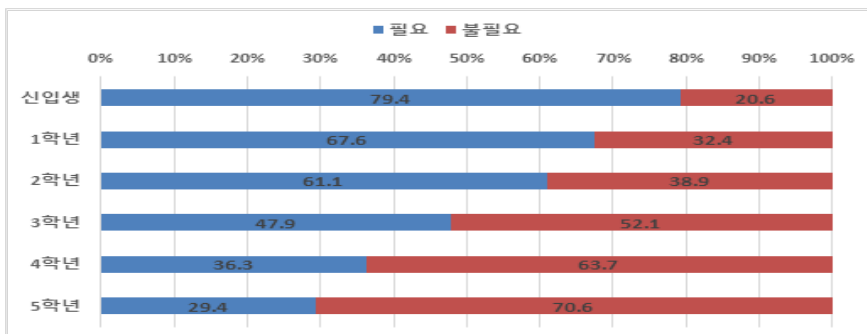
구분		평일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없다	있다	1~2일	3~4일	거의 매일
전체		56.4	43.6	23.4	8.7	11.5
학교 급	초등	54.1	45.9	24.5	8.4	13.0
	중등	56.1	43.9	25.4	10.0	8.5
	고등	59.3	40.8	20.0	7.6	13.2
가구 유형	양부모	56.7	43.3	23.5	8.8	11.0
	한부모	50.5	49.5	24.8	8.7	16.0
	기타	76.3	23.7	8.8	-	14.9
맞벌이 여부	맞벌이	54.0	46.1	23.6	9.6	12.9
	외벌이	61.3	38.7	23.3	7.5	7.9
	기타	59.7	40.3	20.6	2.8	16.9

자료 : 완주군 호남지방통계청,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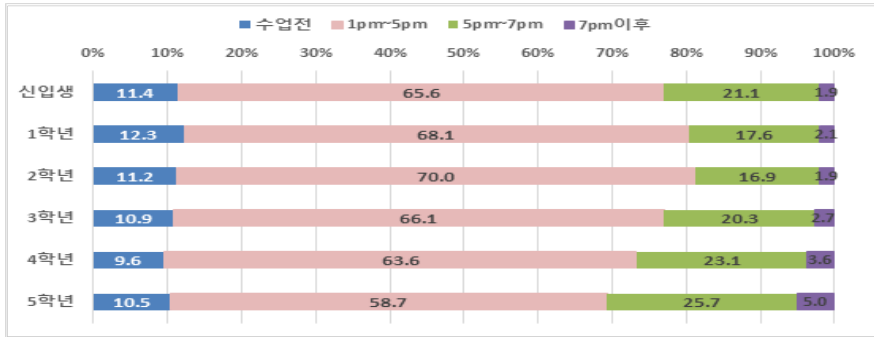
- 전북 「2021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53.6%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신입생인 초등 1학년의 필요도가 79.4%로 가장 높은 반면, 5학년의 필요도가 29.4%로 가장 낮아, 학년이 낮을수록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돌봄 필요한 시간은 오후 1시~5시가 66.7%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는 오후 5시~7시가 19.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 저학년의 수업종료 시간과 관련 있으며,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오후 5시 이후’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학년이 낮을수록 ‘오후 5시 이전’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5〉 전북 시군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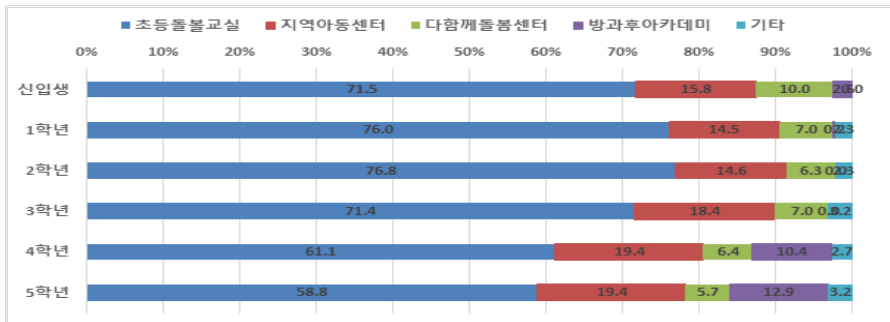


〈그림 2-16〉 전북 학년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필요도



〈그림 2-17〉 전북 학년별 돌봄서비스 필요시간

- 희망하는 돌봄 기관은 ‘초등돌봄교실’이 71.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을수록 초등돌봄교실이나 다함께돌봄센터를 희망했고, 학년이 높을수록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를 희망하였다.



〈그림 2-18〉 전북 학년별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

- 한편, 전북지역 육아휴직자 현황을 보면, '17년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은 10.4%이며, 성별로 나누어 확인해보면 여성은 20.3%, 남성은 2.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여성 공무원 21.7%, 남성 3.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전국 평균과 전북 모두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5%가 채 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전북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전망 및 과제

- 전북지역은 타 지역보다 고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세대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세대차 심화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전북지역은 급속한 고령화로 농촌지역 중심의 독거 여성노인이 증가 전망에 있고, 독거 여성노인의 상당한 비율이 빈곤 상황과 빈곤에 처해질 상황으로 전망되어 빈곤한 독거 여성노인을 위한 경제적 및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치매노인의 약 70%가 여성 노인으로 이에 대한 지역사회 내 체계적인 통합 돌봄 방안과 여성 친화적·고령자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 필요하다.
- 고령화 심화로 노인 돌봄의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반면, 노인 돌봄에 대한 지원 서비스와 인력 및 관련 지원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민들은 이상적인 노후의 돌봄 환경으로서 이웃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마을공동체나 조합주택 혹은 공공주택을 매개로 이웃과 상호 연결된 돌봄공동체를 희망하고 있었다.
- 이러한 결과는 마을공동체나 조합주택, 공공주택, 실버타운 등을 기초로 익숙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거주(Aging in Place)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 다만 돌봄이 현실적인 문제로 닥친 노인세대는 시설 좋은 요양원을 많이 희망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적자원의 투입이 요청된다.
- 반면에 자녀에 의한 돌봄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여 더 이상 노인 돌봄이 가족단위의 역할로 기능하지 않는 사회변화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41〉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녀들에 의한 돌봄	35	5.82
시설 좋은 요양원	127	21.13
이웃과 활발한 네트워크가 구성된 마을공동체	190	31.61
조합주택(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을 매개로 한 돌봄공동체	75	12.48
다문화, 비혼 가구 등 다양한 가구형태가 모여 사는 공공주택을 매개로 한 돌봄공동체	40	6.66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실버타운	122	20.30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Ⅰ), 전북연구원, 2020

- 그리고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 전략(1)」의 심층면접 결과, 전북지역은 기존의 바우처 사업이 감소하고 있고, 그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돌봄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분야 돌봄 시장에 대한 공적 자원화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여성역할이 증대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즉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노인과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와 틈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북지역 아동 돌봄 실태 파악을 통한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기반의 돌봄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3) 중점 정책 방향

- 노인·아동 등의 돌봄 체계 구축 마련과 지원 강화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직장 내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가 등 일·생활균형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AI 등의 기술을 반영한 돌봄의 디지털화 통합이 요청된다.

- 여성의 역할 변화에 따라 지역기반의 성평등한 돌봄 체계의 구축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돌봄 지원 체계의 민간영역에 대한 관리를 통해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내 거점기관 마련 및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돌봄 사회 조성이 과제로 남는다.

나. 성평등한 일자리

1) 현황 및 인식

- 2019년 전북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2.1%, 71.4%로 전국 평균 51.5%, 70.8%보다는 높지만, 남녀 간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9.3%로 동일하게 나타난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북지역에서 여성은 평균적으로는 44.3%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2018년 기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82.6%, 숙박 및 음식점업 62.2%, 교육서비스업은 60.2%로 특정 업종에 여성 편중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2〉 전국 및 전라북도 취업자의 성별 산업 분포

(단위 : 천명)

	전국			전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합계	26,461	15,212	11,249	929	517	412
농림어업	1,158	733	425	168	98	70
광업	15	13	2	1	1	0
제조업	4,432	3,144	1,289	120	85	3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67	61	6	3	2	1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8	107	22	4	3	0
건설업	1,970	1,771	199	88	79	10
도소매업	3,692	2,022	1,671	88	43	45
운수업	1,411	1,254	157	38	37	1
숙박 및 음식점업	2,251	846	1,405	61	20	4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74	613	261	14	10	4

	전국			전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금융 및 보험업	802	359	443	22	10	13
부동산업 및 임대업	525	333	192	14	10	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47	740	408	15	10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80	744	536	22	14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30	630	401	56	30	26
교육서비스업	1,848	616	1,233	73	25	4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85	379	1,706	88	13	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51	238	214	14	8	6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1,238	605	633	40	20	19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46	2	44	1	0	1
국제 및 외국기관	9	6	3	0	0	0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2019년 1/2분기

〈표 2-43〉 산업분류별 전라북도 남성 대비 여성 종사자 비율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43.1	43.1	42.6	42.9	42.7
농업, 임업 및 어업	46.5	42.6	41.8	41.6	42.2
광업	3.9	2.8	4.2	15.3	5.6
제조업	26.7	27.6	24.3	23.8	24.4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8.1	21.8	6.2	34.5	25.7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5.0	13.9	14.4	9.8	31.5
건설업	6.3	6.1	7.0	9.7	10.3
도매·소매업	47.3	47.5	46.7	45.8	45.5
운수·창고업	5.8	4.3	5.5	5.4	4.5
숙박·음식점업	63.8	65.1	59.4	63.8	62.2
정보통신업	33.7	31.1	23.1	31.2	23.1
금융·보험업	53.5	49.7	54.5	56.7	59.2
부동산업	30.5	27.4	26.1	29.8	30.9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30.4	31.5	34.6	40.1	37.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43.7	39.1	36.9	34.5	42.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37.7	36.7	38.5	36.7	42.7
교육 서비스업	61.2	65.3	66.1	66.3	60.2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83.7	79.9	77.7	80.9	82.6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8.6	25.6	32.3	34.1	32.7

	2014	2015	2016	2017	2018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40.6	48.8	49.8	41.7	41.3
가구 내 고용활동, 기타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97.7	100.0	100.0	100.0	100.0
국제 및 외국기관	49.5	100.0	0	0	100.0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년도

- 전북의 경제활동분야 성평등 지수(2018년 기준)는 73.6점으로 8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는 전북의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성별임금격차가 적은 효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2-44〉 지역 성평등지수 경제활동 지역별 현황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제주	대전	대구	충북	서울	인천	충남	전북	경기	강원	부산	광주	경북	전남	경남	울산
점수	78.1	75.7	75.7	75.5	75.0	74.4	73.6	73.6	73.6	73.5	72.7	72.1	70.7	70.6	69.5	64.2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보다 1.2점 오른 72.9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12. 23일)

- 여성의 종사상의 위치는 무급가족종사자(15.5%)와 임시근로자(24.2%)의 열악한 지위가 남성대비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5〉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2018)

(단위 : 천명, %)

		전체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국	전체	26,822 (100.0)	5,638 (21.0)	1,101 (4.1)	13,772 (51.3)	4,851 (18.1)	1,460 (5.4)
	남성	15,372 (100.0)	4,007 (26.1)	139 (0.9)	8,347 (54.3)	1,936 (12.6)	943 (6.1)
	여성	11,450 (100.0)	1,631 (14.2)	961 (8.4)	5,425 (47.4)	2,916 (25.5)	517 (4.5)
전북	전체	915 (100.0)	239 (26.1)	70 (7.7)	386 (42.2)	155 (16.9)	64 (7.0)
	남성	526 (100.0)	180 (34.2)	10 (1.9)	236 (44.9)	61 (11.6)	40 (7.6)
	여성	388 (100.0)	59 (15.2)	60 (15.5)	151 (38.9)	94 (24.2)	24 (6.2)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2018

- 성별에 따른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 대비 적은 금액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전북지역 일용근로자의 경우 남성 임금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6〉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 (2018)
(단위 : 시간, 만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국	전체	41.73	308.69	146.93	153.07
	남성	44.10	355.54	179.52	183.92
	여성	38.55	237.74	125.28	93.49
전북	전체	40.18	286.33	131.53	157.70
	남성	42.50	323.11	151.02	183.76
	여성	37.08	229.03	119.03	98.3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8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전북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고, 특히 청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1.1%)은 전국 청년여성(65.7%)과 전북 청년남성(63.4%)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25~29세 연령대 청년여성 미취업률은 전국(28.5%) 대비 전북(45.2%) 격차가 16.7%로 크게 나타나, 졸업 후 청년여성 미취업과 노동시장 이행 문제에 관한 대응이 요청된다.
- 전북 청년 여성은 목표 직업유형으로 ‘보건·의료 관련직’을 1/3 이상이 선택하여, 전국 여성 대비 1.5배 정도 높게 특정 직업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 등에 기인하여, 이를 보완 극복할 수 있는 취업준비 전략 제공이 필요하다(조경옥b 2020).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의 도민조사와 FGI 결과는 여성정책 우선의 대상으로 청년여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전북지역 미래 위기의 1순위를 ‘인구감소’, 2순위를 ‘저출산·고령화’라고 한 응답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북도민은 청년여성의 인

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의 취업 및 정주여건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지원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망 및 과제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일·생활균형 확대가 요청된다. 전북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른 구직활동시의 어려움으로 ‘일자리 자체가 없다’거나 혹은 ‘원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서, 일자리 확대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7〉 구직활동 시 어려움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일자리 자체가 없다	152	69	186.5
원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없다	146	117	204.5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	99	88	143
임금수준이 너무 낮다	66	93	112.5
기술, 기능, 경력이 부족하다	50	47	73.5
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11	42	32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12	14	19
취업정보가 부족하다	10	76	48
가사·양육·돌봄의 책임으로 시간이 없다	55	55	82.5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Ⅰ), 전북연구원, 2020

- 특히 4차 산업의 등장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로 다양한 고용형태와 새로운 일자리 등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성평등한 일자리 제도와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일자리 개발과 유연한 일자리, 여성일자리 환경 개선, 성평등한 고용이 요청된다.
- 전북에서 전략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업무 관련

전문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 필요하고, 평등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동권을 비롯한 처우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취업유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 사업 확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균형제도 확산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서 세대별로 요구사항이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20-30대의 경우는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육아휴직에 확대’를 언급하고 있고, 60대 이상은 ‘직업훈련 기회 확대’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8〉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연령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χ^2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30 24.19%	43 27.92%	27 37.50%	32.49**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강화	22 17.74%	18 11.69%	12 16.67%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확대	26 20.97%	27 17.53%	7 9.72%	
공공보육시설 확대	11 8.87%	15 9.74%	5 6.94%	
유연근무제(시차근무제, 재택근무 등) 확대	13 10.48%	17 11.04%	1 1.39%	
창업지원(공간, 자금, 컨설팅 등)	6 4.84%	7 4.55%	3 4.17%	
노인 간병 및 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	2 1.61%	4 2.60%	9 12.50%	
지역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13 10.48%	19 12.34%	5 6.94%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1 0.81%	4 2.60%	3 4.17%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Ⅰ), 전북연구원, 2020

3) 중점 정책방향

- 여성 취·창업 역량강화와 여성친화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신성장 동력 산업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등이 중점적인 정책방향 기초가 되어야 하고, 젠더, 계층 세대의 다양한 성원이 미래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이 필요하다.

- 여성 일자리 확대에 있어, 청년 여성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보유여성으로의 여성 노동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과 성평등한 노동행정체계 마련 등이 요청된다.

다. 일·생활 균형 기반

1) 현황 및 인식

-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일·생활균형 지수를 개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일·생활균형 지수의 전국 평균은 2017년 기준 37.1점에서 시작되어 2019년 50.5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북의 경우는 2019년 47.4로 중하위권에 위치하였다. 2019년 일·생활균형 지수를 영역별로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는 일 영역 12점, 생활 영역 15.4점, 제도 영역 10.5점, 지자체 관심도 영역 9.4점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제도 영역에서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9〉 전국 및 전북 2019년 일·생활 균형 지수

(단위 : 점)

	계 (100.0점)	일 (22.1점)	생활 (30.1점)	제도 (25.0점)	지자체 관심도 (22.8점)
전국	50.5	12.0	15.6	13.4	9.5
전북	47.4	12.0	15.4	10.5	9.4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2020.12.31., 조경욱 외 2021 재인용

-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은 2020년 기준 전국 평균은 163.4시간인데, 전라북도의 경우, 167.2시간으로 17개 시도 중 충북(168.7시간), 경남(168.4시간), 울산·충남(168.1시간)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길게 나타났다.

〈표 2-50〉 전국 및 전북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단위 : 시간)

	2011						2020					
	계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계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전국	187.1	189.4	189.2	189.2	187.5	180.6	163.4	161.3	164.6	166.9	163.5	160.3
전북	191.1	188.6	191.1	186.7	198.0	194.3	167.2	167.5	163.6	171.6	166.9	166.9

주 : 1규모-5~9인, 2규모-10~29인, 3규모-30~99인, 4규모-100~299인, 5규모-300인 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조경욱 외 2021 재인용

- 전라북도의 경우 근무시간은 긴 반면, 휴가사용 비율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근로자별 휴가사용률은 처음 조사된 2016년 64.2%에서 2018년 68.1%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2019년 55.3%, 2020년 43.3%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의 휴가사용의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전라북도는 2016년 48.8%, 2018년 59.0%, 2019년 47.8%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24.5%만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휴가 사용률은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특히 2020년의 경우 전라북도의 휴가 사용률이 전국 최저로 조사되었다. 휴가일수 역시 17개시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1〉 전국 및 전북 휴가 사용률과 휴가 일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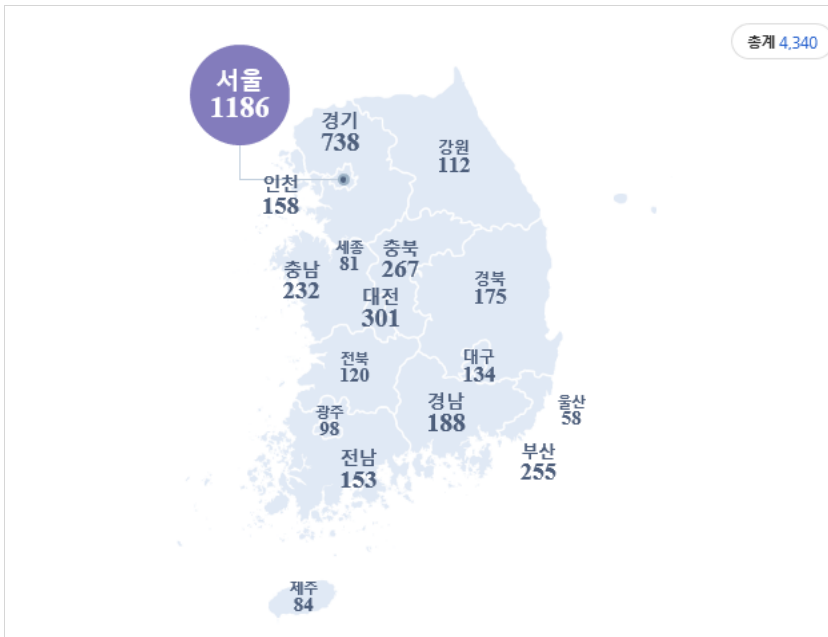
(단위 : %, 일)

	2016		2018		2019		2020	
	휴가 사용률	휴가일수	휴가 사용률	휴가일수	휴가 사용률	휴가일수	휴가 사용률	휴가일수
전국	64.2	5.9	68.1	5.4	55.3	6.4	43.3	5.9
전북	48.8	4.6	59.0	4.4	47.8	6.1	24.5	5.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조경욱 2021 재인용

- 전라북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총 120개소로 전국의 4,340개소의 2.8%에 그쳐,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활발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개소)



주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ffsb.kr/>)
2020년 12월 기준, 조경욱 2021 재인용

〈그림 2-19〉 시도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현황

- 전국 육아휴직 이용자는 2020년 기준 237,592명이고, 전체 이용자 중 남성은 1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여성이 다수이지만, 2015년 대비 남성의 육아휴직이 확대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2010년 1,171명에 불과하던 육아휴직자가 2020년에는 4,75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이용자는 17.6%로 전국평균보단 낮은 모습을 보인다.

〈표 2-52〉 전국 및 전북 육아휴직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2010			2015			2020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국	65,439	1,069	64,370	172,514	7,904	164,610	237,592	46,096	191,496
전북	1,171	16	1,155	3,337	140	3,197	4,750	834	3,91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조경욱 2021 재인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2020년 기준 18,618명이며 그 중 남성은 약 11.4%에 해당한다. 2011년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에는 이용자가 7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2020년에 총 397명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이 중 남성은 59명, 여성은 338명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남성 이용자의 비율은 14.4%로 전국 평균 남성 비율 11.4%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5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2012			2015			2020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국	480	23	457	2,740	236	2,504	18,618	2,123	16,495
전북	6	0	6	63	7	56	397	59	338

주 : 육아기근로단축제도는 2011년부터 시작됐으나 해당 연도에는 8개 지역 40명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부터 추이를 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조경욱 2021 재인용

2) 전망 및 과제

- 전라북도의 경우,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이 전국에 비해 긴 반면, 휴가 사용률과 휴가사용일수는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타 지역 대비 장기간 노동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휴가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노동에 대한 지역 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 이러한 노동문화의 변화는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수립 전략(1)」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도민들은 여성이 살기 좋은 전북이 되기 위해서는 일·생활균형의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즉 일·생활균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과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의무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순으로 높게 나타나 가정 내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 조건 유연화에 대한 욕구가 높

게 나타나고 있었다.

- 결국은 이미 제도화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 아빠의 육아참여 제고, 양육참여에 대한 기업 문화 개선 및 가사·자녀 양육 분담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성평등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2-54〉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점)

구분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점수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의무화	180	73	216.5
사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165	119	224.5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91	94	138
장시간 노동환경 개선	56	95	103.5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강화	46	98	95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인식의 확산	60	118	119

자료 :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Ⅰ), 전북연구원, 2020

3) 중점 정책방향

-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자녀출산과 양육시기의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전체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한 대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전라북도 특성상 소규모 기업 비중이 높아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어려움이 존재하니, 가족친화기업 인증이나 청년친화강소기업 등의 성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특히, 성별/세대별의 인식차이나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 따른 견해차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성평등 관점의 일·생활균형 문화를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워라밸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장

전라북도 도정 현황 분석

Jeonbuk Institute

-
1. 전북도의 조직 및 인력 현황
 2. 전북도의 예산 전반의 현황
 3. 전북도의 도정 방향 및 역점 시책
 4. 전북 도정 현황의 특성
 5. 전북 도정 성평등 관점의 과제

제 3 장 전라북도 도정 현황 분석

제 1 절 전북도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전라북도 전반의 조직 현황

- 전라북도 본청의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크게 9국, 2실, 2부, 3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9국은 자치행정국,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혁신성장산업국,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있고 2실로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2본부는 일자리경제본부, 소방본부이며, 3관으로는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 53과 3단(대도약기획단, 잼버리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으로 구성된다.
- 전라북도 본청에서 함께하는 인력은 2021년 1월 기준 5,011명으로 나타나, 일반직은 2,071명이며, 13개 소방서의 3,138명에 이른다.
- 전라북도청 산하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총 13개소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북도서울본부, 농식품인력개발원,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어린이창의체험관, 도립국악원, 도로관리사업소, 도립미술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다. 이외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북도서울본부
농식품인력개발원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어린이창의체험관	도립국악원	도로관리사업소	도립미술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자료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https://www.jeonbuk.go.kr/>)

〈그림 3-1〉 전라북도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현황



자료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https://www.jeonbuk.go.kr/>)

〈그림 3-2〉 전라북도청 조직 현황

나. 2021년 복지여성보건국 및 여성청소년과 조직·인력 현황

- 2021년 1월 기준 전라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총 6개 과, 24개 팀 및 2개 사업소로 구성된다. 6개 과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이며 사업소 2개는 ‘도립여성중고등학교’와 ‘어린이창의체험관’이다.
- 복지여성보건국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은 총 137명이며 사업소인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력 7명, 어린이창의체험관 인력 10명을 제외한 120명이 실제 복지여성보건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된 ‘보건의료과’는 28명,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담당 인력은 26명, ‘여성청소년과’와 ‘건강안전과’는 각각 20명씩, ‘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는 각각 13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는 ‘여성청소년과’이며 ‘여성청소년과’는 4개의 팀(여성정책, 여성권익, 청소년, 출산아동) 총 2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여성정책팀’은 팀장 이외 3명의 주무관과 1명의 기간제 인력 인 총 5명이 배치되어 있다.



※ 본청 24개 팀, 사업소 3개팀

자료 : 전라북도 업무계획 내부자료

〈그림 3-3〉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조직 현황

〈표 3-1〉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의 인력 현황(2021년 1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본 청							사 업 소		
		소계	사 회 복지과	여 성 청소년과	노 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보 건 의료과	건 강 안전과	소계	도립여성 중고등학교	어린이 창의체험관
정 원	138	121	27	20	13	13	27	21	17	7	10
현 원	137	120	26	20	13	13	28	20	17	7	10
증 감	△1	△1	△1	-	-	-	1	△1	-	-	-

자료 : 전라북도 업무계획(2021년) 내부자료

〈표 3-2〉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인력 현황(2021년 1월 기준)

구분	여성청소년과 (과장 1인)				소계
	여성 정책	여성 권익	청소년	아동 보호	
인력 구성	팀장 1인 주무관 3인	팀장 1인 주무관 4인	팀장 1인 주무관 3인	팀장 1인 주무관 5인	20

자료 : 전라북도 업무계획 내부자료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내 여성정책 팀의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양성평등정책 종합평가 총괄, 그리고 전라북도 성평등위원회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1인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관리·지도감독,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 및 추진, 전북·광역·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과 관리·감독, 여성회관 사업 추진,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시행, 여성경제활동촉진계획 수립·시행,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협의회 운영 등을 담당하는 주무관 1인 이외 여성통계연보 관리와 예산과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1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여성청소년과 내 여성권익팀의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공동협력 및 사회단체 보조사업, 성평등기금 운영관리 및 여성단체 육성지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여성권익증진 사업 추진 등을 담당하는 주무관 1인과 해바라기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여성폭력방지 통합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지도감독,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출상담창구 운영 및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및 운영위원회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지원·운영,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운영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2인 등이 있다. 이에 여성정책 관련 실질적인 담당자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여성정책, 여성권익) 2인 이외 주무관 4인으로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 추진부서 인력 현황

- 전라북도의 인구 규모와 현황이 유사한 지자체라 할 수 있는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추진부서와 인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 먼저 강원도의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추진부서와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도 전라북도의 행정부서와 유사하게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여성정책팀’과 ‘여성복지팀’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전라북도 행정부서와 다른 부분은 일자리국에서 ‘여성장애인일자리과’를 별도로 구분하여 여성장애인정책팀에서 여성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하고 여성일자리 관련 업무로 여성일자리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평가 및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참여 및 구직활동지원, 특별지원사업 추진,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보건복지여성국 내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총 4개 팀(여성정책, 여성복지, 다문화가족,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정책팀의 업무는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육성, 양성평등기금 운용·관리, 양성평등위원회 관리·운영, 성인지 교육,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지속 제고 등의 담당 주무관 3인과 더불어 여성복지팀의 업무인 4대 폭력 예방사업, 여성단체 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주무관 3인이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다.



자료 :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s://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3_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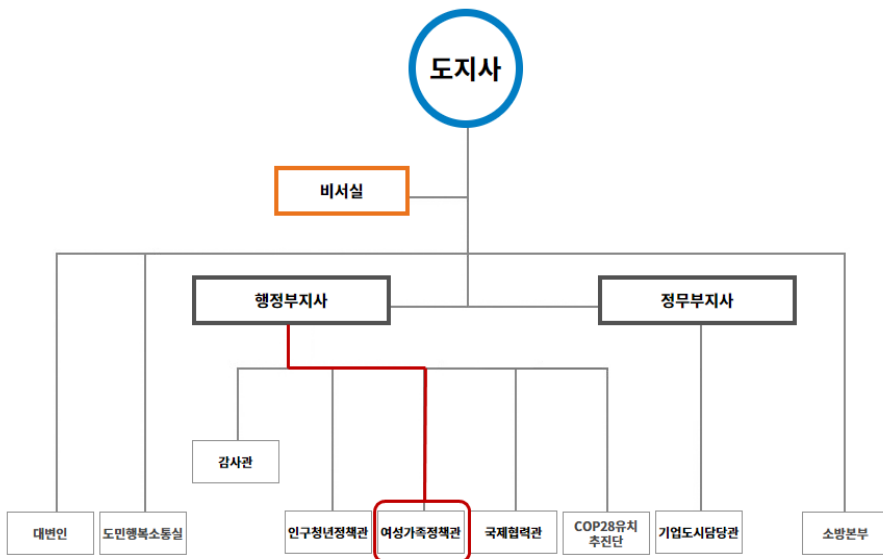
〈그림 3-4〉 강원도 조직 현황

〈표 3-3〉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인력 현황(2021년 1월 기준)

구분	여성청소년가족과 (과장 1인)				여성장애인일자리과 (과장 1인)		소계
	여성정책팀	여성복지팀	다문화가족팀	청소년팀	여성장애인정책	여성일자리팀	
인력 구성	팀장 1인 주무관 3인	팀장 1인 주무관 3인	팀장 1인 주무관 2인	팀장 1인 주무관 4인	담당관 1인 주무관 2인	팀장 1인 주무관 2인	24명

자료 : 강원도 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 다음으로 전라남도의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추진부서와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부지사 직속 산하 기관인 여성가족정책관이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 담당하고 있다.
- 전라남도의 여성가족정책관은 5개 팀(여성정책팀, 보육지원팀, 아동복지팀, 가족행복팀, 다문화가족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명의 인력이 관련 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여성가족정책관 내 ‘여성정책팀’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팀장이 여성정책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여성정책 일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단체지원 및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정책 등의 업무를 주무관 4인이 담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행복팀에서 성폭력시설 운영지원 및 가정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과 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주무관 2인이 담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은 팀장 2명과 주무관 6명 이외 정책관과 지원관 2인을 포함하여 총 10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료 : 전라남도청 홈페이지(<https://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jeonnam0601010000>)

〈그림 3-5〉 전라남도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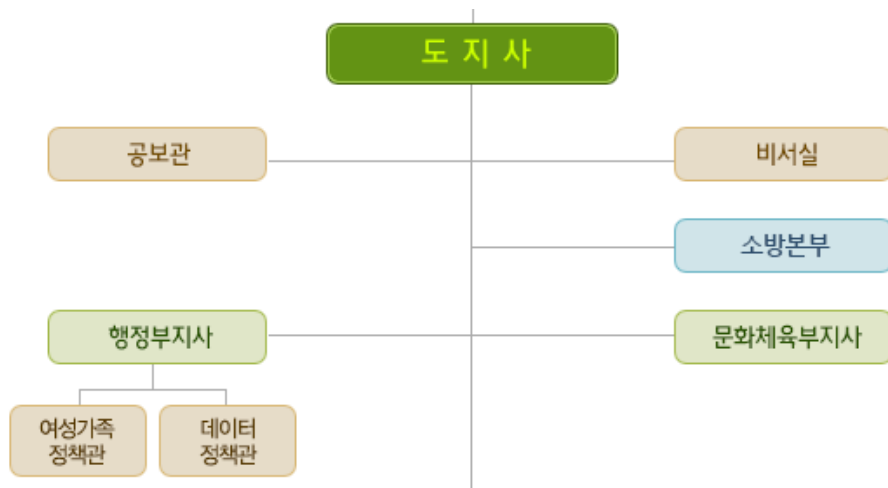
〈표 3-4〉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인력 현황(2021년 1월 기준)

구분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1인, 지원관 1인)					소계
	여성정책팀	보육지원팀	아동복지팀	가족행복팀	다문화팀	
인력 구성	팀장 1인 주무관 4인	팀장 1인 주무관 3인	팀장 1인 주무관 3인	팀장 1인 주무관 3인	팀장 1인 주무관 2인 공무직 1인	23명

자료 : 전라남도 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 충청남도의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추진부서와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전라남도, 충청북도와 동일하게 행정부지사 직속 산하 기관인 여성가족정책관이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 담당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여성가족정책관은 5개 팀(여성정책팀, 양성평등팀, 여성권익팀, 가족다문화정책팀, 청소년정책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명의 인력이 관련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다.
- 여성가족정책관 내 ‘여성정책팀’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팀장이 업무 종합 기획 및 조정, 여성정책분야 소관 업무 총괄 및 각종위원 위촉 확대와 더불어 여성 전문인력 발굴 관리를 하고 있고, 여성사회참여확대 사업 추진, 여성친화도시 지원, 여성단체 및 여성포럼 지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지원,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업무를 주무관 5인이 담당 추진하고 있다.
- 양성평등팀의 팀장은 양성평등 비전 실행 및 교육홍보 등 총괄 조정 관리를 하며, 그 외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양성평등시행계획 종합 추진 및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경력단절 경제활동 촉진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 여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추진, 지역새일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및 기능강화, 양성평등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양성평등 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성 운영, 양성평등 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발, 강사진 인력풀 관리 구성 및 관리 및 성평등지수 향상 대책 추진 등의 업무를 주무관 3인이 담당 추진하고 있다.
- 또한 권익보호팀에서는 성매매방지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직장 내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여성권익시설 지원·관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디지털성폭력 대응 통합지원 구축 총괄, 여성긴급 1366센터 운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해바라기센터 운영·관리 등의 의 업무를 팀장 이외 주무관 3인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은 팀장 3명과 주무관 11명 이외 정책관 1인을 포함하여 총 15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료 : 충청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8100/cnnet/content.do?mnu_cd=CNMMENU00939)

〈그림 3-6〉 충청남도 조직 현황

〈표 3-5〉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인력 현황(2021년 1월 기준)

구분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1인)					소계
	여성정책팀	양성평등팀	권익보호팀	가족다문화정책	청소년정책	
인력 구성	팀장 1인 주무관 5인 공무직 1인	팀장 1인 주무관 3인	팀장 1인 주무관 3인	팀장 1인 주무관 4인	팀장 1인 주무관 5인 공무직 1인	28명

자료 : 충청남도 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 충청북도의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추진부서와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부지사 직속 산하 기관인 여성가족정책관이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 담당하고 있다.

- 충청북도의 여성가족정책관은 5개 팀(여성정책팀, 여성권익팀, 일가족지원팀, 청소년팀, 및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명의 인력이 관련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다.



자료 : 충청북도청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478>)

〈그림 3-7〉 충청북도 조직 현황

〈표 3-6〉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인력 현황(2021년 1월 기준)

구분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1인)					소계
	여성정책팀	여성권익팀	일가족지원팀	청소년팀	미래여성플라자	
인력 구성	팀장 1인 주무관 4인	팀장 1인 주무관 3인	팀장 1인 주무관 4인	팀장 1인 사무국장 1인 주무관 4인	시설관리팀장 1인 주무관 5인 사무관 1인	23명

자료 : 충청북도 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 여성가족정책관 내 ‘여성정책팀’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팀장이 여성정책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하며,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시행, 여성재단 운영지원, 여성단체 지원업무, 양성평등기금관리 등의 업무를 주무관 4인이 담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권익팀의 팀장은 여성권익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폭력피해자 지원, 성별영

향평가, 성인지교육, 성평등정책 및 가정·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지원 등의 업무를 주무관 3인이 담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충청북도의 여성가족정책관은 일가족지원팀을 별도 구성하여 충북여성일자리플랫폼 사업, 여성인턴제 운영 및 여성창업지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새일센터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팀장 이외 주무관 2인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은 팀장 3명과 주무관 9명 이외 정책관 1인을 포함하여 총 10명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무엇보다 충청북도의 여성가족정책관 행정부서의 특징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교육 및 성평등 정책 관련 담당 주무관과 일가족지원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전문적으로 성별영향과 성인지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일자리 관련 사업도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음에 있다.
- 이외 광역시 이외 광역자치도의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추진부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라북도 이외 강원도, 경상북도만이 ‘과’ 차원의 추진부서가 담당하고 있고 그 외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국 차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도는 ‘관’ 차원의 행정부서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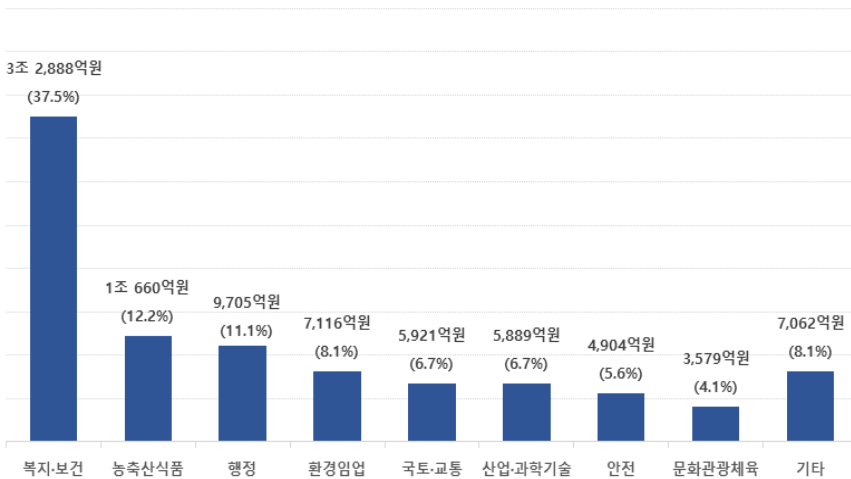
〈표 3-7〉 광역도차원의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추진부서 현황(2021년 11월 기준)

구분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추진 부서	
경 기 도	여성가족국	5개과(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과,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 일가정지원과) ◇ 여성정책과 : 여성기획팀, 여성정책개발팀, 양성평등정책팀, 여성폭력예방팀, 여성권익지원팀, 법인시설팀 여성정책자문관
강 원 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여성청소년가족과 4개팀(여성정책팀, 여성복지팀, 다문화가족팀, 청소년팀) 여성장애인일자리과 2개팀(여성일자리팀, 장애인일자리팀)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5개팀(여성정책팀, 여성권익팀, 일자리지원팀, 청소년팀, 미래여성플라자 관리 팀)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5개 팀(여성정책팀, 양성평등팀, 권익보호팀, 가족다문화정책팀, 청소년정책팀)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5개 팀(여성정책팀, 보육지원팀, 아동복지팀, 가족행복팀, 다문화팀)
경상북도	여성가족행복과	4개 팀(여성정책팀, 양성평등팀, 가족복지팀, 다문화가족팀)
경상남도	여성가족아동국	3개 과(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 여성정책과 : 여성정책팀, 여성지원팀, 여성일자리팀, 여성권익팀
제 주 도	성평등정책관	3개 팀(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제 2 절 전북도의 예산 전반의 현황

가. 2021년 전북도 전반의 예산

- 전라북도의 2021년 예산은 8조 7,724억 원이다. 그 중 일반회계가 7조 1,315억 원, 특별회계 8,823억 원, 기금 7,586억 원으로, 기능별 예산을 확인해보면, 복지·보건 분야의 예산이 3조 2,888억 원(37.5%)로 가장 많고, 농축산식품 분야 1조 660억 원(12.2%), 행정 분야 9,705억 원(11.1%), 환경임업 분야 7,116억 원(8.1%)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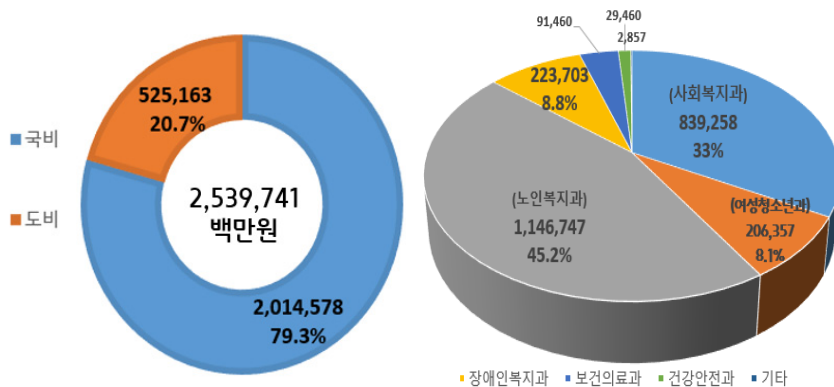


자료 : 2021 주요업무계획, 전라북도

〈그림 3-8〉 2021년 전라북도 분야별 예산 현황

나. 2021년 복지여성보건국 예산 현황

- 전라북도 전체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보건 분야에 해당되는 복지여성보건국의 예산은 2021년 기준 3조 942억 원이며, 이 예산은 국비 79.3%, 도비 20.7%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 2021 주요업무계획, 전라북도

〈그림 3-9〉 2021년 일반회계의 복지여성보건국 국·도비 및 과별 예산 현황

- 복지여성보건국의 예산(3조 942억 원)은 전북도의 일반회계 2조 5,397억원(도 일반회계 7조 1,315억원의 35.6%)과 특별회계 5,545억원, 그리고 5개 기금(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246억원을 포함한 예산이다. 21년 성평등기금은 3,32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전라북도 2021년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 2조 5,397억 원은 전년 대비 163,669백만 원(약 6.9%) 증가하였고, 과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과 한 해 예산은 839,258백만원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의 33%를 차지하였고 사회복지과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0% 이상은 국비로 나타났다. 여성청소년과의 '21년 한 해 일반회계 예산은 206,357백만원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8.1%를 차지하였고 여성청소년과 전체 예산의 약 73% 이상이 국비로 나타났다.
- 노인복지과 한 해 예산은 1,146,747백만원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5.2%를 차지하여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한 해 예산의 약 88%가 국비로 나타났다.
- 그 외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223,703백만원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의 8.8%를 차지하였고, 보건의료과 예산은 91,359백만원(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의 3.6% 차지), 건강안전과 예산은 29,460백만원(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의 1.2% 차지)으로 나타났다.

- 복지여성보건국의 6개 과의 예산 규모 중 국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과는 노인복지과(국비 비율 88%)였고, 그 다음이 장애인복지과(국비 비율 80%), 건강안전과(국비 비율 78%), 여성청소년과(국비 비율 73.14%) 순으로 나타났다.

제3절 전북도의 도정 방향 및 역점 시책

가. 2021년 도정 운영 방향

- 2021년 전북도 도정 방향을 보면, ‘아름다운 생명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이란 비전과 더불어 5대 도정 목표와 16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 5대 도정 목표로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산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 그리고 안전복지 환경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 특히 2021년 도정은 생태문명시대 구현을 위한 11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즉 생태문명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① 탄소중립 체계 구축과 3대 유해환경개선, ②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와 클러스터 구축, ③ 미래 친환경 상용차 산업 본격 추진, ④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생태계 구축, ⑤ 군산 등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성과 창출, ⑥ 금융산업 생태계 구축과 금융중심지 여건 조성, ⑦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⑧ 청정관광 전북형 여행, 체험콘텐츠 강화, ⑨ 새만금세계잼버리와 아태 마스터스 준비 철저, ⑩ 새만금 Tri-port 구축과 내부개발 가속화, ⑪ 생활의 과학화와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등 11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아름다운 생명山河, 천년전북!



안전한 전북	①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 실현
	②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한 전북 구현
잘사는 전북	③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으로 희망의 전북 토대 구축
	④ 전북형 그린, 디지털 뉴딜 적극 추진
	⑤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
가고싶은 전북	⑥ 삼각농정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선도
	⑦ 역사문화, 생태여행체험 활성화
행복한 전북	⑧ 복지체계 구축과 균형있고 따뜻한 전북 구현
글로벌 전북	⑨ 본격적인 새만금개발과 세계잼버리 철저한 준비

자료 : 2021 주요업무계획, 전라북도

〈그림 3-10〉 2021년 전라북도 도정 운영 방향

나. 2021년 도정 역점 시책

- 2021년도 전북도청의 역점 시책은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35개의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염병과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코로나 예방·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두 번째 역점시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저탄소,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개선 및 숲 조성과 물 복지 실현을 통한 청정전북 구현에 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세 번째 역점 시책은 4차 산업을 위한 미래차,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기반 강화 및 육성 및 실용화 실현에 초점이 맞춰 있으며, 네 번째는 전북형 뉴딜 추진 내용이다. 다섯 번째는 전북 지역 특화 일자리, 생애주기별 일자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지원 및 사회적경제 성장 기반 구축 등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에 초점이 놓여있다.
- 여섯 번째는 전북이 농촌기반 지역이기에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관련 내용과 농촌마을과 도농융합상생 실현에 주요 내용이 맞춰져 있으며, 일곱 번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춤 역사문화, 생태여행체험 및 치유공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그리고 여덟 번째가 복지체계 구축과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및 도민 건강과 인권존중 등에 대한 따듯한 전북 구현을 위한 내용이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전북의 대표지역인 새만금 개발과 잼버리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1년도 9개의 전라북도 역점 시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책 명과 주요 내용 안에 성평등적(젠더) 관점이나 내용이 부재하며, 무엇보다 여성 관련 시책이나 주요 내용 또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전라북도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측면의 부족과 더불어 성평등정책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3-8〉 역점 시책별 세부 계획

연번	2021년 역점시책	주요 내용
1	(감염병과 재해재난 위기 대응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 실현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관리 • 통합적 재난안전 강화, 생활안전문화 확산 • 자연재난 대응능력 강화 • 일상의 안전을 넘어 감동의 119안심서비스 제공
2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조성으로 청정한 전북 구현	•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청정전북 구현 • 악취, 미세먼지, 폐기물 등 유해환경 개선 • 숨이 있는 숲 조성, 물 복지 실현
3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차,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으로 희망의 전북 토대 구축	• 4차산업혁명 대비 신산업기반 마련 • 주력산업 미래경쟁력 및 ICT산업기반 강화 • 도민체감 탄소산업 상용화 실현 •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그린뉴딜 선도
4	그린, 디지털, 지역균형 등 전북형 뉴딜 적극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위한 그린뉴딜 전북 실현 •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 전북 구현 •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행복 전북 실현
5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로 안정된 전북경제 현실과	• 지역 특화 일자리 및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 전략적 투자유치와 금융산업 육성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구축 및 단계적 성장지원
6	삼각농정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선도하는 전북 본격 추진	•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구축 • 위기에 강한 농업, 삼각농정을 통해 실현 • 더불어 사는 농촌마을과 도농융합상생 실현 • 농가소득은 높이고, 농업환경은 깨끗하게 조성
7	역사문화, 생태여행체험 활성화로 포스트코로나시대 최고의 치유공간화	• 안전하게 더 머물고 싶은 생태여행 활성화 •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으로 전북정체성 확립 • 문화기반시설확충과 문화향유기회확대 • 건강하고 활기찬 스포츠 환경 조성
8	복지체계 구축과 균형 있고 따뜻한 전북 구현	•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전라북도 조성 •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도민건강 강화 • 인권존중, 나눔과 협력으로 따뜻한 사회 조성 • 입체적이고 편리한 교통체계 마련 •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
9	본격적인 새만금개발과 세계잼버리 철저한 준비	•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및 투자유치 주력 • 내실있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추진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 박차

자료 : 2021 주요업무계획, 전라북도

제 4 절 전북 도정 현황의 특성

- **(조직 및 인력 현황)** 전라북도 본청은 9국, 2실, 2부, 3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여성·가족정책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 추진은 복지여성보 건국 내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 과 등의 담당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본청에서 함께하는 인력 총원은 5,011명이며 이중 일반직 2,071명, 복 지 65명, 소방직 3,138명이다. 전북 도청의 복지직 65명은 타 도(경기, 강원 등 9개도)의 평균 복지직 공무원 정원인 144명에서 79명이나 부족 한 상황이다. 또한, 본청 총 공무원 정원 5,011명 중 복지여성보건국 업 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120명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예산 현황)** 21년 전라북도 총 예산은 8조 7,724억 원이며 이 중 복지와 보건 분야의 예산은 3조 2,888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약 37.5%를 차지 하고 있다.
- **(도정 현황)** 전라북도 도정 운영 방향(비전, 5대 도정목표, 16개 핵심 전 략) 및 2021년 주요 역점 시책 9개와 11대 핵심프로젝트 내용을 살펴보 면, 미래시장을 위한 신산업(수소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기반 강화 및 전 북 도민의 일자리 마련과 전북 지역 산업 기반 조성 마련 등 주요 일거리 와 먹거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반면, 전라북도의 가장 핵심 이슈이며 전북도민이 미래의 가장 큰 위험으 로 인식하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및 저출산·고령화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저출산 극복 관련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성인지 관점의 정책 내용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단지 기획조정실 내 대도약기획단의 인구정책혁신팀과 복지여성보건국 내 여성청소년과의 출산아동팀에서 지방소멸과 (초)저출산 극복 관련 정 책을 추진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
- 또한, 2021년도 전라북도 역점 시책 9개의 시책명과 주요 내용 안에 성 평등적(젠더) 관점이나 내용이 부재하여 전라북도의 (양)성평등정책에 대 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 5 절 전북 도정 성평등 관점의 과제

- 전라북도의 가장 큰 이슈이자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과제는 지속적인 초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소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타 시도 유출, 결혼 기피로 만혼과 비혼 증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초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 도와 기초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저조한 상황이다.
- 이에 출산을 반등과 청년층 유입 및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여러 선진국들(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 등)이 이미 정책적 실효성을 검증한 양성평등적 관점 하에서의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조성, 가족정책 및 성평등·성인지 관점의 정책에 대한 관심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
- 청년여성들의 지역 정주여건의 향상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 발생에 따라 돌봄을 지역 사회적 공유하는 지역기반의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1인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친족 이외의 성원으로 구성된 가구 등의 증가로 다양성을 허용하는 맞춤형 가족정책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 발생에 따라 돌봄을 지역 사회적 공유하는 지역기반의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다음으로 여전한 성별 임금격차, 높은 비정규직 비중, 상대적으로 높은 저임금노동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유연한 예비노동력으로 불경기에는 쉽게 그리고 빠르게 퇴출되고 있다.
- 이에 여성만을 목표로 한 일자리 정책(여성 특화 일자리 및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혁명 등 미래변화 대응 여성일자리 발굴과 인력양성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성에 초점을 둔 창업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4차산업 영역 여성일자리 발굴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여성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여성대상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취·창업지원 대책이 요청되는데 이는 전북의 인구정

책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 전라북도 도정 중 농생명산업, 삼락농정 등 농업 관련 내용이 주요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이 전체의 50%를 넘었음에도 낮은 지위와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가벼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반면,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농업인 관련 전담팀이 구성되었고, '03년부터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및 관련 다양한 지원정책이 중앙에서부터 추진되고 있음에도 전북도 차원에서는 여성농업인 관련 전담팀조차 부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전북 5대 정책목표 중 가장 첫 번째인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추진 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여성농업인 관련 중점 추진 정책과 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
- 문화·예술 및 관광 측면에서는 문화·관광 정책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평가지표 개발·적용이 필요하며, 예술·문화 측면에서 성차별 금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여성 문화·예술 활동가의 통계DB와 일자리 플랫폼 구축들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와 예술로 작품 창출 시 다양한 형태로 성평등을 나타내기 위해 문화 및 예술인 대상 젠더감수성 교육의 무화, 문화예술관련 작업장 내 젠더 문제 관련 소통 창구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이 요청된다.
- 도시재생사업과 새만금개발, 혁신도시의 인프라 확대 과정에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도시설계 단계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통해 범죄로부터의 안전, 이동의 자유, 사회적 약자의 교통편의 증가를 도모하며 여성친화적, 아동 및 사회적 약자 친화적 도시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1인 가구 여성 및 청년,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 2023년 새만금에서의 세계잼버리를 위해 전북도청과 부안 및 관련 인근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인프라 등을 건립 시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적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과 건물 및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예방 중심적인 선제적 도민안전체계 확립과 세대별·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응시스템 마련이 요청된다. 성별, 세대별 맞춤형 재난 및 위기상황 대응 훈련 강화하고, 여성 및 아동·청소년 관련 폭력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실행기관 등도 마련해야 한다. 즉 전라북도의 도정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전망해보면서 성평등한 정책 방향성을 이끌어내고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도정 전반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을 확장하고, 예를 들어 외부에서 젠더전문가를 영입하여 각 부서별 성평등 실행 목표 설정 및 부서 간 성평등 관련 정책 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반의 성주류화 확산 및 성평등한 점검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확산과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장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실현방안

Jeonbuk Institute

-
1. 전북 도민의 인식 변화와 특성
 2.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3. 인권 존중의 안심공동체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4. 일 생활 균형 기반 조성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제 4 장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실현방안

- 제4장에서는 전북 도민의 인식 변화에 따른 특성을 항목별로 정리하였고, 전북 도민의 인식 변화 특성에 따른 내용을 기반으로 도출한 1차년도 연구의 3대 정책목표와 10대 추진전략을 토대로 2021년 전라북도 도정 현황 및 행정부서별 업무계획 자료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분석하였다.
- 다음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 분석한 전북 도정 자료를 기반으로 전북 도청 행정부서별 담당자와의 심층면접조사와 현장·학계 전문가 대상의 자문회의 및 미래비전 포럼 등을 통해 10대 추진 전략별 개선 방안과 향후 실천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제 1 절 전북 도민의 인식 변화와 특성

가.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욕구

- 전북 도민에게 있어 여성·가족정책 중 핵심 분야는 ‘일·생활균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열망이 높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요구, 육아휴직·출산휴가의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 공공보육시설의 확대 등 양육지원제도 대한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의무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음을 볼 수 있었다.
- 특히, 전라북도에 일자리 자체가 없고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으며,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 여성들이 인식하는 전북지역의 시급한 과제는 ‘차별 없는 양성평등 의식

과 문화 확산'으로, 도민조사와 FGI조사 결과는 전북지역의 가부장적 문화와 성 고정관념이 여성의 일자리참여를 제한하고 청년여성들의 전북정주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여성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국 기준에 비해 매우 낮고, 부부갈등의 기저에는 여성들의 진일보한 성평등 의식에 반해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에 젖어있는 남성들과의 가치관 및 생활방식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미래산업에의 여성참여 증진을 위해서도 여성인력에 대한 성 고정관념 변화 및 기업들의 여성인식 변화라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 내 성평등문화 확산, 기업들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지역의 가부장적 문화 및 성 고정관념 타파를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요청된다.

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 정책 필요

- 전북지역은 1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친족 이외의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 등이 증가하여 가족의 다양성이 증가되고 있다. 여성 1인가구 및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가구형태 중 1인가구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자녀에 의한 부양의 기대가 매우 낮아 가족관계의 변화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청년여성 및 결혼이주여성 관련해 가족과 사회의 낮은 성평등 의식 개선, 전북의 정주환경 개선 전략이 요청된다.

다.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욕구

- 가족에 의한 돌봄이 아닌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돌봄에 대한 가족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대한 요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아동돌봄과 관련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 센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욕구가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돌봄은 더 이상 가족기능이 아닌 이웃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기반의 사회적 돌봄을 희망하고 있었다.

라. 인권존중의 안전한 지역사회에 대한 욕구

- 아동학대 증가와 전통적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의 증대, 이주 여성에의 폭력 증가에 따라 폭력예방 및 대응선제 시스템 구축과 강화 욕구와 피해자의 자활기반 확충욕구 증대되고 있다.
- 이와 함께 빈곤 아동·청소년 증가와 지역을 떠나는 농촌지역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독거노인 등 빈곤 1인가구의 증가, 장애인 인권침해, 성매매 이탈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마. 미래의 핵심적 위기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미래의 희망은 청년여성과 아동·청소년

- 여성·가족 정책과 비전수립에 있어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대상으로 청년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전북 미래의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순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 아동청소년의 성장기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파악된다.
- 청년여성들을 위한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성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과 청년층 주거복지,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에서 시작된다. 조직 내 리더 양성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와 젊은 여성들의 경우 경력 단절 예방을 강화가 요청된다.

바. 여성인재 발굴 및 여성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 여성정책 컨트롤 타워의 구축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도정 전반에 확산하고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정치분야 의사결정 강화는 여성 정치후보자 발굴 및 육성이 필수적이고,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의 발굴 및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 제공과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 전북의 미래를 위한 차세대리더, 전문가,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여성 인재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성정책 추진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성평등 관점의 교육, 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제도교육의 확립이 필요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넘어,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통합적 민주시민 교육 체계의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사. 분야에 따른 정책대상별(성별, 연령별 등) 욕구와 인식

- 전반적으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여성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이 필요하다. 자녀 돌봄과 관련, 보육시설의 확충, 육아공동체, 자녀양육지원 확대 요구 및 자녀와의 놀이, 문화체험에 대한 공간 확충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20대, 30대의 경우 살기 좋지 않다는 응답과 살기 좋다는 응답과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구직을 하고자하거나, 일·생활 양립이 필요한 세대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 '직업훈련확대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육아를 담당하는 40대의 여성의 경우는 자녀 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게 나타나, 여성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경제활동지원이 필요하다.
-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폭력 발생시 대응시스템 마련, 피해자 보호 및 지

원강화가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히 여성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성 착취) 범죄에 대비한 통합적 법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치 마련이 요청된다.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성 대상 교육과 서비스제공자들의 다문화감수성 강화가 요구된다.
- 농촌지역의 소득, 일자리 등 경제적 욕구가 도시 대비 높아 이에 대한 지원이 요청되고, 가사와 가족돌봄이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개선 사업 역시 필요하다.

제 2 절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 본 절에서는 3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 목표인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의 4개의 추진전략별(여성정책과 여성역량강화, 성인지적인 문화예술관광거점 육성, 성평등 가족문화와 다양한 가족지원, 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확산) 11개 추진 과제들을 토대로 전라북도의 2020년과 2021년 부서별 정책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 및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미래 전망을 고려한 전라북도 여성·가족 정책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가. 여성정책과 여성역량 강화

1) 여성정책 추진 체계 강화

- (관련 부서) 여성정책 추진체계 관련 부서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및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여성정책팀) 등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현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은 여성청소년과의 여성정책팀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다. 여성정책팀의 조직구성 인력 현황은 팀장 1인, 주무관 3인 외 기간제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정책팀 팀장은 여성정책 업무를 총괄하며, 주무관 1인이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성평등위원회 운영·관리,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추진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나머지 주무관 1인은 여성정책 사업에 대한 전반(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관리 지도 감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여성회관 사업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전북도 및 14개 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사업 지원은 별도의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2명의 전담연구원이 담당 지원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은 해당 담당부서(여성정책팀)만의 업무로 그치고 있고, 성평등 관점의 의식과 성차별적 내용의 개선에 대한 타 행정부서와 별도의 어떠한 연계 및 협조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관련 업무도 하나의 행정업무란 단순작업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66번째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채택하여 발표했고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정책추진체계의 강화를 강조하였음에도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전라북도 여성정책(성평등정책)을 총괄하여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구심점(컨트롤타워)이자 전라북도 해당 부서 내 성평등 관점 반영과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실행 조직부서(성평등정책관 신설 등)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성평등정책관 신설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변화가 단순히 전라북도 행정부서의 조직 개편에 머물지 않고 전라북도의 성평등정책의 실질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젠더거버넌스 구성 및 정례적 운영으로 정책과 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 또한, 여성정책이 여성정책팀 내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정책과 사업 분야에 성평등 관점을 녹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전라북도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실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 추진을 뒷받침해줄 법적 근거(조례의 조항 신설 등) 마련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전북도의 타 행정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필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조 결재 등의 방법 도입도 필요하다. 더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 차원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의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의식 향상의 중요성 강조와 관련 내용을 성과 평가로 연동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2022년은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이 종료되는 해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제3차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전북지역에서도 중앙의 정책방향과 전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전북차원의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또한 필요하다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https://www.jeuu.go.kr/index.htm>)

〈그림 4-1〉 제주특별자치도 조직도, 성평등정책관

〈표 4-1〉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여성정책과 여성 역량 강화 1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추진전략 1		여성정책과 여성 역량 강화
추진과제 1		■ 여성정책 추진 체계 강화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여성정책팀)
	실행과제	성평등·여성권익 증진, 여성NGO성과보고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별영향평가 등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성평등위원회 운영·관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추진 등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관리 지도 감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여성회관 사업 추진 등

구분	세부내용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전라북도 전체 여성정책(성평등정책)을 총괄·추동해 나갈 수 있는 중심점(컨트롤타워)이자 도청 각 부서에 성평등관점 반영과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실행 조직부서(성평등정책관 등) 우선적 필요 - 성평등정책 실질화 실현을 위해 젠더거버넌스 구성 및 정례적 운영, 도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사업의 실제적 추진 필요 - 전북도의 모든 정책과 사업 분야에 성평등 관점 녹여낼 수 있도록 각 행정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전북도의 타 행정부서와의 긴밀한 연계 구축 및 유지를 위해 협조 결재 등의 다양한 방법 도입 필요 - 전북도 및 14개 시군 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의식의 중요성 강조 및 관련 내용 성과평가로 연동 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2) 여성대표성 적극적 확대

- (관련 부서) 여성대표성 확대 관련 정책과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복지여성보건의국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이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전북도 차원에서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여성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낮은 여성대표성의 입법과정에서부터 성인지적 관점 저조로 여성문제에 대한 담론 및 이슈화가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어 다층적인 여성을 제대로 나타내거나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지역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확대시켜야 하고, 여성정치 후보자 양성과 확대 및 양성된 여성후보의 정치 진입이 용이한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모색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특히 젊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

한 다양한 기회 제공과 여성 후보자 적극적 발굴 및 발굴된 여성 후보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예; 권역별 정치아카데미), 예비 후보자와 선배 정치인과의 모임 등을 통해 정보와 경험 교환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의 정치적 감수성을 키우는 훈련과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여성후보 적극 발굴 및 여성정치인의 산실이 되어야 하며,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정치개혁과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표 4-2〉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 여성정책과 여성 역량 강화 2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추진전략 1		여성정책과 여성 역량 강화
추진과제 2		■ 여성대표성 적극적 확대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추진전략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
	실행과제	여성단체 체계적 지원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
	주요내용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지원(도 2개 단체, 시군 14개 단체), 성평등/여성권익증진 사업 지원, 화요간담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통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전북도 차원의 여성대표성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사업은 미흡 - 지역사회의 여성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의 다양화로 경험의 기회 확대 필요 - 여성단체 등을 통해 여성 정치 후보자 양성과 후보자 발굴 확대로 여성후보의 정치 진입 확대 필요 - 연령대별 특히 젊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및 여성 후보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권역별 정치아카데미, 예비후보자와 선배정치인과의 모임 등) 지원 필요 - 지역 내 여성단체의 여성들이 정치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훈련과 교육 지속 지원으로 여성후보 적극 발굴 및 여성정치인의 산실로 작용해야 함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3) 여성인재 DB구축 활성화

- (관련 부서) 여성인재 DB구축 활성화 관련 정책과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는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이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2016년(4월~9월) '전북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활용방안' 전북연구원의 연구 과제를 통해 전북 지역 각 직종별·전문분야별 여성인재 발굴 및 관련 정보 DB구축을 하였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40%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2021년, 5년 경과)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우선 전북지역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의 여성인재 발굴과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이 최소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필요하다.
- 연구용역을 통해 전북 여성인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와 자격 기준 설정 및 정립이 필요하고 전북지역 여성인재 발굴 대상에 대한 각 직종별 및 전문분야별 확대와 신규 여성인재 지속 발굴로 전북 여성인재의 양적 확대, 더불어 구축된 여성인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직종별 및 전문 분야별 전북 여성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예; 멘토링 프로그램, 네트워크, 인큐베이팅 사업 등) 확대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단순 분야별 연계가 아닌 다양한 직종과 전문 분야별·영역별 다층적 연계로 시너지 증진과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 전북 여성인재 DB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수집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률근거가 부재하여 도내 공직,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여성인재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여성인재 DB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수집·관리 및 인재 발굴을 확대를 위해 전북도와 각 시군의 「전북 여성인재 DB구축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 전북도와 시·군의 여성인재 DB구축 시 이미 발굴된 여성인재 DB자료와

여성인재 활용처의 수요를 분석하여 여성인재 DB가 부족한 수요 분야, 여성인재가 희소한 분야에 대한 인재 신규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축된 전북 여성인재 DB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 지정과 더불어 정기적인 연락 등을 통해 DB 관련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 하면서 여성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표 4-3〉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여성정책과 여성 역량 강화 3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추진전략 1		여성정책과 여성 역량 강화
추진과제 3		■ 여성인재 DB구축과 활성화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실행과제	여성단체(38개 단체) 역량강화 사업 지원
	주요내용	도와 시군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의 여성인재 발굴 및 구축을 위한 최소 2년 내지 3년 주기의 연구용역 필요. 연구를 통해 여성인재의 명확한 개념 정리, 자격기준 설정 필요, 여성인재 대상에 대한 직종별 및 전문분야별 확대와 신규 여성인재 지속 발굴로 전북 여성인재의 양적 확대 - 각 직종별 및 전문분야별 여성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예; 멘토링 프로그램, 네트워크, 인큐베이팅 사업 등) 확대 필요 - 다양한 직종과 전문분야별·영역별 다층적 연계로 시너지 증진과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필요 - 전북 여성인재 DB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수집·관리 및 인재 발굴을 확대를 위해 전복도와 각 시군의 「전북 여성인재 DB구축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필요 - 여성인재 DB구축 시 여성인재 활용처의 수요 분석에 따른 여성인재 DB 부족한 수요 분야, 여성인재 희소분야 인재 신규 발굴 및 확대 필요 - 구축된 여성인재 DB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속 필요(업무 담당자 지정,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정보 업데이트 등으로 여성인재 이탈 방지 등)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나. 성인지적 문화예술, 관광거점 육성

1) 문화예술, 관광분야 성평등 환경 조성

- (관련 부서) 문화예술이나 관광분야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총괄과를 들 수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포스트코로나 시대 예술인 창작지원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추진전략 아래,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영화·영상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과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사업을 실행한다.
- ‘영화·영상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영상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전북을 영상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화 상영을 통한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사업은 다양하고 안전한 문화공간 확충하여 제공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생활 속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칫 취약해지기 쉬운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전주국제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전북독립영화제를 통해 작은 공연의 형식과 비대면 상영을 통해 제공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영화제 행사기획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과 공연에서의 젠더 관점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요청된다.
- 미투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권고했고, 이러한 권고사항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시스템 마련이 요청된다.

- 또한 다양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시설 확충은 시급하고 중요하며, 문화공간 안에서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성평등 관점의 교육, 문화, 인식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표 4-4〉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성인지적인 문화예술 관광거점 육성 1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추진전략 2		성인지적인 문화예술, 관광거점 육성
추진과제 1		■ 문화예술, 관광분야 성평등 환경 조성
전북 행정 추진 시책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추진전략	포스트코로나 시대 예술인 창작지원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실행과제	모두가 누리는 문화정책으로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영화·영상문화 활성화 지원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주요내용	-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전북을 영상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다양하고 안전한 문화공간 확충 -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생활 속 문화 일상화를 통한 도민 행복 증진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코로나19의 방역지침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전주국제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전북독립영화제를 통해 제공한 것은 그 역할이 큼 -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 필요 - 영화제 행사 기획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과 공연에서의 젠더 관점의 가이드라인 적용 위한 제도화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한 주요 권고사항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다양하고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 시설 확충은 중요하나, 문화공간 안에서의 성평등 관점의 교육, 문화,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 노력이 요청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2) 성인지적 생태환경 및 농어촌 체험 관광

- (관련 부서) 생태환경 및 관광에 대한 관련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 총괄과와 환경녹지국의 자연생태과를 살펴볼 수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문화체육관광국의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실현을 위한 콘텐츠 강화’와 환경녹지국의 ‘생태관광 활성화’라는 추진전략 아래, ‘대한민국 여행·체험1번지 활성화’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정책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 ‘대한민국 여행·체험1번지 활성화’는 뉴노멀 시대의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전라북도를 위한 관광자원 발굴 및 인프라 확대와 여행·체험1번지 콘텐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투어패스 온·오프라인 홍보 및 연계상품 개발, 관광거점도시 육성 기반 확충, 체류형 관광 확산을 위한 체험여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은 2015년 생태관광지 선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에코메니저 양성, 가이드북 등 홍보물 제작,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까지 지속 운영하여 전라북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전라북도 관광이나 체험사업에 있어서,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관광 상품 및 환경을 개발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은 그 방향에 있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성인지적 농어촌 체험관광의 기획, 확산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성평등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생태관광이나 농어촌체험관광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획하고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 ‘성평등 마을 규약만들기’, ‘성평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남성중심 마을/문화 모니터링을 통한 성평등 콘텐츠 발굴’ 등의 사업 수행이 관광마을로 선정되는 기본 조건으로 규정된다면, 성인지적 마을 체험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성평등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인권존중의 안전한 공동체로 전라북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고,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성평등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표 4-5〉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성인지적인 문화예술 관광거점 육성 2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추진전략 2		성인지적인 문화예술, 관광거점 육성
추진과제 2		■ 성인지적 생태환경 및 농어촌 체험 관광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환경녹지국의 자연생태과
	추진전략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실현을 위한 콘텐츠 강화 생태관광 활성화
	실행과제	대한민국 여행·체험1번지 활성화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주요내용	- 뉴노멀 시대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전라북도를 위한 관광자원 발굴 및 인프라 확대 - 여행·체험1번지 콘텐츠 강화 - 생태관찰, 안내, 전시, 자연환경 교육·홍보시설, 생태마을 조성 - 생태관광지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 기반시설 및 S/W프로그램 컨설팅, 시군별 자원조사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전라북도 관광이나 체험사업의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관광 상품 및 환경을 개발·확장은 긍정적 발전 방향임 - 생태관광, 농어촌체험관광의 성인지적 기획과 여성친화적 일자리 조성 - '성평등 마을 규약만들기', '성평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남성중심 마을/문화 모니터링을 통한 성평등 콘텐츠 발굴' 등의 사업 수행 요청 - 성평등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인권존중의 안전한 공동체로 전라북도가 자리매김 -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성평등 공동체로 진행될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3) 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관련 부서) 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부서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와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의 사업을 살펴볼 수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의 추

진전략 하에 자치행정과의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도, 시·군,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하고, 도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제공, 도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하고자 한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세대와 지역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을 이용하여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 자치행정과의 사업 중 하나인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사업’과 같이, 성평등 관점의 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방안이 확대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4-6〉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성인지적인 문화예술 관광거점 육성 3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추진전략 2		성인지적인 문화예술, 관광거점 육성
추진과제 3		■ 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추진전략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실행과제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도, 시·군,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도민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 - 읍면동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한 도민 근거리 학습권 보장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세대 경험과 농촌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기관을 이용하여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큼 -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사업’과 같이, 성평등 관점의 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방안 마련이 요청. 그밖의 기존의 다양한 도민 학습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다. 성평등 가족문화와 다양한 가족지원

1) 농산어촌의 성평등 문화 확산

- (관련 부서) 농산어촌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부서는 농축산식품국 농촌활력과를 살펴볼 수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사람 찾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촌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농촌마을 조성’과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환경 조성’ 사업을 살펴볼 수 있다.
- ‘더불어 함께 사는 농촌마을 조성’ 사업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치유·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생생마을을 만들고자 하며, 또한 도시민이 찾아오는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관광 프로그램도 제공하고자 한다.
-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추진이나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 경관 개선, 문화동아리 활동 확대, 주민 복지 개선에 필요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환경 조성’ 사업은 도시민 유입을 확대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민과 상생협력 하는 농촌환경 조성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귀농귀촌의 유치, 활성화, 도시와 농촌청년 삼락캠프 등을 진행하고, 귀농귀촌의 기반 구축을 위해 임시거주시설 조성하여 제공하는 사업 등을 진행한다. 특히 여성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동주택 등 안전한 주거와 여성친화적 공동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농산어촌의 활력 증진과 마을 공동체 활동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상생 협력하는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이러한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의 여성 농민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여, 마을 안의 여성 참여의 비율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젊은 부부, 귀농인들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체

사업의 발굴 역시 같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 제5차 (2021-2025)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21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에 따르면,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를 비전으로 하여, 그 중 전략과제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문화를 성평등한 문화로 바꾸기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니,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전북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여성농업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조례 속에 마을 이장 및 농민 교육에 있어서 성평등 교육이 필수사항으로 포함된다면, 농산어촌 문화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7〉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성평등 가족문화와 다양한 가족지원 1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추진전략 3		성평등 가족문화와 다양한 가족지원
추진과제 1		■ 농산어촌의 성평등 문화 확산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농촌활력과
	추진전략	사람 찾는 농산어촌
	실행과제	더불어 함께 사는 농촌마을 조성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환경 조성
	주요내용	-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치유·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생생마을을 실현 - 도시민이 찾아오는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제공 - 주민 주도의 마을 경관 개선, 문화동아리 활동 확대, 주민 복지 개선에 필요한 공동체 활동 지원 - 도시민 유입을 확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유도 - 지역민과 상생협력 하는 농촌환경 조성 - 귀농귀촌의 유치, 활성화, 도시와 농촌청년 삼각캠프 진행 - 귀농귀촌의 기반 마련을 위해 임시거주시설 조성·제공

구분	세부내용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농산어촌의 활력 증진과 마을 공동체 활동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상생협력하는 농촌 환경 조성 노력은 바람직 - 마을 만들기 과정에 여성 농민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여, 마을 안의 여성 참여의 비율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 방향 필요 - 청년, 젊은 부부, 귀농·귀촌인들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체 사업의 발굴이 필요 - 여성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동주택 등 안전한 주거지원 필요 -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농촌 만들기 정책 추진 - 마을 이장 및 농민 교육에 있어서 필수과정으로 성평등 교육을 추가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2) 다문화가족, 1인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

- (관련 부서) 다문화가족, 1인가구,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는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와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를 살펴볼 수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국제협력과의 ‘다각적 국제교류 및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라는 추진전략 하에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및 다문화가족 안정적 생활지원’ 사업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과 인권보호 내실화’ 사업을 살펴볼 수 있고, 복지여성보건국의 ‘돌봄 공적책임 강화 및 일·가정양립 환경조성’의 목표 아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및 다문화가족 안정적 생활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대면·비대면 서비스의 탄력적 운영으로 사업 효율성 높이고자 한다.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과 인권보호 내실화’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인권 존중 및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다문화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소

식지 지원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를 운영한다.

-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한 자립 촉진 및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사업 등이 수행 중이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다양한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어, 적절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 서비스 확대와 사회적 가족 등의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다양성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 확대 적용을 통해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 확대가 요청된다.
- 전북의 1인가구 비중은 2021년 9월 현재 42.9%로 전국 평균인 40.1% 보다 높은 상황이니,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를 위한 세대별, 지역별, 성별 맞춤 사업 발굴 및 실행이 필요하다.

〈표 4-8〉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성평등 가족문화와 다양한 가족지원 2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추진전략 3		성평등 가족문화와 다양한 가족지원
추진과제 2		■ 다문화가족, 1인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
담당부서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전북행정 추진시책	추진전략	다각적 국제교류 및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돌봄 공적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실행과제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및 다문화가족 안정적 생활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과 인권보호 내실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구분		세부내용
전북행정 추진시책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으로 자립역량 강화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대면·비대면 서비스의 탄력적 운영 -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 다문화가족의 인권 존중 및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 사회통합을 강화 - 다문화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소식지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를 운영 -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한 자립 촉진 및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수행 -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사업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다양한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의 분위기 형성 기여 -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 서비스 확대와 사회적 가족 등의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다양성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 확대 적용 -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 확대 기대 -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를 위한 세대별, 지역별, 성별 맞춤 사업 발굴 및 실행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라. 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1) 생애주기에 따른 성평등 교육의 정착

- (관련 부서) 생애주기에 따른 성평등 교육 관련 부서로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와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를 살펴볼 수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자치행정국은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라는 추진전략 아래,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시·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성인 세대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청소년과는 ‘돌봄 공적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이라는 추진전략 속에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군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내 시·군 간 격차 없는
도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 시·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비문해, 저
학력 성인의 기초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진행
되는 사업으로 시·군 및 성인문해 교육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멀티미디어세대인 청소년에게 다양한 매
체를 활용한 시청각, 참여형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도민들의 학습권이나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향의 다양한 사업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
- 전북의 구성원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는 어린 시절부터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
한데,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
한 성평등 관련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노력이 요청된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윤리체험관은 “유아에서 성인까지
누구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인터넷윤리 놀이터이자 배움터로서, 재미
있는 게임과 체험을 하며,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
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 윤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방송통신위원회 2020)¹⁾.

1)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서울 인터넷윤리체험관 개소: 놀이와 체험을 통해 배우는 인터넷
윤리 배움터” (2020년 11월 25일)

〈표 4-9〉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1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추진전략 4		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추진과제 1		■ 생애주기에 따른 성평등 교육의 정착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추진전략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돌봄 공적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실행과제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주요내용	- 사군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 - 노인대상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 멀티미디어세대인 청소년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 참여형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도민들의 학습권이나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향상에 기여 - 전북의 구성원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체화할 수 있는 교육 요청.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업 필요 -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한 성평등 관련 교육 실현이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2) 남성대상 성평등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 (관련 부서) 남성대상 성평등 교육과 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와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를 살펴볼 수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복지여성보건국은 ‘돌봄 공적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의 추진전략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의 ‘도민 평생학습 문화 확산 프로그램’은 앞서 검토된 바대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북

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성별영향평가 추진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념행사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고,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에서 9월 7일까지)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인 정책의 경우, 그 원인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정부정책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이나 문화 확산 프로그램은 현재 여성가족부를 통해 실시되는 사업 외에 전라북도에서 고유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특히, 전북 안의 가족 내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통한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 변화에 대한 요구는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의 핵심 건의 사항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세대별 맞춤 성평등 교육을 통해, 가족 문화 변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장의 보수교육이나 시민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을 통해 전북형 남성 성평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넘어서 가족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 SOC기관(공동육아나눔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활용한 성평등 교육 문화 프로그램 발굴이 요청된다.

〈표 4-10〉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2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추진전략 4		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추진과제 2		■ 남성대상 성평등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추진전략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돌봄 공적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실행과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별영향평가
	주요내용	-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 -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에서 9월 7일까지)에 다양한 행사 진행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인 정책의 경우, 그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정부정책의 성평등을 실현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이나 문화 확산 프로그램은 전라북도에서 고유로 추진하고 사업 부족 - 전북 안의 가족 내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통한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 변화 요청 -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세대별 맞춤 성평등 교육을 통해, 가족 문화 변화를 위한 사업 확대 필요. 직장의 보수교육이나 시민교육 등을 적극 활용 - 전북형 남성 성평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3) 성인지적 디지털 인프라구축 및 성평등 콘텐츠 구축

- (관련 부서) 성인지적 디지털 인프라구축 및 성평등 콘텐츠 구축 관련 사업이나 정책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와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를 살펴볼 수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자치행정국은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라는 추진전략 아래, 도민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시·군 및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 사업을 진

행하고 있고,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청소년과는 ‘돌봄 공적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이라는 추진전략 속에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미 ‘생애주기에 따른 성평등 교육의 정착’과 ‘남성대상 성평등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과제를 통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실제 성인지적 디지털 인프라구축 및 성평등 콘텐츠 구축이라는 목표에 적합한 사업들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고,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촉기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발전에 따른 역기능적 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다.
- 전북의 경우, 농어촌 지역 등에서 인터넷 보급 기반이 취약하고, 농어민 고령자 등의 디지털 활용 역량부족으로, 경제적,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이용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동시에,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윤리 등에 대한 교육으로 기술적 진보에 부응할 수 있는 웹상에서의 성인지감수성을 비롯한 인간 존중의 태도와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 성평등 콘텐츠 구축을 위한 노력은 성평등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한 관광콘텐츠 생산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진 콘텐츠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기획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다. 생산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의견에 따른 콘텐츠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표 4-11〉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3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추진전략 4		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추진과제 3		■ 성인지적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성평등 콘텐츠 구축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추진전략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돌봄 공적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실행과제	도민 평생학습 문화확산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시·군 및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추진
	주요내용	- 시군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 - 농어촌 등 평생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 근거리 학습권 보장 - 평생학습축제 지원을 통해 시·군·기관 간 정보공유, 소통 및 도민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 - 멀티미디어세대인 청소년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 참여형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확대는 편의의 증가와 함께 역기능적 문제 역시 심화 - 전북은 농어촌 지역 등에서 인터넷 보급 기반이 취약하고, 농어민 고령자 등의 디지털 활용 역량 부족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이용 교육 활성화 요청 -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윤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요청 - 메타버스를 통한 관광콘텐츠 생산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진 콘텐츠가 생성 및 모니터링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제 3 절 인권 존중의 안심공동체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 본 절에서는 3대 정책목표 중 두 번째 목표인 ‘인권 존중의 안심 공동체’는 3가지의 추진전략별(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총 12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 추진과제를 토대로 전라북도의 2020년과 2021년 부서별 정책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 및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미래 전망을 고려한 2030 전라북도 여성·가족 정책 및 추진 과제별 개선방안을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1) 여성·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 (관련 부서) 여성·사회적 약자의 권익 관련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인권담당관 및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청소년과, 장애인과,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등으로 간추려 진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먼저 인권담당관 부서의 업무자료를 보면, 인권친화도시 기반 조성(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과 인권강사 양성강화), 맞춤형 인권제도 및 행정체계 구축(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 인권친화적 법규 정비), 사회적 약자 공감 인권정책 강화(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대상의 인권침해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등), 도민 참여형 인권거버넌스 구축(인권위원회와 인권협의체 운영, 인권옹호자 회의체 구성·운영 등),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선제적 예방체계 마련,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 증진 협력, 그리고 인권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들이 추진되고 있다.
- 다음으로 복지여성보건국 내에서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과 관

련된 담당 부서의 업무자료를 보면, (1)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권익보장을 위한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2)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 보호 육성 및 권익 향상과 관련된 업무 추진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설치 운영 하고 있다. (3)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인권 존중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장애인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존중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과 더불어 장애인 인권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구성 운영, 전라북도 장애인인권옹호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4) 국제협력과의 다문화지원팀에서는 외국인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인권담당관) 장애인 관련 부서 이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다문화 관련 인권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한 부서간 연계 협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약 노동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차별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행정 체계간의 상호 연계 및 협력(담당부서 인력배치 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및 실질적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위한 참여자 선발 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외국인근로자), 농어업인, 시민단체 등 대상을 특화해 보다 전문화된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토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복지여성보건국) 저출산 현상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과 교육 증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에 이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북의 고령화 추이 등을 반영하여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인시설 등을 통해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르신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권익증진교육, 노인인권침해 시 신고 및 상담관련 지원기관 알림과 홍보캠페인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확대도 필요하다
- 무엇보다 지방정부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협력 지원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현장실무자의 권리 보장과 지속적인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표 4-12〉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1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2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추진전략 5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과제 1		■ 여성·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 인권담당관(인권 정책팀, 보호팀, 협력팀) - 복지여성보건국(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추진전략	- (인권담당관) 인권친화도시 기반조성, 맞춤형 인권제도 및 행정체계구축, 사회적 약자 공감 인권정책 강화, 도민 참여형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 -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권익 보장,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노인권익 옹호체계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 옹호, 장애인 인권존중 기반 마련
	실행과제	- (인권담당관)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운영 14명(인권법,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여성2, 노인, 단체 등), 인권친화마을 만들기, 인권문화축제, 인권옹호자 포럼(인권약자 6개 분야), -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노인보호육성 및 인권향상, 장애인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 강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수립·시행
	주요내용	- (인권담당관) 인권캠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 마을 여건에 맞는 인권 관련 공모사업, 인권관련 강연, 북 콘서트, 인권단체 홍보 등, 도민 대상 인권교육, 인권침해 상담(전화, 방문, 인터넷 등) 및 조사('20년 기준 총 97건),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 (복지여성보건국) (여청과)여성NGO 지원,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지원, (노인복지과)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장애인복지과)장애인 인권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단 구성·운영, 전라북도장애인권옹호기관(1개) 운영, 장애인인권 관련 협력기관 정기 간담회 개최 등

구분	세부내용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인권담당관) - 장애인 관련 부서 이외 여성, 아동, 노인, 이주민 관련 인권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한 부서간 연계협력 강화 필요 - 취약 노동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 인권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차별사례 지속 발굴 및 차별 사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인권담당관부서와 타 행정체계간의 협력(담당부서와 인력배치 등) 필요 -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위한 참여자 선발 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외국인근로자), 농어업인, 시민단체 등 대상 특화해 보다 전문화된 활동이 가능토록 구성 필요 ◦ (복지여성보건국) -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권리 증진 위한 정책과 교육증진 등 다양한 지원 사업 확대·강화 필요 - 고령화 반영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인시설 등을 통한 인권 존중 및 문화 존중하는 권익증진교육 실시, 노인인권침해 시 신고 및 상담 지원기관 알림과 홍보캠페인, 인식개선 사업 확대 필요 - 여성·사회적약자의 인간다운 생활권리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 이들을 보호·지원하는 현장실무자의 권리보장과 지속적인 처우개선도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2) 여성·사회적 약자의 안전 증진 및 친화적 디지털 안전시스템

- (관련 부서) 여성·사회적 약자의 안전 증진 및 디지털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는 도민안전실(안전정책관, 사회재난과),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으로 간추려 진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먼저 도민 안전실 업무 자료를 살펴 보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안전문화 확산과 기본 안전권 보장 주민이 편안한 안전지대 조성 등의 추진전략을 토대로 통합적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강화, 도민 기본 안전권 보장 강화, 도민 주도의 안전문화 생활화,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의 과제들이 실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안전교육,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전 도민 재난·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재난 대비 훈련, 재난 대비 매뉴얼 작성 및 현장 훈련지도, 지진 대피 훈련 시행으

로 상황대처 능력 강화 등이 있다.

- 다음으로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균등한 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예방 및 대응·대비 체계 강화 등의 추진전략이 있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 노인안전지원을 위해 응급관리요원 모니터링과 응급상황발생 시 대응, 그리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실행과제 등이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성별과 연령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재난대응시스템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중심의 피해가 더 크고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 재난과 지하철 사고, 배 침몰과 같은 사건 발생 시 여성 사상자 비율이 남성보다 비례 높게 나타난다. 이에 유엔 개발계획에서는 이미 2015년 각종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 마련 시 안전취약계층에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의 현행법상 아동, 노인, 장애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여성이 빠져 있다.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아동, 노인, 장애인 이외 여성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필요하며, 각종 위기관리 및 안전교육 매뉴얼에 여성을 고려한 행동 요령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아동이나 노인의 경우 재난관련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적기에 재난대응 계획·매뉴얼 등에 세부 사항을 반영해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 발생 시 구체적인 피해현황과 재난을 경험하는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및 장애 유무 등을 고려한 특성을 비교·분석해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전북 차원의 여성·사회적 약자 친화적 디지털 안전시스템 구축 및 체계 운영 상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실시되는 노인 대상 AI·IO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실시 이외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사회적 약자의 취약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심과 예산 등의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표 4-13〉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2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2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추진전략 5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과제 2		■ 여성·사회적 약자의 안전 증진 및 친화적 디지털 안전시스템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도민안전실(안전정책관, 사회재난과) 복지여성보건국(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추진전략	◦ (도민안전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안전문화 확산과 기본안전권 보장, 주민이 편안한 안전지대 조성 ◦ (복지여성보건국) 균등한 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예방 및 대응·대비 체계 강화
	실행과제	◦ (도민안전실) 통합적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강화, 도민 기본 안전권 보장 강화, 도민주도 안전문화 생활화,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복지여성보건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기초수급, 차상위 대상)
	주요내용	◦ (도민안전실)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 전 도민 재난·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망 후유장애 등), 재난대비 훈련(국가주도 및 도 자체 훈련), 재난 대비 매뉴얼작성 및 현장 훈련지도, 지진 대피훈련 시행으로 상황대처 능력 강화 등 ◦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안전지원을 위해 응급관리요원 모니터링과 응급상황발생시 대응,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공모 사업(중앙)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도민안전실) -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에 아동, 노인, 장애인 이외 여성을 포함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필요함 - 재난 발생 시 구체적인 피해현황, 재난 경험자(피해자) 성별에 따른 특성 비교·분석 등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안전·보호 정책 수립 시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 맞춤형 안전과 보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함 - 재난 상황 시 사회적 약자에게 신속한 상황 정보 전달을 위해 장애인, 이주민(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 노인 등의 취약 특성을 파악해 정보 전달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 필요 ◦ (복지여성보건국) 전북차원의 여성·사회적 약자 친화적 디지털 안전시스템 운영은 노인 대상 AI·IOT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실시 이외 거의 부재한 상황.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3)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폭력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 (관련 부서)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폭력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는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이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먼저 여성청소년과 업무 자료를 살펴 보면,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및 복지 지원 등의 업무를 여성권익팀에서 관리·추진하고 있다. 관련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보호·의료·수사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사업,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긴급피난처 운영 등을 하고 있고, 성폭력 관련해서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의 사업,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상담보호, 직업훈련, 구조지원 및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사업 등이 지원되고 있다.
- 아동·청소년 대상의 폭력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2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아동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아동보호전담요원 확충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아동보호체계로 개편·전환 중에 있다.
- 노인대상 폭력 관련 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운영과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가 1개소 운영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제작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 증가(피해자 평균나이 14.2세)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강간과 성매수 등 성인의 성 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관련 정책과 사업은 아직 미진하다. 이

에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세와 관련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 모색 등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대응 전담기구 설치,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등도 요구된다. 점차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에 대한 범위와 추정 제도 등의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 여성폭력에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데이트폭력 사건을 범죄로 인식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경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고, 관련 법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되며, 전북 차원의 데이트폭력 관련 사업도 거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비혼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연인 간 폭력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다층위적인 법적·제도적·서비스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 예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데이트폭력전과 공개제도 신설, 데이트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규정신설, 상습 데이트폭력사범에 대한 치료적 사법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이 있다.
-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차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 체계로 실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고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이 2020년에 최초로 수립되어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여성폭력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중앙의 정책 수립 지원 방향과 전북지역의 여성폭력 현황과 특성 및 현장을 반영한 전북차원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북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전문화 및 내실화가 필요하며 통합적 대응체계 마련과 더불어 사각지대 또한 발굴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여러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실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여 한 책무로, 중앙행정기관과 민간 등에 의해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시행 중이나 법무부(검찰), 경찰, 여성가족부 등에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 일원화된 지원체계 및 홍보 부재로 피해자가 어느 곳에 어떤 지원을 신청해야 할지 알지 못하거나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 발생 초기부터 적시에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체계적 피해자 지원체계 갖출 필요가 있다.
- 고령사회로 노인 학대(가정 내 학대, 정서적 가해 등)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에는 노인전문보호기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라북도에서 노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 강화와 재발 장지를 위한 노인 학대 가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 학대 발견/보호/예방 등 전담 기관- 전북에는 전북도와 서부기관이 있음)에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제공과 재발 방지 및 피해 노인 보호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장애인 폭력은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1개소 운영되고 있다. 학대피해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대 피해를 받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기에 장애 아동과 여성의 학대 피해는 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여성과 아동 학대는 아동학대나 여성폭력 정책 및 장애인학대 정책에서 그리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약 4~50 정도가 신체, 성, 정서적 학대, 방임을 경험하고 있고, 학대 피해아동집단의 50% 이상이 장애를 가

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그리고 장애아동이나 장애여성은 비장애아동이나 여성보다 학대 상황에 더 노출되고 있고, 학대 받는 아동과 여성 중 장애아동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또한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장애 여성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한 통계자료와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 또한 학대 판정을 받은 장애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어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일반 피해학대 아동보다 면밀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함에도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 쉼터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장애아동 맞춤형의 관련 지원 서비스도 거의 부재하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의 장애아동 관련 이해와 전문성 부족, 전문치료비 등을 지원할 사업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고,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교육 등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이에 장애아동과 장애여성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아동과 장애여성의 학대피해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 구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과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 일시쉼터 및 보호시설 마련과 보호 지원 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대책 발표(‘21. 8. 19)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대응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내 현실적인 방안과 대책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년 대비 매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며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전북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단 5개소(최근 군산 개소)로 여전히 부족하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전북 14개 시·군·구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곳은 5개소(전주2개, 익산, 군산, 남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상담원 1명당 관리하는 사례수가 많아 업무 과중으로 질 낮은 사례관리의 우려와 상담원의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 다

음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과 학대피해아동 대상 복합적인 문제와 상실된 가족기능 회복 등을 위한 전문적이면서 효과적인 다차원적 지원 서비스 개발 및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아동학대 유형, 위기수준 및 대상자와 아동학대 가정의 특성 등에 맞춘 체계화된 사례관리 모형 개발 등).

- 그리고 포용국가 아동정책('19, 5) 발표와 더불어 공공과 민간이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에 대한 업무를 분업하여 보다 전문성 있게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와 관련된 대책 및 법안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추진전략별 전복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3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2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추진전략 5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과제 3		■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폭력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추진전략	여성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자립 강화
	실행과제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및 사회복지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쉼터 운영,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 옹호
	주요내용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의료·수사 지원 및 긴급피난처 운영,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아동보호팀)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가 아동학대조사 및 학대 판단 실시,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노인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2개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1개소) (장애인복지과)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1개소, '21년 하반기부터)

구분	세부내용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제작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지속 증가(피해자 평균나이 14.2세) 및 피해 저연령화. 또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건강과 성 매수 등 성 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세와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와 관련 데이터 수집의 체계적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전담기구 설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발견 즉시 삭제와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등이 요구됨 - 점차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범위와 추정제도 등의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필요 - 데이트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에 데이트폭력 처벌법 등 데이트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경찰의 대응과 사건처리 안내 및 관련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나 전라북도 차원의 데이트폭력 관련 사업은 부재함 - 고령사회로 노인학대(가정내 학대, 정서적 가해 등)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인학대 가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 전담 기관 - 전북에는 전북도와 서부기관이 있음)에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제공과 재발 방지 및 피해 노인 보호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학대 피해 장애아동과 장애 여성을 위한 전문 일시쉼터 및 보호시설 운영이 필요하고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교육 정례화 등이 필요함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4) 여성과 고령자 친화적 공간 조성

- (관련 부서) 여성과 고령자 친화적 공간 조성 관련 정책과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는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와 건설교통국의 주택건축과 등으로 간추려 진다
- (부서별 업무 계획 자료 검토) 고령자의 친화적 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전북도 차원의 관련 조례(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가 있으며, 시·군차원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지원 사업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여성 및 고령자 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이 보인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여성 및 고령

자 친화 공간 조성과 더불어 향후 보다 많은 공간 조성 확대가 필요하다. 그 외 전북도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일·생활균형을 위해 여성·가족 친화적 공간 조성, 양육친화 공간 조성,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 공간 조성 등도 필요하다.

- 여성과 고령자의 보행 안전, 주거와 범죄로부터 안전성 제고를 위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전반적 안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안전시설 설치도 필요하며, 특히 여성 1인가구, 고령자 1인가구(독거노인)의 비율 증가에 따라 주거 안정성 보장과 안전 위험성에 대한 전반적 문제 해결들도 필요하다.

〈표 4-15〉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4

구분		세부내용
정책 목표 2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추진전략 5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과제 4		■ 여성 및 고령자 친화적 공간 조성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국(주택건축과)
	추진전략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추진 도시재생 뉴딜 등 침체된 도심지역의 활력 추진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실행과제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 확충
	주요내용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지원 조례 제정됨, 도시재생사업 연계 여성과 고령화 친화적 공간 조성 사업 일부 실시되고 있음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시군 차원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제정으로 여성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한편 도 차원에서는 여성 친화적 공간 조성과 관련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 이외에는 부재한 상황. 무엇보다 전북도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해 여성 및 가족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양육친화 공간과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 공간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노인 인구 비율 증가에 따라 전북의 도시 공간과 생활 시설 환경도 이에 맞춰 정비될 필요 있음.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고령친화도시를 도시 환경의 중요한 개선방향으로 설정해 추진 필요(전북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존재).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전북도의 대응과제로 노인들의 생활에 편리한 고령친화도시 도시 환경의 중요 개선 방향으로 설정. 조례 제정의 실효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며, 고령친화도시 기반 구축 가능 - 여성 1인가구, 고령자 1인가구 등의 비율 증가에 따라 주거와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안전시설 설치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나. 아동·청소년 성장기반 구축

1) 아동·청소년 참여와 권리 실현 기반 조성

- (관련 부서)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실현 기반 조성 관련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는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청소년과 내 청소년팀과 출산아동팀(21. 7월 기준 아동보호팀으로 변경됨)이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부서별 추진전략을 보면,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와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등으로 나타났고, 주요 실행과제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여러 청소년 단체들을 지원 등으로 특별회의 및 도 대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시군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정책 제안 및 토론을 하는 청소년 참여 포럼 등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외 지역사회 참여활동, 다양한 동아리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그간 아동·청소년의 참여 활동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대부분이기에 향후 아동·청소년 참여 활동과 정책 방향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치적인 및 주도적인 참여 확대로 참여 실현되어야 참여의 의미가 배가될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는 소수의 선발·선정된 청소년만의 활동에서 일반청소년 누구나가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SNS, 유튜브 등 온라인 활동 강화와 채널의 다양화로 청소년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매체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 또한, 청소년 참여 기반 조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 참여 활동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청소년 정책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청소년 참여예산제 확대, 자치활동 활성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대응을 위해 진로·직업 체험중심의 다양한 활동 확대와 지역 연계(학교, 관공서, 사업체 등)한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네트워크’ 운영

확대 등도 필요하다.

-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실현은 무엇보다 전라북도 저출산 심화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의 확대·강화 필요하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의 추진 방향과 동일하게 일상에서 아동의 행복 증진과 아동 권리 실현 등 아동 최우선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라는 정책적의 패러다임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참여, 의견 청취, 부모교육 등 각종 정책에 아동·청소년 중심의 관점 체계화가 필요하다.
- 무엇보다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법적 기반 강화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 관련 연구와 조사를 대상별, 주제별, 주요 정책영역별 실태 분석 등도 필요하다.

〈표 4-16〉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1

구분		세부내용
정책 목표 2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추진전략 6		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추진과제 1		■ 아동·청소년 참여와 권리 실현 기반 조성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팀, 아동보호팀
	추진전략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실행과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청소년단체 지원 등
	주요내용	특별회의 및 도대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시군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참여 포럼(정책제안, 토론), 자기주도형 동아리 지원, 청소년참여활동 사례집 제작, 청소년참여예산교육운영 및 지원, 전북 청소년 원탁회의 운영 및 청소년 퍼실리테이터 발굴, 원탁회의 우수정책 실현화,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등

구분	세부내용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 자치적 및 주도적 방식 확대 - 소수의 선발·선정된 청소년 중심의 참여활동에서 일반청소년 누구나 관심 갖고 관여 및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청소년 맞춤 채널 다양화 및 다양한 매체 운영 활성화로 청소년의 접근성 제고 필요 - 청소년 참여 기반 조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참여활동 관련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필요 - 전북 저출산 심화 대응 아동·청소년의 참여 및 아동권리 취약부문의 법적·제도적 및 관련 사업 확대와 기반강화 필요. - 아동·청소년을 대상화하여 개입하는 방식에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존정책 및 시스템에 변화를 주기 위한 아동·청소년 중심의 정책 기조 강화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확대 필요 - 아동행복과 아동권리 등 아동 최우선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리주체로 아동·청소년 패러다임 강화, 아동참여, 의견 청취, 부모교육 등 각종 정책에 아동·청소년 중심 관점 체계화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강화

- (관련 부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관련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는 복지여성보건의국의 여성청소년과 내 청소년팀과 아동보호팀 등이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현 전라북도의 아동·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강화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전북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아동과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는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팀과 아동보호팀 등 2개 부서로 분리 구분된다. 청소년팀의 조직구성 인력 현황은 청소년정책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팀장 1인, 청소년활동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관 1인, 청소년보호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관 1인 외 청소년정책 전반의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1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보호팀 역시 아동보호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총괄·운영하는 팀장 1인, 가정위탁과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1인, 아동정

책시행계획 수립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1인 외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아동 및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관련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부재하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전북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아동·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아동·청소년 분야 전공의 박사급) 배치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은 아동·청소년정책 부서에서 아동·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 등과 관련된 중장기적 종합 계획수립 및 다양한 사업 추진 등을 전문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전담공무원이 확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 더 나아가 전라북도의 아동·청소년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아동·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전담기관이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전북지역 아동·청소년정책 전반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내 허브 기능 강화와 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전북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정책사업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북지역의 아동·청소년 현황과 관련 실태 등에 대한 기초통계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동·청소년 집단 특성별 현황에 대한 공식 행정통계의 체계적 생산이 필요하다.

〈표 4-17〉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2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2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추진전략 6	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추진과제 2	■ 지역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구분		세부내용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팀, 아동보호팀
	실행과제	청소년육성위원회,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종합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외 관련 내용의 자료 부재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전문성 있는 전담공무원 배치 필요 - 지역 특성에 맞춰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아동·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아동청소년재단 등) 설립 필요. 전북지역 아동·청소년정책 전반 선도, 지역사회 내 허브기능 강화, 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 전북지역 아동·청소년 현황과 관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 구축 필요(아동·청소년 백서 등) - 전북도 청소년팀과 아동보호팀 행정부서의 조직인력 구성 확대, 예산 지원, 지역별 현안을 반영한 주제별 지속적인 연구 수행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아동·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전북도 청소년팀과 아동보호팀의 조직 인력 구성 확대와 예산 지원 및 현안을 반영한 주제별 지속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실무자들의 역량 및 전문화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처우개선·소진예방 등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3) 발달 단계별 맞춤형 아동·청소년 심신 건강관리 지원

- (관련 부서) 발달 단계별 맞춤형 아동·청소년 심신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 부서는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청소년과,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의 정신건강팀, 기획조정실의 정보화총괄과 내 정보화총괄팀(전북스마트쉼센터 운영, 청소년정보화역기능 해소 등),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정책과 내 생활체육팀(생활체육, 스포츠강좌, 생활체육지도사업 등) 등으로 간추려 진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청소년 건강성장 지원,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 등의 추진전략 하에 청소년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광역과 14개 시군에서 운영 및 지원하고 있고,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추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자살위기상담 및 고위험군 사례 관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총괄과에서는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예방·상담치료·교육 등을 위해 스마트쉼센터 운영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국 내 체육정책과에서는 연령과 대상별 맞춤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정신건강)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 경쟁구조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미디어 접근성의 저연령화 등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 다양화 및 심각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현상으로 우울, 불안, 자살·자해 시도 및 자살 등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정서행동 문제를 호소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대상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스마트쉼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이 운영·지원되고 있지만,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각 발달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고 전문화 시킬 수 있는 전담팀이나 부서가 부재하거나 발달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치료 담당자도 부족하다.
-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고 담아 낼 수 있는 전담팀과 담당자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중심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증가에 따라 고위험군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프라 확충 및 정신건강과 행동문제를 예방단계에서부터 고위험군 집중치료 및 사후관리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관간의 연계 협력 사업 확대도 필요하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은 인천 직영으로 아동·가족 위한 전문 심리치료 및 상담기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는 저소득 중심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 특히 영유아·아동 대상의 스마트폰 중독, 정신건강 문제 등의 예방과 전문적인 치료/재활 등 예방적 차원의 관련 규정 자체가 미비하고, 정신건강 예방, 교육, 상담, 치료 및 재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지원 내

용의 사업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 하다.

(관련 사례) ▫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 조례

- (신체건강) 아동·청소년의 신체 건강관리는 정신건강과 정서행동 건강 뿐 아니라 사회적 및 인지적 발달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신체활동 평가 및 처방을 통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그리고 연령별·성별·발달단계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식의 운동프로그램 지원, 스포츠교실 운영, 거주지 내 접근성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체육시설과 신체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이 필요하다(농구장, 족구장, 미니축구장,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표 4-18〉 추진전략별 전복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 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3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2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추진전략 6		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추진과제 3		■ 발달단계별 맞춤형 심신 건강관리 지원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청소년팀, 아동보호팀), 건강증진과(정신건강팀), 보건의료과, 기획조정실 정보화총괄과(정보화총괄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생활체육팀) 등
	추진전략	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도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포츠 생태계 구축
	실행과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자살 위기자 관리 및 치료연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 예방, 건강화 행복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보급

구분		세부내용
전북행정 추진시책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개 운영 및 다양한 사업 지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추진 예정, 정신건강복지센터 15개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개 및 정신재활시설 22개소 운영, 자살위기사담, 생명지킴이양성 및 교육,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등 지원 - 스마트쉼센터(1개)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 예방·해소 상담 및 교육(1,239회 27,695명),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어린이,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유소년FC 및 유아체육활동지원 2개 사업 지원)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정신건강)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정서행동 문제 다양화·심각화·고위험화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정책에 대한 전문화·집중화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의 정신건강 및 정서행동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주기적인 실태 통계자료 구축 필요. 보건복지부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 내 아동·청소년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및 담당부서나 혹은 담당자 배치와 더불어 전문적 치료서비스 제공 필요 - (신체건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신체활동 평가 및 처방을 통한 신체활동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연령별·성별·발달단계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식의 운동프로그램 지원, 스포츠교실 운영, 거주지 내 접근성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체육시설과 신체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이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4) 지역 차원의 놀이 혁신 정책 추진

- (관련 부서) 지역 차원의 아동·청소년 놀이 혁신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는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팀, 아동보호팀 등으로 간추려 진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지역 차원의 놀이 혁신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전북도의 담당부서별 정책, 사업, 조례들을 살펴보면, 놀이 관련 정책은 부재하며, 청소년 팀에는 청소년 참여활동 및 청소년을 위한 여가·참여 공간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되고 있다. 그 외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통해 청소년 맞춤형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20~'24) 발표 내용에 따르면, 아동 놀이 확대, 놀 권리, 쉼 권리, 연령별 친놀이 환경 조성, 문화·여가 활동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아동가족 우대제도 확충 등 아동친화도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 중심의 놀이의 중요성을 반영 한 놀이 공간 확충, 지역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놀이 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전북지역 아동·청소년의 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놀이/여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와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아동·청소년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서부터 놀이정책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놀이 평가체계 구축, 아동·청소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마련, 놀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아동·청소년 특성별 놀이 공간 조성마련 및 확대, 놀이 공간의 질적 개선, 놀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 및 놀이 친화적 지역사회·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등이 요구된다.

〈표 4-19〉 아동·청소년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사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전북) 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2021. 9. 29)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2020. 8. 6)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전국적으로 총 35건의 조례가 있고, 입법예고 10건이 있음(2021. 10. 27, 기준)

〈표 4-20〉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 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4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2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추진전략 6		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추진과제 4		■ 지역차원의 놀이 혁신 정책 추진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팀, 아동보호팀
	추진전략	유사한 추진전략으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강화
	실행과제	유사한 실행과제로 청소년기관과 청소년단체 중심의 놀이와 여가 프로그램 운영
	주요내용	-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지원 등 - 어린이창의체험관 주변 인접 숲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 (전주시 협업)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전북도 차원의 아동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정책과 사업에 대한 연구와 실질적인 사업 추진 필요 -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아동 놀이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 - 아동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마련 및 놀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연령별·특성별 놀이 공간 조성 마련 및 확대, 놀이 공간의 질적 개선 - 아동의 놀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개선과 놀이 친화적 지역사회·도시환경 조성 마련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1)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지원

- (관련 부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된 행정 부서는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 등으로 간추려 진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관련 부서에서는 생애주기별 도민 평생 건강 지원 등에 대한 추진 전략과 마음 건강관리 강화, 도민 건강증진 사업 내실화, 정신진환의 예방·치료·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책 과

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 도 차원의 '전라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정신건강 문제는 특히 성별에 따라 질환과 유병률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와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자살생각과 충동 및 자살·자해 시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먼저는 전북도 차원의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조례(전라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가 있지만, 대상과 목적이 달라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성인지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례 내에 여성과 사회적약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의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조례 내용을 성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그 내용을 보완 변경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일 필요 있다
- 다음으로 전북 여성과 사회적약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북지역의 여성과 사회적약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건강 지원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 근거자료를 토대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을 통해 예산 수반과 관련 세부과제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 있다. 그리고 지역 기반의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지원은 개별적 지원과 더불어 가족차원의 통합적 지원이 함께 실시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노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장애여성 등등) 대상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측정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신건강 관련 데이터 구축 및 정보 제공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 구축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반적으

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근거 기반으로 정책 개발과 정책 수립과 정신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 검증 및 프로그램 신규 개발 등이 필요하다.

〈표 4-21〉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1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2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추진전략 7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1		■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지원
전북행정 추진사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
	추진전략	생애주기별 도민 평생 건강 지원
	실행과제	마음 건강관리 강화 및 도민 건강증진 사업 내실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주요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15개소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개소와 정신재활시설 22개소 운영,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등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전북도 차원의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조례(전라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내용에 여성과 사회적약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지원 관련 내용 보완 및 강조 필요 - 여성과 사회적 약자(노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장애여성 등등) 대상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측정하는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로 데이터 구축 및 정보 제공 기능 필요, 더불어 자료 구축으로 이를 근거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예산 편성, 세부과제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추진 필요 - 지역 기반의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지원은 개별적 지원과 더불어 가족차원의 통합적 지원이 함께 실시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2)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공공 의료 구축

- (관련 부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의료 구축과 관련된 지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복지여성보건국의 보건의료과 등으로 간추려 진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노인, 장애인, 아동,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의료취약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산부인과 운영(3개), 임산부이송지원(7개군)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1개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19개소), 지역거점별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 공공어린이집 재활의료 센터 구축 운영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한편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적 약자 발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후 지역사회의 발굴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 서비스를 지원(방문건강관리사업 등)하고 관련 사업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유관기관 등의 연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 구축과 더불어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표 4-22〉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2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2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추진전략 7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2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공공 의료 구축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의료과(공공의료팀)
	추진전략	균등한 의료서비스
	실행과제	보건의료 지역격차 해소 및 의료서비스 내실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주요내용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기반 확충(공중보건조사 배치 등),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 지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지원(4개 사업) 공공 어린이집 재활의료센터 건립 추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2개 시군)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 등

구분	세부내용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 의료지원서비스 조사로 필요 서비스 지원과 사회적 약자 발굴 필요 - 지역사회 내 발굴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 서비스를 지원(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고도화 -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유관기관 등의 연계로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 필요 - 공공의료 구축과 더불어 공공의료 강화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3) 장애 아동이나 치매노인을 위한 자연친화적 치유 공간 조성

- (관련 부서) 장애 아동이나 치매 노인 대상 자연친화적 치유 공간 조성은 복지여성보건의국의 장애인복지과, 건강안전과 및 주택건축과, 환경보전과 등과 관련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장애 아동이나 치매 노인 대상의 자연친화적 치유 공간 조성은 전북도 차원에서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중심 및 치매 관련 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산림청, 국립산림치유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 사업 연계로 자연 친화적인 치유 공간 조성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치유농장육성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논, 밭, 흙, 숲, 식물 등을 활용하여 활동형 자연친화 공간 및 체험 학습 지반 조성과 더불어 치유 활용으로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공모사업 등을 연계하여 치유 공간 및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치매전담형),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치매노인 대상의 자연친화적 치유 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또한 필요하다.

〈표 4-23〉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3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2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추진전략 7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3		■ 장애아동이나 치매노인을 위한 자연친화적 치유 공간 조성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장애복지과,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환경녹지국 환경보건과
	추진전략	노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실행과제	요자 중심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치매관리 체계적 기반 구축 장애유형별 지원서비스 강화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주요내용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7개소), 치매안심센터(14개) 및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6개소),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산림청, 국립산림치유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 사업 연계로 장애 아동과 치매노인 대상의 자연 친화적인 치유 공간 조성 필요 -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치유농장육성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자연친화적 치유 공간 조성 필요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공모사업 등을 연계하여 치유 공간 및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 - 지역별 치매노인을 전담하는 시설과 치매안심센터 및 안심요양병원 대상으로 자연친화적 치유 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4)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서비스 제공

- (관련 부서)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과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는 복지여성보건국의 건강증진과 등으로 간추려 진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건강증진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 건강에 관련 내용은 정신건강과 모성건강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서비스 내용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도정 내용을 주로 보면, 주로 고위험 임신부의 건강과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는 성·재생산 건강 증진 관련 내용(피임도구 접근성 제고로 원치 않는 임신 예방, HPV(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 확대, 중년 여성 체육활동 참여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 도모)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 이에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서비스를 체계적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성별차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책 개발 및 인프라 조성 등 여성의 건강지원 확대를 위한 세부내용 구성이 필요하고, 법적 및 제도적으로 추진 근거 기반을 견고하게 마련하여 실시 할 필요 있다.
- 여성의 건강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가 생애주기별에 따라 다름을 인정하며, 건강의 가장 높은 위험을 가진 여성의 필요를 우선순위로 두고, 여성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증진프로그램이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서비스를 체계적 지원하기 위해 전북도 차원의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촘촘하고 세밀한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그 외 생애주기별(여아-청소년-미혼여성-중·장년기여성-노인여성)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지역사회 내 여성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성인지적 관점의 보건사업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여성근로자 중심의 건강지원, 그리고 여성건강 관리를 위한 특화사업 등을 공모 등으로 추진할 필요 있다.
- 무엇보다 여성장애인의 건강 지원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특히 임신·출산 관련 인프라)과 장애여성 건강 지원 서비스 수요 맞춤형 건강 지원 서비스 추진이 필요하다.

〈표 4-24〉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4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2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추진전략 7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4		■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서비스 제공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추진전략	정신건강 및 모자보건 관련 사업 추진
	실행과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거점 1, 시군 1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모자보건사업)
	주요내용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 온라인 자가검진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증진 문화조성사업,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자살예방사업, 모자보건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서비스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북도 차원의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필요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서비스를 체계적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성별차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기초자료 생성과 근거자료를 통한 지원계획 수립 필요 - 생애주기별(여아-청소년-미혼여성-중·장년기여성-노인여성)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지역사회 내 여성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성인지적 관점의 보건사업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등이 필요함 -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인프라 조성 등 여성의 건강지원 확대를 세부 내용 구성이 필요하고, 법적 및 제도적으로 추진 근거 기반을 견고하게 마련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제 4 절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 본 절에서는 3대 정책목표 중 세 번째 목표인 ‘일·생활 균형 기반조성’의 3가지 추진전략별(지역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 신성장동력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조직 생태계 구축) 12개 추진과제를 토대로 전라북도의 2020년과 2021년 부서별 정책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 및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미래 전망을 고려한 전라북도 여성·가족 정책 및 추진 과제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가. 지역 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²⁾

1) 지역 기반의 성평등한 상호 돌봄의 노인 공동체 조성

- (관련 부서) 지역 기반의 성평등한 상호 돌봄의 노인 공동체 조성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복지여성보건국의 노인복지과다. 노인복지과 내 노인복지팀에서 주로 노인돌봄과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사업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의 사업을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전북도 차원에서 노인 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 관련 직접적인 정책과 사업은 노인공동생활가정³⁾(67개)전북도내 총 사업 이외에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외 마을 단위의 노인주민들이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음식과 식사를 하고 여가와 모임 및 만남 등을 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노인들간 지역 기반의 상호 돌봄을 추진하는 노인 공동체 조성 사업을 다소 미흡하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2) 1차년도 연구에서 “지역기반 돌봄 및 디지털 돌봄체계구축”이었으나 여기에서 강조점은 지역기반이고 향후의 돌봄공동체는 디지털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 지역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3) 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상) 로 진입한 전북은 노인 대상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노인 공동체 관련 정책과 사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특히 질병, 빈곤, 고독, 무위의 4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 및 대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고 특히 고독, 외로움, 상실감 등은 모든 노인의 문제의 근원이 되기에 초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고독사 등)가 야기되고 있는 요즘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주거)공동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형태이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인 정책 사업 추진과 더불어 노인(주거)공동체 조성 등을 통해 주거와 생활복지 서비스가 통합된 노인공동체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로 지역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나고 자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노인 및 청장년복합주거 공동체와 같은 고령친화 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이러한 주거공동체는 디지털돌봄체계가 구비된 스마트 돌봄공동체로 조성될 것이다.⁴⁾ 예컨대 치매환자의 위치추적이나 거소지 이탈 감지, 청소나 빨래, 환자의 이동 등 간병자의 돌봄 활동 지원 등에 스마트기술이 접목될 수 있고 고령자의 약복용시간이나 식사여부 알림, 움직임 감지, 욕실이나 현관으로의 이동 보조 등 기본적인 돌봄 지원과 가스안전점검, 외부인 침입,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감지 모니터링 등 주거환경관리 등이 통합된 디지털 돌봄 플랫폼이 지역기반 돌봄시스템에 접목될 필요가 있겠다.

4) 1차년도에는 ‘디지털 돌봄의 일상화’를 별도의 세부추진과제로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과제 진행과정에서 돌봄은 돌봄수요자의 관점에서의 세밀함이 필요하고 지역기반의 통합 돌봄공동체 조성이 선제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시각에서 디지털돌봄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지역기반의 성평등한 상호 돌봄 노인 공동체 조성 부분에서 디지털 돌봄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표 4-25〉 추진전략별 전복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지역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 1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추진전략 8		지역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
추진과제 1		■ 지역기반의 성평등한 상호 돌봄의 노인 공동체 조성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추진전략	노인 맞춤형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실행과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강화, 수요자 중심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초수급, 차상위 등),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노인공동생활가정 67개 운영 지원, 경로당(마을회관 등) 중심 생활공동체 지원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전북은 노인 대상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노인 공동체 관련 정책과 사업은 부족,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주거)공동체의 필요성 대두 - 지역 및 마을단위 노인공동체 형성 필요 강화. 더 나아가 노인주거공동체 혹은 노인 및 청장년공동주거공동체 설립 필요 - 공동주거공동체는 디지털돌봄체계가 구비된 스마트 돌봄공동체로 조성 필요 - 노인 인구 증가로 지역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나고 자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고령친화 공동체 구축이 절실 - 지역사례 : 경기도 성남시 1곳, 수원 광교 신도시, 울산시 동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동주거시설 설치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2) 독거 및 여성 노인의 생활과 여가 지원

- (관련 부서) 독거 및 여성 노인의 생활과 여가 지원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는 복지여성보건국의 노인복지과가 중심이며 그 외 여성청소년과가 이에 해당된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독거노인과 여성노인의 생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사업,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등)가 실시되고

있고 있으나 대상이 취약노인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의 여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는 전북 도내에는 경로당(6,801개)별로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및 행사지원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 노인 여가 및 독거노인 대상의 관련 전북 도 차원의 조례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조례 등이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먼저 독거노인의 긴급상황 대비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의 관심 제고 등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및 강화를 통한 독거노인 생활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 확대가 필요하고 독거노인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계와 연계 및 소규모 모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통합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부류의 독거노인의 다양성에 맞춘 생활대응을 위해서는 도시 거주와 농어촌지역 거주별로 나눠 맞춤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경제적 상태에 따라 그리고 건강 양호도에 따른 다차원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 다음으로 전북도 노인복지과에서 다양한 노인 여가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한편, 여성노인의 생활과 여가지원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과와 여성정책과의 행정부서간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조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노인 대부분의 여가시간과 활동은 TV시청으로 나타나, 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노인여가시설의 대표인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여가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성노인들이 어떠한 여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 즉 노인 여가활동에 대한 질적 제고를 위해 그리고 보다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적극적이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장기적으로는 여성 및 여성노인 1인가구의 상호돌봄이 가능한 돌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주택 조성이 요청된다.

〈표 4-26〉 추진전략별 전복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지역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 2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추진전략 8		지역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
추진과제 2		■ 독거 및 여성 노인의 생활과 여가 지원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추진전략	노인 맞춤형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실행과제	품위 있는 삶과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강화, 수요자 중심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활기찬 노인 여가 문화 공간 조성
	주요내용	-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경로식당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실시 - 보건복지부 실시하는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 초기독거 노인 대상 안전지원, 사회참여와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제공 -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6,801개 지원(국/도비로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 지원), 노인복지관(도1, 시군위탁 22, 시군 직영 2, 총 25개), 노인복지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운영, 맞춤 운동처방 등, 노인복지시설 행사지원(3개 단체, 노인 참여 행사 등)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독거노인 긴급상황 대비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 관심 제고 유도과 지역공동체 조성 및 강화 필요, 독거노인 지역사회와의 통합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계 및 소규모 모임 활성화 필요. 독거노인의 다양성에 맞춘 생활 대응의 맞춤 전략 마련 필요 - 노인 여가 지원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성별 특성을 분리하여 추진 미흡, 여성노인의 생활과 여가 지원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과와 여성정책과 간의 행정부서간 유기적 협조 필요. 독거 및 여성 노인 중심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 필요. 노인여가시설의 대표인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이려한 공간 중심으로 여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필요.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독거와 여성노인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 필요 - 여성 독거노인의 상호돌봄이 가능한 공동주택 조성이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3) 지역 기반의 성평등 한 아동 돌봄 체계 구축

- (관련 부서) 지역기반의 성평등한 아동돌봄 체계 구축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는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청소년과로 간추려 진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의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부서의 아동 돌봄 관련 정책 및 관련 세부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추진전략 돌봄 공적책임 강화 하에 맞춤형 양육 및 아동돌봄 환경조성이란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여성권익팀에서는 전북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5개소를 관리하면서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활성화를 위해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돌봄공동체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총 75백만원 지원 받아 아동돌봄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팀은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25개소 운영하고 있다. 아동보호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286개소 운영,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적 돌봄정책 중 하나인 다함께돌봄사업은 현재 26개소 운영 중이며 향후 46개소까지 국비 지원 받을 예정이다. 그 외 복지부의 국비 지원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남원과 부안 2개소 선정,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제 돌봄 지원의 시간도 120시간 확대(연 720시간→ 연 840시간) 되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전북도의 아동돌봄정책 및 사업 대부분은 중앙 부처별 추진 중인 공적 돌봄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 아동돌봄공동체 공모사업, 방과후아카데미,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방과후돌봄공동체 등으로 중앙에서 실시하는 돌봄 정책 이외 전북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전북차원의 아동 돌봄 정책 및 사업은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더 나아가 전북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전북도 차원의 아동 돌봄 정책과 사업 및 관련 통합체계구축은 더욱 미흡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 FGI 조사 결과, 전북지역 아동돌봄의 문제는 민간과 공적영역(부처별 정책과 사업)이 혼재되어 있고, 아동 돌봄 지원 체계가 복잡하고 제한이 크며, 공적 돌봄 정책과 사업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와 틈새는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 따라서 전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 기반의 통합적인 돌봄(공

동체) 체계의 구축 및 돌봄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행복한 돌봄 사회 조성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동돌봄이 가능한 시설과 공동체 함양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지원이 요청된다.

〈표 4-27〉 추진전략별 전복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지역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 3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추진전략 8		지역 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
추진과제 3		■ 지역 기반의 성평등한 아동돌봄 체계 구축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여성권익팀, 청소년팀, 아동보호팀)
	추진전략	돌봄 공적책임 강화
	실행과제	맞춤형 양육 및 아동 돌봄 환경조성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활성화 지원, 지역 맞춤형 다함께 돌봄 사업 등)
	주요내용	- (여성권익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광역거점, 14개 시군 제공기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19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 돌봄공동체 2개(75백만원) - (청소년팀)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방과후아카데미 25개(4,004백만원) - (아동보호팀) 지역아동센터 운영(286개, 30,578백만원), 다함께돌봄사업(46개, 3,106백만원)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전북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전북도 차원의 아동돌봄정책과 사업 및 관련 통합 체계 구축 미흡 - 민간과 공적영역(부처별 정책과 사업)의 돌봄정책과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돌봄지원체계가 복잡하고 제한적임 - 공적 돌봄정책과 사업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역 내 아동돌봄의 사각지대와 틈새는 여전히 큼 - 전북 특성 반영한 지역기반의 통합적인 돌봄(공동체)정책/사업 활성화와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및 관련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공동돌봄시설, 공동체함양 교육이나 프로그램 지원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 또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의 한계와 농촌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공동체적 돌봄 사업 개발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돌봄 정책과 사업 및 기관간의 중복을 없애고 질 제고를 위해 통합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자체 수준에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급을 재량껏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돌봄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나.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1)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 (관련 부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서는 일자리 경제본부의 일자리경제정책관, 투자금융과, 기업지원과, 사회적 경제과에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는 투자금융과의 기업유치와 연결된다. 다른 부서로는 혁신성장산업국의 신사업기획팀과 연관된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일자리 경제본부는 투자금융 분야에서, '전략산업 가치사슬 강화'라는 추진전략 하에 '미래성장산업 핵심기업 유치' 및 '투자협약 기업 조기 안착 지원' 사업을 실행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의 투자 유치를 확대를 통해 전략산업의 가치사슬 강화와 산업 혁신 생태계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고, 그와 동시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연계된 도의 전략산업 연관기관을 집중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러한 다양한 산업 유치와 연관되어, 국내·외 기업이 타 시도에서 이전하거나 혹은 도내에 신·증설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기업에 대해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여, 투자 협약 기업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이러한 미래의 일자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 산업을 유치와 확대를 위한 방안만으로는, 실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성별, 계층, 세대의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미래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고용의 다양성을 보장함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다.
-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ESG※ 경영 윤리 실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중앙정부를 비롯, 지방정부와 민간영역인 사회와 기업도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미래산업분야에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4차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북여성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최근 지속가능성장 SDGs를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기업 평가의 요소이며, 최근 성평등에 주목하여, 젠더이슈를 재무 분석에 통합하여 투자결정을 개선하고, 여성의 기회와 고용의 불공정함을 개선한 한 '젠더관점투자' 역시 주목받고 있음

- 다른 측면에서는 2050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전환의 문제가 여성 실업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탄소배출이 많은 사업 종사하는 5명중 1명이 여성, 청년이었고, 비정규직이 1/3에 다라고 있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와 동시에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4-28〉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 신성장동력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1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추진전략 9	신성장동력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추진과제 1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구분		세부내용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일자리경제본부 투자금융과
	추진전략	전략산업 가치사슬 강화
	실행과제	미래성장산업 핵심기업 유치 및 투자협약 기업 조기 안착지원
	주요내용	- 미래성장동력산업 투자유치 확대로 전략산업 가치사슬 강화 - 산업단지 중심의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산단 경쟁력 강화 - 도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 - 주력산업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핵심기업 유치 확대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미래의 일자리를 구상에 있어 일자리 전반에 대한 접근으로는 실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에게 미래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움. 여성미래 일자리를 위해 전북여성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성별, 계층, 세대별 다양한 구성이 미래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요청 - 기업의 ESG※ 경영 윤리 실현에 대해 요구하고 동시에 그를 위한 지원책을 통해 기업도, 사회도, 정부도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전환과정에서의 여성 실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2)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와 제도 조성

- (관련 부서)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인 일·생활 균형 문화와 제도는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와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청소년과의 사업을 통해 조성될 수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에서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경쟁력을 가지고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을 실행한다.

- 이 사업을 통해,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지원, 환경개선사업, 지역 강소기업 육성, 유명 중소기업 발굴 육성 등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매출 향상과 고용 확대를 이루어자 한다.
- 특히,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복지편익 증진과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가 행복한 기업을 만들고자 한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이러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통한, 체육·여가시설, 보건위생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 환풍·집진시설 등의 근로환경 개선사업, 근로자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의 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 유지 및 확대를 목표로 하는 방안은 노동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적절하고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의 접근성과 보건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 등이 확대 추진되어야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요청된다.
- 또한, 중소기업 성평등 인사관리 지원 및 전라북도 성평등 기업조례 제정 등의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 감독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표 4-29〉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 신성장동력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2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추진전략 9		신성장동력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추진과제 2		■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와 제도 조성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추진전략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실행과제	지방중소기업육성 종합 기획·조정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주요내용	- 수요자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 -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복지편익, 근로환경 개선)

구분	세부내용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체육·여가시설, 보건위생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 환풍·집진시설 등의 근로환경 개선사업, 근로자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의 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 유지 및 확대를 목표로 하는 방안은 적절 -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의 접근성과 보건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이 확대 추진되어야 여성 노동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요청 - 중소기업 성평등 인사관리 지원 및 전라북도 성평등 기업조례 제정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3) 여성 취·창업 역량강화와 여성친화적 생태계 조성

- (관련 부서)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역량강화와 여성친화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은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을 살펴 볼 수 있다.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광역 및 시군의 새일센터, 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경력단절 여성에게 제공하기 위해 직업 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구인과 구직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과, 맞춤형 직업훈련교육과정을 통한 상용일자리 창출, 지업체 정규직 정착을 위한 인턴 지원사업 등을 취업 확대를 위해 진행하고, 기업의 환경과 문화 개선을 위해서 여성친화기업 등의 환경개선사업과 여성 취업 인식전환 교육 등이 진행된다.
- 동시에,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과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복지여성보건국의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

원과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큰 성과를 보고 있지만, 복지여성보건국만의 사업이 아닌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정책관 사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여성 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 특히, 여성일자리 확대에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와 고용 지속을 위한 사업의 확대 역시 필요하다.
- 또한 성평등 노동인식 개선 및 성차별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넘어 기업체가 성별임금공시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표 4-30〉 추진전략별 전복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 신성장동력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3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추진전략 9		신성장동력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추진과제 3		■ 여성 취·창업 역량강화와 여성친화적 생태계 조성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추진전략	돌봄 공적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실행과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 여성의 역량강화 및 성평등 문화확산)
	주요내용	- 새일센터 구인↔구직상담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여성단체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 - 성차별 개선 등을 통한 일상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과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복지여성보건국만의 사업이 아닌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의 사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여성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이 요청 - 특히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와 고용 지속을 위한 청년여성 취창업 생태계조성사업 필요 - 성별임금공시제도 등을 통해 성평등 노동 인식 개선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4) 평등한 일터, 능동적 노동권 확보

- (관련 부서) 능동적 노동권 확보를 위한 부서는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을 살펴볼 수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화합하는 노사문화 정착은 좋은 일터를 만들고, 동시에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끄는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이를 위한 ‘노사정 협력체계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이 사업에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 모범 사업상 선정, 전라북도 생활임금 확정 등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 해소를 위해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고충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여성비정규직 노동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나, 돌봄노동자에 대한 연구와 같이 노동 취약계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감정노동자, 여성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고충상담 지원 등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성평등한 노동 행정체계가 추진되었으면 한다.
- 노동자 권익개선을 위한 사업의 확대 적용을 통해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과 재원이 확대되어서, 노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노동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노동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확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방안 발굴이 요청된다.

〈표 4-31〉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 신성장동력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4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추진전략 9		신성장동력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추진과제 4		■ 평등한 일터, 능동적 노동권 확보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추진전략	노사민정 협력강화
	실행과제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사업 추진 〈고용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협력체계 강화〉
	주요내용	-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으로 갈등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반 마련 -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좋은 일터 만들기 확산 및 지역경제 성장 견인 -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에 높은 평가가 가능 - 특히, 여성비정규직 노동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와 같이 비정규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필요함 - 노동자 권익개선을 위한 사업의 확대 적용을 통해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과 재원이 요청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다. 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1) 권역별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조직 마련

-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태계 구축 및 성장을 위한 사업들은 일 자리경제본부의 사회적 경제과에서 추진 중에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구축’이라는 추진전략을 세우고, 지역·민간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을 강화하고, 판로의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이를 위해, 민·관 협의체 운영, 시·군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 우선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사회적 경제기금 조성, 공정무역의 활성화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 사업은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 사회적경제 기업,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원은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회적경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시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족적 체계를 통한 대안의 가능성을 보인 모범 사례가 전북을 비롯, 타 지역에서도 많이 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청된다.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경제가 지원을 넘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전북 현실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확대가 요청된다. 중간지원조직은 성인지감수성이 풍부하고 여성친화적인 특성을 구비하여 여성 주민들의 접근성과

참여가 용이하도록 한다. 기존의 마을만들기사업, 사회적경제사업, 도시 재생사업 등 사회적경제와 이념과 맥락이 유사한 사업들의 조직과의 역할 관계를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

-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인 성장만이 아닌, 농촌지역의 공동체가 기대고 있는 가족 내 젠더 규범이 여성 노동을 비가시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여성이 사회적경제 공동체에 실질적 참여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표 4-32〉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1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추진전략 10		사회적 경제조직 생태계 구축
추진과제 1		■ 권역별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조직 마련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사회적경제과
	추진전략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구축
	실행과제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
	주요내용	-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 사회적경제기업,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군 중간지원조직 지원 -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사 -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회적경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족적 체계를 통한 대안의 가능성을 보인 사례가 등장하여, 이에 대한 확대가 요청됨 -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 -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이를 고려한 여성친화적인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확대가 요청 - 사회적경제와 맥락이 유사한 사업들의 조직과의 역할 관계를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운영하는 방안 고려 가능 - 특히, 농촌지역의 공동체가 기대고 있는 가족 내 젠더 규범의 개선과 여성이 사회경제적 공동체에 실제적 참여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기반 육성 필요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2) 여성의 주체적 참여로 다양한 자조, 자활의 소공동체 육성

- (관련 부서) 여성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관련 사업은 일자리경제본부 사회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라는 추진전략 아래 진행되는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사업과 ‘전북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과제는 자본 사정이 열악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기자재 등 필요한 인프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기자재와 설비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 ‘전북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 과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역시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전략 및 성공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지원하고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파악된다.
- 사회적경제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서의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동시에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가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 사회적 경제분야는 여성수요가 많으므로 참여하는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경제 영역 중 여성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교육, 돌봄, 복지 등의 분야를 살펴보면, 열악한 급여와 고용 불안으로 생계형 돈벌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여성들의 참여로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어서, 사회적경제

조직구성원에 대한 급여 개선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선책 마련,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책이 필요하다.

〈표 4-33〉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2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추진전략 10		사회적 경제조직 생태계 구축
추진과제 2		■ 여성의 주체적 참여로 다양한 자조, 자활의 소공동체 육성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사회경제과
	추진전략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실행과제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전북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
	주요내용	- 자본 사정이 열악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기자재 등 필요한 인프라 지원 -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촉진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 - 사회적경제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다양한 기업들에서의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가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 - 사회적 경제 참여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교육 확대 - 사회적경제 조직구성원에 대한 급여 개선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선책 마련,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책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3) 마을 중심 경제 생태계 지원

- (관련 부서) 마을 중심의 경제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는 일자리경제본부 사회경제과에서 주로 관련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협동공동체 육성’이라는 추진전략을 가지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마을기업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마케팅 등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을 통하여 시장경쟁력 확보와 마을기업 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 온오프라인 마을기업 판로지원을 통해, 교육·컨설팅·마케팅 지원을 통한 효과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진행 중에 있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정의되며, 지역자원, 지역문제,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에 대한 기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은 마을의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하는 곳이다.

〈표 4-34〉 마을기업 관련 용어들의 정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sub/a06/b06/village/screen.do>

- 마을기업의 자립역량 강화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과 동시에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제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이 때의 마을공동체는 생활권(읍·면) 단위로 확대하여, 기존 농촌마을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농촌지역 경우 여성 고령인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을 통해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마을 공동체의 지렛대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표 4-35〉 추진전략별 전복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3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추진전략 10		사회적 경제조직 생태계 구축
추진과제 3		■ 마을 중심 경제 생태계 지원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사회경제과
	추진전략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협동공동체 육성
	실행과제	마을기업 육성 지원
	주요내용	- 마을기업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마케팅 등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시장경쟁력 확보와 마을기업 공동체 활성화 유도 온오프라인 마을기업 판로지원
향후 과제 및 개선안	개선방안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지역자원, 지역문제,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에 대한 기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은 마을의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 - 마을기업의 자립역량 강화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제안 추가 필요 - 마을공동체 범위에 대한 읍면 생활권 단위까지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 -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지역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와 지원 확대 및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여성친화적 마을기업의 육성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sub/a06/b06/village/screen.do>

4) 전북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

- (관련 부서) 전북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관련 부서는 일자리경제본부 사회경제과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전담으로 수행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통합적 관리 및 기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부서별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검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의 추진전략 하에, ‘전북형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사업과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한 유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공유기업·단체 발굴 지원 등 공유경제 활성화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공유자원 추가 발굴 등록 및 홍보콘텐츠 제작이나,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
-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 사업'에서는 지역주민 간 공유와 소통을 통해,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유도하고자 한다.
- (정책 검토·진단 및 개선 방향) 공유경제 활성화 노력은 전북형 사회적경제 모델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온라인 사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전북형 모델의 정의, 특성 분석이나 발전 방안이 있어, 지역, 세대, 경제적 조건 등을 넘어서 젠더에 대한 고려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 건전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는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계방안이 중요한데 관계지향적인 여성의 강점이 활용된다면 사회적 경제 시장활성화 및 안정적 성장에 공유경제를 연결하여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 전라북도의 특징과 농업이나 먹거리 분야의 특성에 기반하여 여성들이 적극적인 참여주체가 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이 가능하고,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및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한 양성평등한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 방안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표 4-36〉 추진전략별 전북 도정 분석 및 향후과제 제언: 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4

구분		세부내용
정책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추진전략 10		사회적 경제조직 생태계 구축
추진과제 4		■ 전북형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
전북행정 추진시책	담당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사회경제과
	추진전략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실행과제	전북형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 사업
	주요내용	-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한 유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공유기업·단체 발굴 지원 등 공유경제 활성화 유도 - 공유자원 추가 발굴 등록 및 홍보콘텐츠 제작 -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지역주민간 공유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역 문제 해결 - 유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유도
향후 과제 및 개선안		- 전북형 사회적경제 모델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온라인 사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은 그 의미가 큼 - 전북형 모델의 정의, 특성 분석이나 발전 방안에 있어, 지역, 세대, 경제적 조건 등을 넘어서 젠더에 대한 고려도 추가될 필요 - 농업이나 먹거리 분야에서 여성이 적극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이나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및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한 도농상생의 성평등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 방안 마련 가능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를 참고하여 재구성

5

장

결론

Jeonbuk Institute

-
1. 전북 도민이 희망하는 미래상
 2. 전북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실천방안
 3. 전북 여성·가족 미래비전 중점과제

제5장 결론

제1절 전북 도민이 희망하는 미래상

- 전북 도민은 풍부한 일자리, 편리한 이동, 일·생활균형 속에 아이키우기 좋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지켜지고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바란직한 미래사회의 상으로 제시하였다. 중요한 가치로서 풍요, 인권과 존엄, 안전을 지목했고, 40~50대와 60대 이상은 풍요로움과 인권 존엄, 소통을 중요시한 반면 20~30대는 ‘안전’을 첫 번째로 꼽아, 세대별 경험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전체적으로 전북 도민들은 경제적 성장의 풍요와 함께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권과 존엄, 안전이 보장되고 소통이 원활한 지역사회에 대한 희망은 경제적 발전에 따른 풍요와 함께 인권, 존엄, 안전이 보장되는 상생의 지역사회에 대한 요청이 큰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전반적인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나 여성친화적인 지역사회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 돌봄과 관련, 보육시설의 확충, 육아공동체, 자녀양육지원 확대 요구 및 자녀와의 놀이, 문화체험에 대한 공간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미래에 전라북도가 당면할 문제로는 인구감소를 가장 큰 문제로 보았으며, 저출산/고령화, 환경오염/기후변화, 지방소멸,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청년여성들의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요구가 매우 높았는데 취·창업생태계 조성과 안전한 주거공간 지원 요청이 컸다. 여성이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및 소득과 의료/교통권 강화와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타파가 요청된다. 농촌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농가공동경영제도 등록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여성 소득 확대를 위한 지역 특화 일자리 확충,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이 요구된다.

-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욕구가 높아 직업훈련 기회와 고용서비스 강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육아휴직, 출산휴가확대, 유연근무제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의 일·생활균형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미래 일자리 창출은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산업, 스마트 농생명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전북 도민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노후는 이웃과의 소통이 활발한 마을공동체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노후 환경으로서 지역 네트워크에 기반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거주(Ageing in Place)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연령별로는 20~30대, 40~50대는 이웃과 활발한 네트워크가 구성된 마을공동체를 가장 이상적인 노후 돌봄 환경으로 인식한 반면, 노후가 현실로 닥친 60대 이상에겐 고령자를 위한 질 좋은 케어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돌봄 공급의 체계가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혼재되어 너무 복잡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함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전략이 요청된다.

제2절 전북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실천방안

- 전라북도농은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 디지털 혁명과 코로나 위기 등의 사회적 변화 현상으로 가치관과 관계의 변화, 노동과 돌봄 방식의 변화 등 삶의 양식 자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전라북도 여성의 역량과 역할의 확장 및 사회적 인식 확대로 연결되고 이는 사회전반의 성인지성 제고와 성평등에 대한 요구의 증대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여성 및 가족 분야 변화를 중심으로 전북도정의 전반적 영역을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분석하여 1차년도에는 여성·가족분야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미래비전 목표달성을 위해 각 부서의 정책개선

방안 및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 1차년도에서는 3대 정책 목표와 10대 추진 전략이 도출되었고, 2차년도 본 연구에서는 3대 정책목표, 10대 추진전략에 따른 각 부서의 2021년도 업무 계획 자료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한 후 추진전략별 개선 방안과 향후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 3대 정책목표 및 10대 추진과제별에 따른 향후 세부 실천 방안들 가운데 성주류화관점에서 중요한 제안들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5-1〉 목표 1.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전략별 추진과제 및 향후과제

목표	추진전략 방향	추진 과제	세부/ 주요 실천 과제 (안)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여성정책과 여성역량강화	■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성평등정책을 총괄, 추동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성평등정책관 신설) 필요와 성평등정책 실질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구성과 정례적 운영
		■ 여성대표성 적극적 확대	- 지역 내 여성단체의 여성들이 정치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훈련과 교육 지속 지원으로 여성후보 적극 발굴 및 여성정치인의 산실로 작용해야 함
		■ 여성인재 DB구축과 활성화	- DB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수집·관리 및 인재 발굴을 확대를 위해 전복도와 각 시군의 「전북 여성인재 DB구축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필요 - 구축된 여성인재 DB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속 필요(업무 담당자 지정,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정보 업데이트 등으로 여성인재 이탈 방지 등)
	성인지적인 문화예술, 관광거점 육성	■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성평등 환경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주요 권고사항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 필요
		■ 성인지적 생태환경 및 농어촌체험 관광	- 생태관광, 농어촌체험관광의 성인지적 기획과 여성친화적 일자리 육성 필요 - ‘성평등 마을 규약만들기’, ‘성평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남성중심 마을/문화 모니터링을 통한 성평등 콘텐츠 발굴’ 등의 사업 수행 요청
		■ 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사업’과 같이, 성평등 관점의 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방안 마련 필요, 기존의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 필요
	성평등 가족문화와 다양한 가족지원	■ 농산어촌의 성평등 문화 확산	- 마을 이장 및 농민 교육의 필수과정으로 성평등 교육 추가와 농업 관련 성별통계 생성 - 여성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동주택 등 안전한 주거 제공 필요
		■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	-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 서비스 확대와 가족센터를 통한 성평등 가족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단체의 가족문화 프로그램 확장 운영 지원
	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 생애주기에 따른 성평등 교육의 정착	- 전복의 구성원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르신절부터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체화할 수 있는 교육 요청,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업 필요
		■ 남성대상 성평등 교육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세대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을 통해, 가족 문화 변화를 위한 사업 확대 필요, 직장의 보수교육, 시민교육 등을 적극 활용 - 전북형 남성 성평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성인지적 디지털 인프라구축 및 성평등 콘텐츠 구축	- 농어민 고령자 등의 디지털 활용 역량 부족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이용 교육 활성화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필요

〈표5-2〉 목표 2. 인권 존중의 안심 공동체-전략별 추진과제 및 향후과제

목표	추진전략 방향	추진 과제	세부 실천 과제(안)
인권 존중의 안심 공동체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안전 증진	- 인권담당부서와 타 행정체계간의 협력(담당부서와 인력배치 등) 필요 - 고령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위한 인권교육의 확대필요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폭력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세와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와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 관리가 필요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전담기구 필요 - 학대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확대와 피해 이후 사후관리 강화
		■여성 및 사회적 약자 친화적 디지털 안전시스템	- 전북차원의 여성·사회적 약자 친화적 디지털 안전시스템 운영은 노인 대상 AI·IoT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이외 거의 부재한 상황, 디지털안전시스템구축과 예산의 확충 필요
		■여성 친화적, 고령자 친화적 공간 조성	- 여성/고령 1인가구 비율 증가에 따라 주거/범죄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안전시설 설치 필요, 여성 및 가족친화적 공간 및 고령친화적 공간의 조성 필요
	아동·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아동청소년 참여와 권리 실현 기반 조성	- 전북 저출산심화 대응 아동·청소년의 참여 및 아동권리 취약부문의 법적·제도적 및 관련 사업 확대와 기반강화 필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필요
		■지역특성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아동청소년재단 등) 설립 필요.하고 아동 및 청소년정책에 전문성 있는 전담 공무원 배치 필요
		■발달 단계별 맞춤형 심신 건강관리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의 정신건강 및 정서행동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주기적인 실태 통계자료와 정신건강 관련 전문적 치료서비스제공 필요
		■지역차원의 놀이 혁신 정책 추진	- 아동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마련 및 놀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연령별·특성별 놀이 공간 조성 마련 및 확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 보건 시스템 구축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지원	- 여성·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례에 여성과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내용 보장 필요 -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측정하는 정기적 실태조사로 데이터 구축 및 정보제공 기능 필요, - 자료 구축 및 예산 편성,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추진 근간이 될 중장기정책 수립 필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공공 의료 구축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 의료지원서비스 조사로 서비스 지원과 사회적 약자 발굴 필요, 공공의료 서비스 확장 및 고도화 필요
		■장애아동·치매노인 위한 자연친화적 치유공간 조성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공모사업 연계 치유 공간 및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서비스 제공	- 전북차원의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생애주기별(여아-청소년-미혼여성-중·장년여성-노인여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표5-3〉 목표 3.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전략별 추진과제 및 향후과제

목표	추진전략 방향	추진 과제	세부 실천 과제(안)
일· 생활 균형 기반 조성	지역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	■ 지역기반 성평등 한 상호돌봄 노인 공동체 조성	- 지역 및 마을단위 노인공동체 형성 기반으로서 노인주거공동체 혹은 노인 및 청장년 공동주거공동체 설립 필요, 주거공동체는 디지털돌봄체계가 구비된 스마트 돌봄공동체로 조성 필요
		■ 독거 및 여성 노인의 생활 및 여가 지원	- 독거노인 지역사회와의 통합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계 및 소규모 모임 활성화 필요 - 독거 및 여성 노인 중심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여성독거노인의 상호돌봄이 가능한 돌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주택 조성 필요
		■ 지역기반의 성평등 한 아동 돌봄 체계 구축	- 지역기반의 통합적인 돌봄(공동체)정책/사업 활성화와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및 관련 지원이 필요 -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위해 공동돌봄이 가능한 시설과 공동체 함양 교육이나 프로그램 지원 필요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	- 성별, 계층, 세대별 다양한 주체들이 미래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과 기업의 고용다양성 위한 인센티브 제도 필요 - 4차 산업 특성 반영하는 전북 여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와 제도 조성	- 중소기업 성평등 인사관리 지원 및 전라북도 성평등 기업 조례 제정 필요
		■ 여성 취창업 역량강화와 여성친화적 생태계 조성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과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이 복지여성보건국만의 사업이 아닌 일자리 경제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여성고용 확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 요청 - 청년 여성 일자리 및 취업지원 강화 위한 청년여성 취·창업 생태계조성 필요 - 성별임금공시제도 등을 통해 성평등 노동인식 개선 필요
		■ 평등한 일터, 능동적 노동권 확보	- 성평등 일자리 및 노동을 전담하는 행정추진체계 필요 - 여성비정규직 노동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와 같이 비정규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연구 필요,
	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 권역별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조직 마련	-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조직의 여성친화적 구성 및 농촌지역 공동체의 가족 내 젠더 규범 개선을 통해 여성이 사회적 경제 공동체에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육성 필요
		■ 여성 주체적 참여로 다양한 자조, 자활의 소공동체 육성	- 사회적 경제 조직구성원 급여개선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선책 마련 및 제도적 장치와 지원책 필요 - 여성 사회적 경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교육 실시와 기반 확충
		■ 마을 중심 경제 생태계 지원	-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지역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와 지원 확대 및 여성 참여 활성화 방안 -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여성친화적 마을기업 육성
		■ 전북형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	- 전북형 모델 정의, 지역, 세대, 경제적 조건 등을 넘어서 젠더에 대한 고려 추가 필요 - 도농상생의 성평등한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

제 3 절 전북 여성·가족 미래비전 중점과제

-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천과제들 중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의 주요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 3대 정책목표별 10대 추진 전략에서 여성정책과 여성역량 강화 추진 전략은 전북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추진 기반의 근간이 되는 만큼 2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고, 나머지 추진전략에서는 각 1개의 과제를 주요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표5-4〉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I)의 중점 과제

목표	추진전략	필수 과제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1. 여성정책과 여성역량 강화	1-1. 성평등정책관 도청 행정 추진 부서 조직 개편 1-2.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2. 성인지적 문화예술, 관광 거점 육성	2-1. 성평등 마을 규약 만들기
	3.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과 다양한 가족지원	3-1. 이장 및 농민 교육의 필수과정으로 성평등 교육 추가
	4. 성평등 교육 혁신과 문화 확산	4-1. 전북형 남성 성평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5.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5-1. 취약계층 특성 반영한 디지털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6. 아동·청소년 성장기반 구축	6-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7.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보건의 시스템 구축	7-1. 여성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중장기정책 수립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8. 지역기반의 스마트 돌봄 공동체 ⁵⁾	8-1. 전북형 지역기반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운영
	9. 신성장 동력 산업의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9-1. 청년여성 취·창업 생태계조성 및 4차 산업 특성 반영 전북 여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필요
	10. 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구축	10-1. 도농상생의 성평등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

- 3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 정책목표인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에 기반 한 4가지 추진전략별 실천 과제들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중점과제는 전북도

5) 1차년도 연구에서 “지역기반 돌봄 및 디지털 돌봄체계구축”이었으나 여기에서 강조점은 지역기반이고 향후의 돌봄공동체는 디지털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 지역기반의 스마트 돌봄공동체로 용어를 수정하고 디지털 돌봄에 관한 내용을 지역기반 상호돌봄의 노인공동체 구성에 통합하였다.

청 행정 추진 부서 내 행정부지사 직속 산하에 ‘성평등정책관’ 부서를 신설하는 것과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성평등 마을규약 만들기’, ‘이장 및 농민교육 필수과정으로 성평등교육 실시’, 그리고 ‘전북형 남성 성평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이 선정되었다. 무엇보다 전북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 내용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 기반이면서 추진 체계가 될 성평등정책관의 신설과 그에 맞는 조직 개편,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선정된 중점 과제 추진을 통해 전라북도의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문화 조성 제고를 기대하고자 했다.

- 두 번째 정책목표인 ‘인권 존중의 안심 공동체’에서 3가지 추진전략별 실천 과제들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취약계층 특성 반영한 디지털 안전시스템 구축·운영’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중장기정책 수립’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중점과제들의 추진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과 여성·사회적 약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 마지막 정책목표인 ‘일·생활균형 기반 조성’에 기반 한 3가지 추진전략별 실천과제들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전북형 지역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운영’과 4차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청년여성 취·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북 여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도·농상생의 성평등한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확산’을 선정하였다. 이상 선정된 중점과제들의 추진을 통해 전라북도의 일·생활균형 제고와 성평등한 여성고용 및 노동정책의 추진 강화를 꾀하고자 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이수인 외(2020), 전북 여성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북연구원
- 이수인 외(2020),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
- 이주연 외(2020), 전라북도 청소년정책 수요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이주연 외(2021), 전북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전북연구원
- 전라북도(2013),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 전라북도(2019),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보고서
- 전라북도(2020),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안)
- 전라북도(202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 전희진,전아람(2020) 전북지역 가족 성평등 실태와 성인지성 개선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조경옥,전아람(2020a), 2020 전북 성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전북여성의 삶, 전북연구원
- 조경옥,전아람(2020b), 전라북도 청년여성의 취업준비 실태와 정책 지원 방안. 전북연구원
- 조경옥,전아람(2021),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기획연구 2021-03

전라북도 2030 여성 · 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II)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1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46-9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